

A Study on the present states and Activation of the
Community Autonomy in Goyang City

고양시 자치공동체의 실태 및 활성화 연구

전성훈
오은지

A Study on the present states and Activation of the Community Autonomy
in Goyang City

고양시 자치공동체의 실태 및 활성화 연구

연구책임자

전성훈(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오은지(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발행일 2019년 11월 30일

저자 전성훈, 오은지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47-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고양시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3절 연구의 체계	11
제2장 자치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3
제1절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 논의	15
제2절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에 대한 논의	2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6
제3장 고양시 자치공동체 현황 분석	33
제1절 고양시 자치공동체 현황	35
제2절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 정책 현황	50
제3절 행정동별 특성분석 및 지역유형화	67
제4절 자치공동체 SWOT분석	74
제5절 소결	78
제4장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분석	81
제1절 중앙정부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83
제2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124

제3절 경기도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144
제4절 소결	158
제5장 자치공동체에 대한 시민인식 실태조사	171
제1절 조사 설계	173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176
제3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178
제4절 심층면접(FGI) 분석 결과	208
제6장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 제언	219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221
제2절 정책 제언	226
참고문헌	231
부록	235
Abstract	259

표 목차

[표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표 2-1] 지역(마을)공동체의 개념정리	18
[표 2-2]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개념	23
[표 2-3] 지역(마을)공동체 선행연구(학술연구)	28
[표 2-4] 지역(마을)공동체 선행연구(정책연구)	30
[표 3-1] 고양시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체계	36
[표 3-2] 고양시 주민자치위원 현황(2018년 12월: 주민자치회 포함)	37
[표 3-3] 고양시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2019년 4월 현재)	38
[표 3-4]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	39
[표 3-5]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18년 12월)	40
[표 3-6]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현황(2018년 12월)	41
[표 3-7]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활동 유형(2018년)	42
[표 3-8]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관심 유형(2018년)	43
[표 3-9] 고양시의 주민자치위원회 협력 단체 현황(2018년)	44
[표 3-10] 고양시 관내 마을공동체의 일반구별 현황(2019년 기준)	47
[표 3-11] 고양시 관내 마을공동체의 활동분야별 현황(2019년 기준)	47
[표 3-12] 고양시 관내 마을공동체의 일반구별·활동분야별 현황(2019년 기준)	48
[표 3-13]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추진체계	51
[표 3-14]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규모 현황(덕양구)	53
[표 3-15]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규모 현황(일산동구)	54
[표 3-16]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규모 현황(일산서구)	55
[표 3-17] 연도별 행정동 독자사업 지원 현황	55
[표 3-18]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원 현황	57

[표 3-19] 연도별 공동체 지원 사업 규모	58
[표 3-20]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규모	59
[표 3-21]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씨앗가: 상반기)	60
[표 3-22]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씨앗가: 하반기)	62
[표 3-23]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성장기)	63
[표 3-24]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자립기)	65
[표 3-25]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컨소시엄)	66
[표 3-26]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아파트공동체)	66
[표 3-27] 행정동별 유형화를 위한 분석요인 체계	68
[표 3-28] 요인분석 결과	69
[표 3-29] 워드법을 활용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70
[표 3-30] 군집별 특성분석	72
[표 3-31] 요인분석 결과	73
[표 4-1] 주민자치회 사업 개요	91
[표 4-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비전 및 목표	92
[표 4-3]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비교	95
[표 4-4]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비전 및 목표	98
[표 4-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절차	99
[표 4-6]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100
[표 4-7]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유형별 현황	120
[표 4-8]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주체별 현황	121
[표 4-9] 마을기업 운영현황	122
[표 4-10] 광역자치단체별 자치공동체 관련 조례 현황	124
[표 4-1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비전 및 목표	127

[표 4-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28
[표 4-13]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29
[표 4-1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지원예산 변화 현황	141
[표 4-15]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 예산 변화 현황	142
[표 4-1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 건수 현황	142
[표 4-17] 경기도 따복공동체만들기 사업의 비전 및 목표	144
[표 4-18] 중앙부처의 도시재생 유관사업	158
[표 5-1] 실증조사 체계	174
[표 5-2] 설문조사 조사체계	176
[표 5-3] 심층면접(FGI) 조사체계	177
[표 5-4]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자치공동체 주체)	179
[표 5-5]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181
[표 5-6]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182
[표 5-7]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에 대한 ANOVA(분산) 분석결과	183
[표 5-8] 지역공동체 유형(주민-정부간 관계) 인식	184
[표 5-9] 지역공동체 유형(주도주체) 인식	184
[표 5-10] 지역공동체 유형(구성형태) 인식	185
[표 5-11] 지역공동체 유형(사업성격) 인식	186
[표 5-12] 지역공동체 유형(대상지역) 인식	187
[표 5-13] 지역공동체 유형(사업목적) 인식(중복응답)	187
[표 5-14] 현행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189
[표 5-15] 지역공동체 지원정책 인식 유무	190
[표 5-16] 현행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수준	190
[표 5-17] 지역공동체 활동주체의 역할 수행 수준	192

[표 5-18]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수행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193
[표 5-19]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 수준	194
[표 5-20] 중간지원조직의 추가 수행 기능	195
[표 5-21] 시급히 강화가 필요한 기능(중복응답)	196
[표 5-2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수행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196
[표 5-23]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신뢰)	197
[표 5-24]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호혜적 규범)	198
[표 5-25]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네트워크)	199
[표 5-26] 제도적 개선 요인 및 향후 비전의 세부질문체계	199
[표 5-27]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순위응답)	200
[표 5-28]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수 요건(순위응답)	201
[표 5-29]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체(순위응답)	203
[표 5-30] 지역공동체의 적절한 공간규모(순위응답)	204
[표 5-31] 자치공동체 지원사업별 전담조직 선호(순위응답)	205
[표 5-32] 향후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개방형)	207
[표 5-33] 심층면접(FGI) 응답자 특성	208

그림 목차

[그림 1-1]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구조	4
[그림 1-2] 자치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5
[그림 1-3] 연구의 목적	7
[그림 1-4] 현황 및 실태분석 체계도	11
[그림 2-1] 공동체의 개념구조	16
[그림 2-2] 지역(마을)공동체의 구성요소	20
[그림 2-3] 고양시 자치공동체의 구성요소	25
[그림 3-1] 고양시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소속현황	37
[그림 3-2] 고양시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38
[그림 3-3]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	39
[그림 3-4]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40
[그림 3-5]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현황	41
[그림 3-6]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활동 유형	43
[그림 3-7]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관심 유형	44
[그림 3-8] 고양시의 주민자치위원회 협력 단체 현황	46
[그림 3-9] 자치공동체 만들기 추진체계	52
[그림 3-10] 연도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이	58
[그림 3-11] 워드연결법을 사용한 덴드로그램	71
[그림 3-12] SWOT 매트릭스(Martix) 분석 모형	74
[그림 3-13] 고양시 자치공동체 관련 비전체계	76
[그림 3-14] 고양시 지역공동체 SWOT분석 결과	77
[그림 4-1] 현행 자치공동체 지원체계의 특징	89
[그림 4-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로드맵	93

[그림 4-3] 주민자치회 모형	102
[그림 4-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체계	104
[그림 4-5]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읍·동 모형	105
[그림 4-6]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면 모형	106
[그림 4-7] 도시재생 지원체계	107
[그림 4-8] 도시재생지원기구의 목적 및 기능	109
[그림 4-9] 마을기업 사업 추진절차	115
[그림 4-10] 충청북도 마을지원센터 구상	133
[그림 4-11] 지역기반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	134
[그림 4-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	135
[그림 4-13] 서울특별시 공동체자원 구조	136
[그림 4-14] 서울특별시 지역기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체계	136
[그림 4-15]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재정지원 체계	137
[그림 4-16] 서울특별시 정책전문가 양성 체계	137
[그림 4-17] 서울특별시 공동체공간 통합플랫폼 체계	139
[그림 4-18]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단계별 마을사업 선정 건수의 증감 추이	143
[그림 5-1] 현황 및 실태분석 체계	175

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공동체(마을자치) 활성화 채택

- 현 정부는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초한 자치분권 추진을 포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5대 분야 30개 핵심과제에 마을단위의 자생적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 더불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6대 추진전략 및 33개 세부과제를 채택하였으며, 특히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는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음

○ 중앙정부의 자치분권과 부합하는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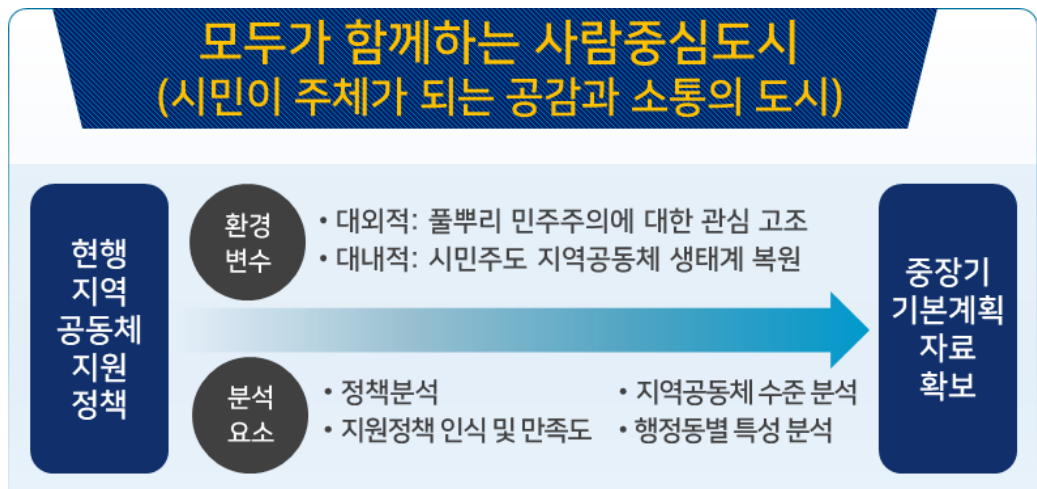
-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그 내용과 속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 다만,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만 각각 ‘시민사회 활성화’,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이라는 명칭으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음
- 그러나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주민자치를 통한 분권 구현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참여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 또한 정부 주도의 하향적 접근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고양시 자치공동체의 비전 및 전략수립을 위한 실태분석 필요

- 고양시에서는 2014년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6년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민주도의 자치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여 왔음
- 그러나 주민자치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은 자치공동체 추진체계의 구조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양시만의 비전 및 전략이 부재하여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한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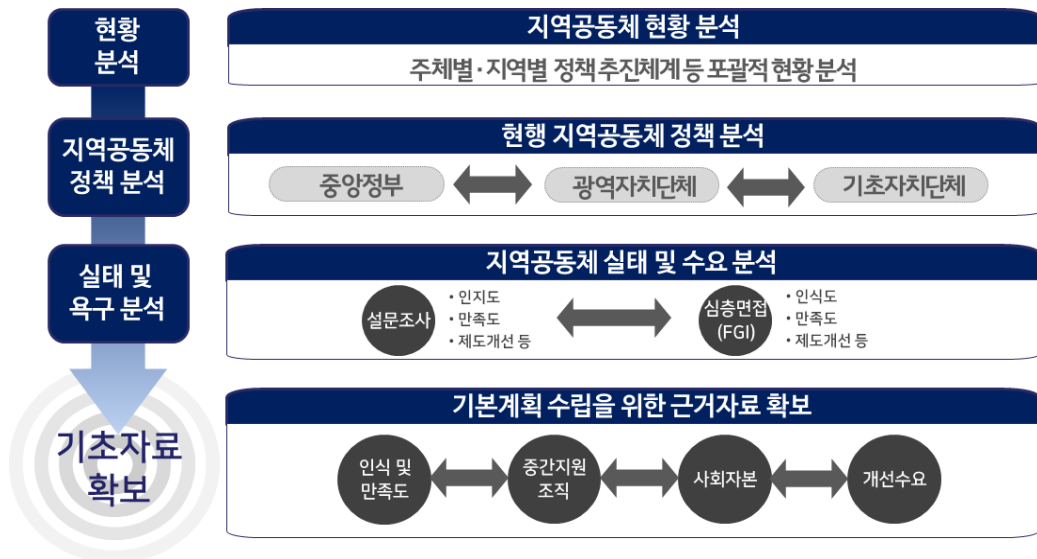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 고양시 관내 39개 행정동(洞) 구역
	시간적 범위	▣ 2019년 현재
	대상적 범위	▣ 고양시 관내 자생적·타생적으로 형성 및 활동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모두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등
	내용적 범위	▣ 현황분석 / 정책분석 / 특성분석 / 실태분석
연구 방법	문헌연구	▣ 지역공동체 관련 학술 및 정책보고서 검토
	현황분석	▣ 지역공동체 추진체계 및 행정동별 특성분석, 지원 정책분석
	설문분석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공무원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
	심층면접분석	▣ 지역공동체 활동 주체 및 지원주체에 대한 집중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가(학계, 정책 및 현장 실무자 등) 자문

□ 연구의 체계



2. 공동체와 지역(마을)공동체, 그리고 자치공동체

○ 공동체와 지역(마을)공동체

- 19세기 말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Ferdinand Tönnies는 사회유기체설과 사회계약론을 결합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로 구분하였고, 전자를 공동체(communitiy)로 규정하였음
- 공동사회(Gemeinschaft)는 신분질서, 가족적 질서, 관습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며, 토지를 가장 중요한 물질적 토대로서 간주하고 전인격적인 관계가 뿌리내린 공동체를 의미함
- Ferdinand Tönnies의 연구 이후,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1917년 Maclver의 「Community: A sociological study」 라는 저서에서 그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함
- 오늘날의 공동체(communitiy)가 갖는 개념은 지역적 인구집단이 집합적 생활을 위해 만든 일종의 사회조직으로서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주성과 책임을 자각한 주민이 함께 공동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연대감이 있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역(region or area)’과 ‘마을(village)’은 상호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공간규모적 측면에서 마을은 좁은 공간의 경계성을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영역에서의 경계를 갖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양자 간 상대적 공간규모의 차이는 존재하나, 지향가와 구성요소 등을 종합하면 지역과 마을은 동일한 개념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결국, 지역(마을)공동체는 정주 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이며, 인간이 만족할 모듬살이를 할 수 있는 친밀권역, 또는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집단 등으로 해석됨

○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 2014년 1월에 제정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에 따르면, 자치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음
- 여기에서 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는 동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의미함
- 종합하면, 고양시에서의 자치공동체가 갖는 조례상 의미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주 내에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자의적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음
- 한편, 자치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치’와 ‘공동체’의 복합어로 공동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성과 공동성을 내포한 자율적 집단이라고 한다면, 자치(自治)는 자신 또는 자신들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며, 현행 지방자치의 줄임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음
- 결국, 자치공동체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자율적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자치공동체 실태분석

□ 설문분석 결과 요약

○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인 지역성, 공동의 유대감, 상호작용, 공익성, 주민자치 등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평가함

-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 중에서 지역성과 공동의 유대감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활성화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함

○ 현재 고양시 지역공동체 유형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마을활동가가 바라보는 현행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모습은 도시·농촌 복합형태의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 활동주체가 고양시의 행·재정 지원을 토대로 하여 공공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교육·문화역사 등의 특성을 가진 협동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형성된 생태계라 할 수 있음
- 반면,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이 인식하는 현행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모습은 도시·농촌 복합형태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존적 활동주체가 고양시의 행·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부문이 제시한 계획에 따라 복지·교육·생활환경정비 등의 특성을 가진 협업사업을 수동적으로 추진하여 형성된 생태계라 할 수 있음

○ 지원정책 인지 및 만족도, 지역공동체 역할 수준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는 지원정책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조례에서 명시한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음
- 특히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사업 지원’과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낮음
-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는 본인들의 역할 수행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진흥 기능’,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부여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만족 수준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역할 수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식이 강함
-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모두 ‘전문적인 사업계획 컨설팅 및 회계처리 등 행정처리 지원’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제도적 개선방안 및 향후 자치공동체 비전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모두 주민참여 부족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능력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리더 및 활동가 발굴, 마을사업·활동 구체화, 공공부문의 재정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
- 향후 고양시의 중·장기적 자치공동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근간이 되는 ‘비전’에 대한 조사결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공무원 모두 유사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연계선상에서 추정이 가능함
- 구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 ‘상생발전’ 등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현 문재인 정부에서의 자치분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필수요소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발성’, ‘봉사’ 등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기존의 타의적·의존적·이기적인 특성에서 자의적·자생적·이타적인 주민자치로의 점진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심층면접 결과 요약

○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 간의 경쟁적·견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상호 협력의 어려움 존재

- 지역공동체의 주요 활동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는 상호 간의 특성 및 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 제시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 모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꿈드림미 및 컨설팅 지원 등에 있어 해당 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 필요성 제기

- 상호 인적교류를 통한 단절적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39개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함

○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음

4. 정책적 제언

○ 집행부인 고양시청 차원에서 현행 이원화 되어 있는 자치(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

- 공공부문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시행 주체가 직제상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자치(지역)공동체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조직의 일원화가 필수적임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강화 및 기능의 다변화, 그리고 사업추진 상에서 자율성 확보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향후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기본운영계획과 연도별 실행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운영계획은 동 조례 제26조에 따른 위탁기간을 고려하여 3년간을 목표기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치(지역)공동체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필수요소(지역성, 상호작용, 유대감)와 부가요소(공익성, 사업성), 그리고 강화요소(주민자치: 결정 및 집행)를 형성 및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지역정치성을 배제하고 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운영계획 및 연도별 실행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의 자율성이 가능토록 고양시청과 의회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의 인식 전환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가 온전히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형성의 주체 또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자 또는 기득권자가 아닌 봉사자라는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비롯한 역량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기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마을활동가는 상대적으로 제도적 규제가 느슨함을 고려하여 자치(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체의 활동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공익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자치공동체 주체와 지역주민의 공동체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필요

-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은 소극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현행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센터의 개별 지원 사업에 전문기관의 인력이 참여하는 하는 것임

- 후자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대상별·수준별·단계별 커리큘럼에서 전문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이 지원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 지역의 특성과 자치(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 중·장기적 기본계획에는 고양시 관내 자치(지역)공동체 영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유형을 차별화 및 특화시키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며, 실행계획은 자치(지역)공동체 주체, 즉 주민 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고양시청, 행정복지센터, 전문기관 등의 역할 및 기능의 연계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매년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연도별 실행계획과 평가결과가 연동될 수 있도록 환류기능(feed back)을 강화해야 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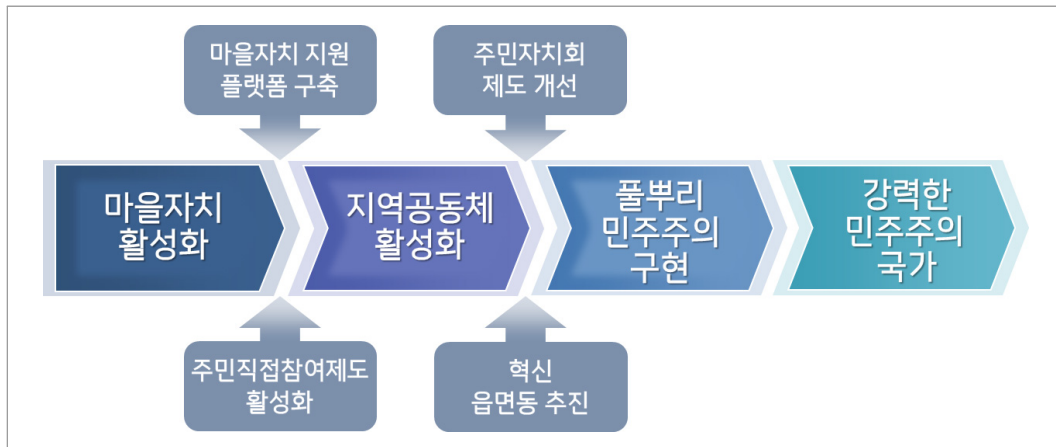
제3절 연구의 체계

제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현 정부는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초한 자치분권 추진을 포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역 또는 마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생활민주주의 구현의 원동력으로 작용되며, 그 핵심은 자치분권 수준에 따라 결정됨
-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5대 분야 30개 핵심과제에 마을단위의 자생적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 즉, 공무원 위주의 읍면동 운영에서 마을자치 플랫폼화로, 관(官) 주도의 마을정책 수립·집행에서 주민주도의 마을자치 운영 등으로의 전환이 그것임
- 더불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6조에 근거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2018년 9월 수립하였음
 -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 및 33개 세부과제를 채택하였음
 - 특히,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는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음

[그림 1-1]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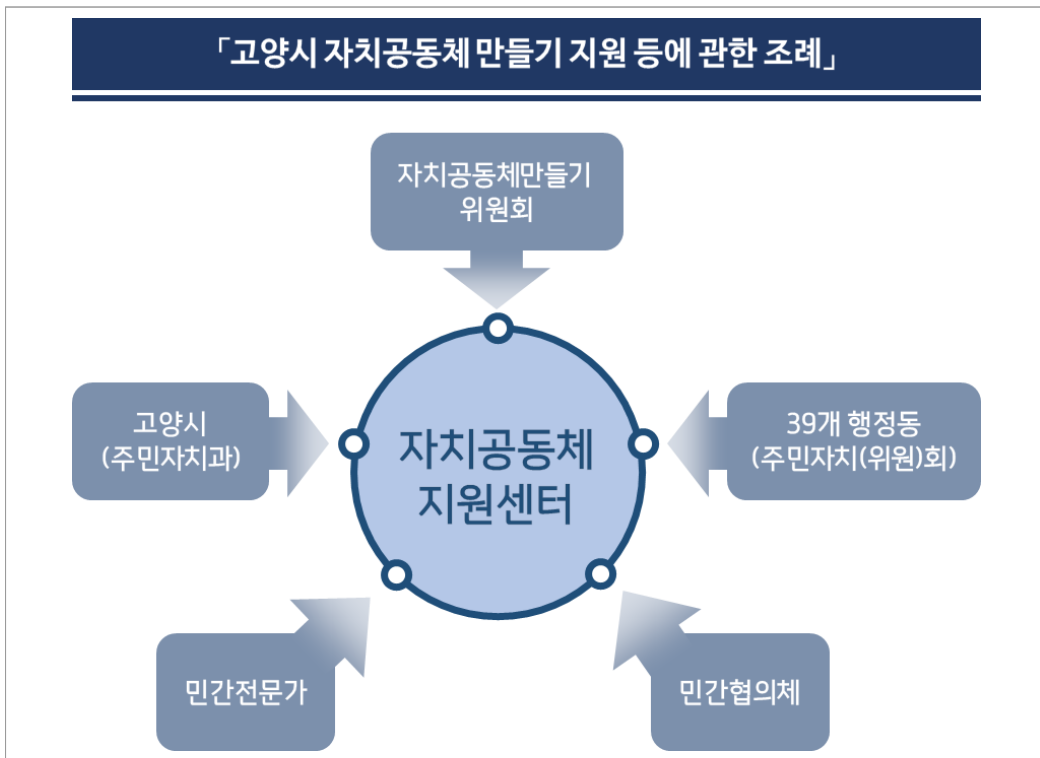


자료 :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8.

- 한편,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그 내용과 속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 다만,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만 각각 ‘시민사회 활성화’,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이라는 명칭으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음
 - 그러나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주민자치를 통한 분권 구현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 또는 정부 주도의 하향적 접근방법으로 진행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를 승계하되, 정책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혼합형 접근을 채택하였음
 - 특히, ‘지방분권’에서 ‘자치분권’으로의 개념 확대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관(官)주도의 하향식 방법에서 주민주도의 상향식 방법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음

- 한편, 고양시에서는 2014년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조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마을과 자치공동체에 대한 정의, 기본원칙,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자치공동체 사업 및 지원,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및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임
- 조례 제정 이후 2016년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민주도의 자치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여 왔음
 - 그러나 주민자치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은 자치공동체 추진체계의 구조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양시만의 비전 및 전략이 부재하여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한계를 가짐

[그림 1-2] 자치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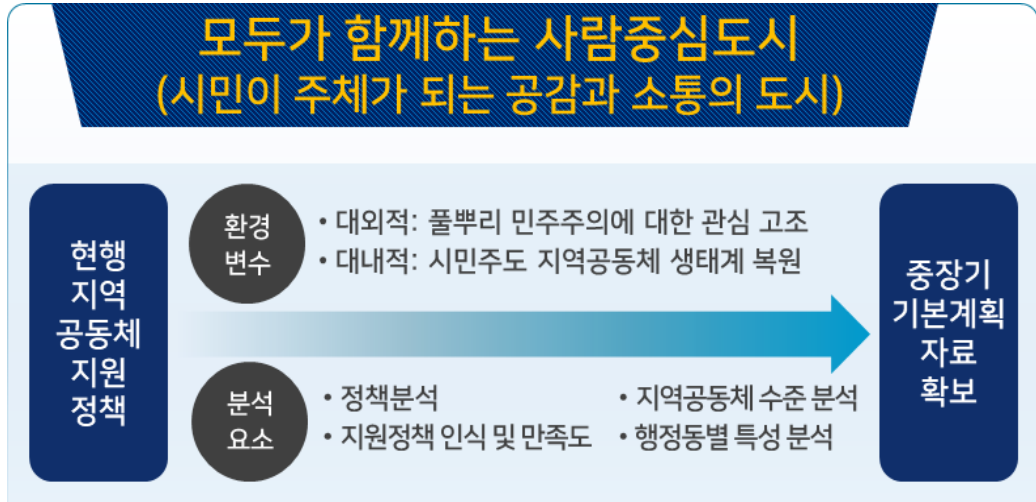


자료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연구의 목적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분석
 - 현행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동향 및 특성분석을 통해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정책 분석
 - 고양시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사례분석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다양성 확보
- 고양시의 현행 자치공동체 현황 분석
 -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행 추진체계와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활동 현황, 그리고 39개 행정동(洞)을 기준으로 특성분석 및 유형화를 토대로 지역(마을) 단위의 차별적 특징 도출
-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
 - 현 중앙정부와 민선7기 고양시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하향적(top-down)이 아닌, 상향적(bottom-up) 접근방법을 활용하며, 그에 따라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근간으로 활용

[그림 1-3]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임을 고려하여, 고양시 39개 행정동(洞) 구역을 공간범위로 한정함
- 시간적 범위
 - 자치공동체 현황 및 실태분석에 따른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시점인 2020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기준시점은 2019년으로 설정함
- 대상적 범위
 - 고양시 관내에서 자생적·타생적으로 형성 및 활동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모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향후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따른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이익 추구 단체가 아닌, 제도권 내에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활동조직으로 한정함
- 내용적 범위
 - 고양시 관내 자치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분석, 특성분석, 실태분석, 사례분석 등을 포함함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각종 문헌의 검토를

통해서 향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현황분석
 - 고양시 관내 지역공동체 추진체계 및 현황, 실태분석과 행정동별 특성분석, 자치공동체 지원 정책분석을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의 현실 적합성을 확보함
- 사례분석
 - 고양시와 유사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역공동체 추진체계 및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요건을 도출함
- 조사표 조사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마을활동가, 관계공무원(시청, 구청, 39개 행정동의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지향 가치 및 비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함
 - 조사표 조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방식을 채택하되, 고양시청의 주무부서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며, 조사대상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공통질문과 특성질문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함
- FGI 조사
 - 주민자치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행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향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전문가 자문
 -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접근방법, 고양시만의 특성분석 및 결과 반영방법, 의견수렴 절차 및 대응방법 등을 위해 학계, 정책 및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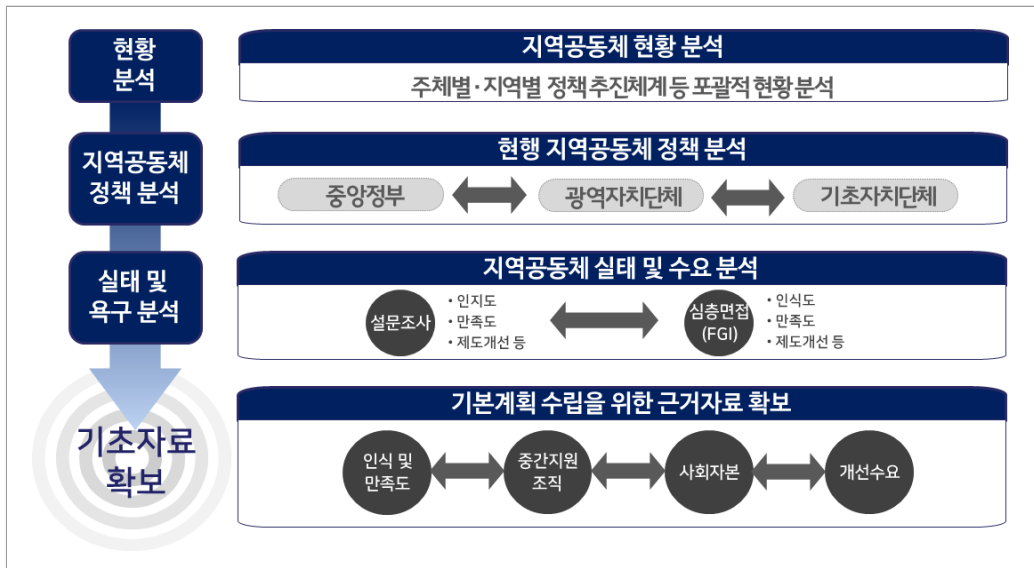
[표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 고양시 39개 행정동(洞)
	시간적 범위	▣ 2019년 현재
	대상적 범위	▣ 고양시 관내 자생적 타생적으로 형성 및 활동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모두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등
	내용적 범위	▣ 현황분석 / 정책분석 / 특성분석 / 실태분석
연구 방법	문헌연구	▣ 지역공동체 관련 학술 및 정책보고서 검토
	현황분석	▣ 지역공동체 추진체계 및 행정동별 특성분석, 지원 정책분석
	설문분석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공무원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
	심층면접분석	▣ 지역공동체 활동 주체 및 지원주체에 대한 집중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가(학계, 정책 및 현장 실무자 등) 자문

제3절 연구의 체계

- 전술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등을 토대로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황 및 실태분석 체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즉, 현행 고양시 지역공동체에 대한 현황을 주체별, 지역별 등 포괄적인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고양시의 지원 정책 동향 및 성과를 분석함
 -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통해 현행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 활성화 수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 제도적 개선수요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 특성과 지역공동체 생태계 수준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확보함

[그림 1-4] 현황 및 실태분석 체계도



제 2 장

자치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에 대한 논의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절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 논의

- 고양시 관내에서 각종 지원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자치공동체’라는 개념적 명확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에 대한 선행적 개념 정립이 필요함
 - 이에 본 장에서는 고양시의 특성이 반영된 ‘자치공동체’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1. 공동체의 개념과 기원

- 19세기 말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Ferdinand Tönnies는 사회유기체설과 사회계약론을 결합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로 구분하였고, 전자를 공동체(communitiy)로 규정하였음(차경은, 2012; 이재열, 2006)
 - 의지분석에 있어 본질의지에 따른 게마인샤프트, 즉 공동사회(Gemeinschaft)는 전통적인 규율과 일반적 연대감에 의해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자기 이익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임의의지에 따른 게젤샤프트(이익사회)는 신중하게 결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유지되는 사회로 설명하였음
 - 구체적으로, 공동사회(Gemeinschaft)는 신분질서, 가족적 질서, 관습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며, 토지를 가장 중요한 물질적 토대로서 간주하고, 전인격적인 관계가 뿌리내린 공동체를 의미함(이재열, 2006)
 - 반면, 이익사회(Gesellschaft)는 개인 간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을 둔 계약을 중시하고, 관습보다는 명문화된 규칙, 토지보다는 화폐를 매개로한 경제활동, 전인격적이기 보다는 특정한 관계에 국한된 비인격적인 교류를 중시함
 - 결과론적으로 Ferdinand Tönnies가 구분한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

(Gesellschaft)는 어느 하나의 모습에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전자에서 후자로의 변모 과정을 거치게 됨

- 한편, Ferdinand Tönnies은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기반 한 결집체인 공동체(community)를 ①씨족 또는 친족집단과 같은 혈연공동체와 ②종교적 결사체인 정신적공동체, 그리고 ③근린사회집단인 지역공동체로 구분함(차경은, 2012)
 - 여기서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ity’는 ‘common(communal)’과 ‘unity’의 합성어로, 전자는 공동 또는 공동소유를 의미하며, 후자는 통일성 또는 통합을 의미하는 바, 오늘날에는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근린사회,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전대욱 외, 2012; Chaskin, 1997)
- Ferdinand Tönnies의 연구 이후,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1917년 Maclver의 「Community: A sociological study」 라는 저서에서 그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함(한규호, 2009)
 - 당시의 공동체는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전통과 습관, 공통된 사회적 표현 등을 의미하는 지역성과 우리의식 및 의존의식을 의미하는 공동성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박종관, 2012)
 - 오늘날의 공동체(community)가 갖는 개념은 지역적 인구집단이 집합적 생활을 위해 만든 일종의 사회조직으로서,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주성과 책임을 자각한 주민이 함께 공동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연대감이 있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음(한원택, 1995; 김일태, 1998)

[그림 2-1] 공동체의 개념구조



자료 : 이재열,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2006, 5 : 23-49.
전대욱 외,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2.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

-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체의 개념이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등 혼용되고 있어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음
 - 먼저,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개념적 정립을 위해서는 ‘지역’과 ‘마을’에 대한 의미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양자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는 공간적 의미의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역(region or area)’이란 밀접한 상호작용의 흐름으로 묶여 있는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의 단위를 의미하는 바, 다양한 시각에서의 개념정의를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지역은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성되며, 그 곳만의 고유한 성격인 지역을 가지며, 개별 지역은 인접한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을 하게 됨¹⁾
 - 또한 지역은 주민들이 일상적 생활을 경험하는 규모의 공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공간 접근 능력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곽현근, 2012)
 - 한규호(2009)는 읍·면을 가지고 있는 군,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되어 있는 도농복합시, 차상위의 범주에 드는 자치구를 지역으로 규정함
 - 더불어 지역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하위 공간단위를 의미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와 특성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적 규모를 의미함(송창용·성양경, 2009)
- 다음으로 ‘마을(village)’은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적 범위를 지닌 공동체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며, 물리적인 범주보다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함(조영재 외, 2013)
 - 추가적으로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생활의 단위로서, 인간생활의 기본단위인 가족 또는 집들이 모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통합을 이루고 있는 지역집단으로서 촌락이라고 칭함²⁾

¹⁾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접속일 2019.09.10.

²⁾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접속일 2019.09.10.

- 더불어,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통·리나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칭함³⁾
- 이와 같이 ‘지역’과 ‘마을’은 상호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공간규모적 측면에서 마을은 좁은 공간의 경계성을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영역에서의 경계를 갖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양자 간 상대적 공간규모의 차이는 존재하나, 지향가치와 구성요소를 종합하면 지역과 마을은 동일한 개념을 갖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한편,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또는 마을공동체는 언급한 ‘지역’ 또는 ‘마을’과 ‘공동체’의 합성어로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음
 - 지역(마을)공동체는 정주 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이며(이재열, 2006), 인간이 만족할 모듬살이를 할 수 있는 친밀권역(이종수, 2012; 김현호, 2013 재인용), 또는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집단 등으로 해석됨(Hillery, 1955)

[표 2-1] 지역(마을)공동체의 개념정리

연도	연구자	주요 내용
1955	Toennies	▣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인간의 본원적인 욕구에 의해 결합되어지는 지역의 공동사회
1955	Hillery	▣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집단
1982	Taylor	▣ 공유된 신념과 가치를 지니고 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이고 다면적, 복합적 관계를 보이며 호혜성의 실천으로 구성된 집단형태
1988	Master et al.	▣ 협동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대면접촉하며 상호작용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집단
1989	Duncan	▣ 다양한 공간수준에서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집단
1997	Mattessich et al.	▣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상호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2006	이재열	▣ 정주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
2006	정기환	▣ 지리적 경계를 가지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유대와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

3)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17.02.24.

연도	연구자	주요 내용
2011	김성배	▣ 일정한 지역에서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의 집단
2012	박병춘	▣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전방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단위
2012	곽현근	▣ 일정한 지리적 경계 안에서 살면서 주민들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
2012	이종수	▣ 인간이 만족할 모듬살이를 할 수 있는 친밀권역
2012	전대욱 외	▣ 지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소속감)을 가진 일정한 지역(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인간집단
2012	서울시	▣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추구하는 유대감을 가진 집단

자료 : 김현호,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p. 22.

-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지역(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면, 지역(마을)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사회적·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목표 또는 가치를 추구하는 주민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다만,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분리하여 고려한다면, 각각의 포괄범위에 따라 지역공동체를 광역, 협의, 최협의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松本 康(1990)의 정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松本 康(1990)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지역공동체를 특정한 의미를 갖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보았으며, 협의로는 일정한 지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단, 최협의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접촉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하였음(김현호, 2013)
 - 이를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는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는 최협의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음

3. 지역(마을)공동체의 구성요소

- 지역(마을)공동체의 구성요소는 앞서 확인한, 다양한 개념 정의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내에서 활동하는 지역성(locality)과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 그리고 동일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의 유대(common bonds)로 구분할 수 있음(Hillery, 1955)
 - 현대사회에 들어서 위의 세 가지 외에 공익성(public interest)과 사업성(business)을 추가적인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7)
 - 공익성(public interest)은 지역공동체의 활동과 사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생된 잉여는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임
 - 사업성(business)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그림 2-2] 지역(마을)공동체의 구성요소



자료 : Hillery,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1955) : 111-123.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2017.

제2절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에 대한 논의

1. 자치공동체의 개념

- 2014년 1월에 제정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에 따르면, 자치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음
 - 여기에서 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는 동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의미함
 - 종합하면, 고양시에서의 자치공동체가 갖는 조례상 의미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주 내에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자의적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음
- 한편, 자치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치’와 ‘공동체’의 복합어로 공동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성과 공동성을 내포한 자율적 집단이라고 한다면, 자치(自治)는 자신 또는 자신들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며, 현행 지방자치의 줄임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음
 - 결국, 자치공동체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자율적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자치공동체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는 추구하는 목적 또는 가치가 동일하나, 공간적 규모의 차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공간규모를 최협의로 상정할 경우, 마을공동체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접촉의 범위 내에서 공동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공동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고양시 관내에서 자생적·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자치공동체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마을단위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고양시의 자치공동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마을공동체와 동일한 개념 및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고양시의 자치공동체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는 달리 ‘자치’의 개념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17개 광역시·도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활용 및 지원되고 있는 지역(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명칭부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북, 수원, 창원, 용인 등의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라는 명칭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남,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는 지역공동체라는 명칭을 활용하고 있음
 - 지역(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부분에 있어서, 지역공동체를 사용하는 지자체와 마을공동체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각각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으나,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권리와 자치를 강조하고 있다면, 지역공동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감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정 시기로 구분하면, 2000년대 제정된 조례에서는 지역(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형성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음
 - 지역(마을)공동체의 활동 공간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동(洞)을, 농촌지역에서는 읍(邑)·면(面) 또는 리(里)를 최소단위로 하여 지역을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관련 정책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세부과제 중 주민 자치회(읍·면·동 단위)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음

[표 2-2]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개념

구분	조례명	제정 연도	주요 내용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3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010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는 것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2017	▣ 행정동 또는 시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시민 전체
울산 광역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7	▣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	▣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경기도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
강원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4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충북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 행정동·리 또는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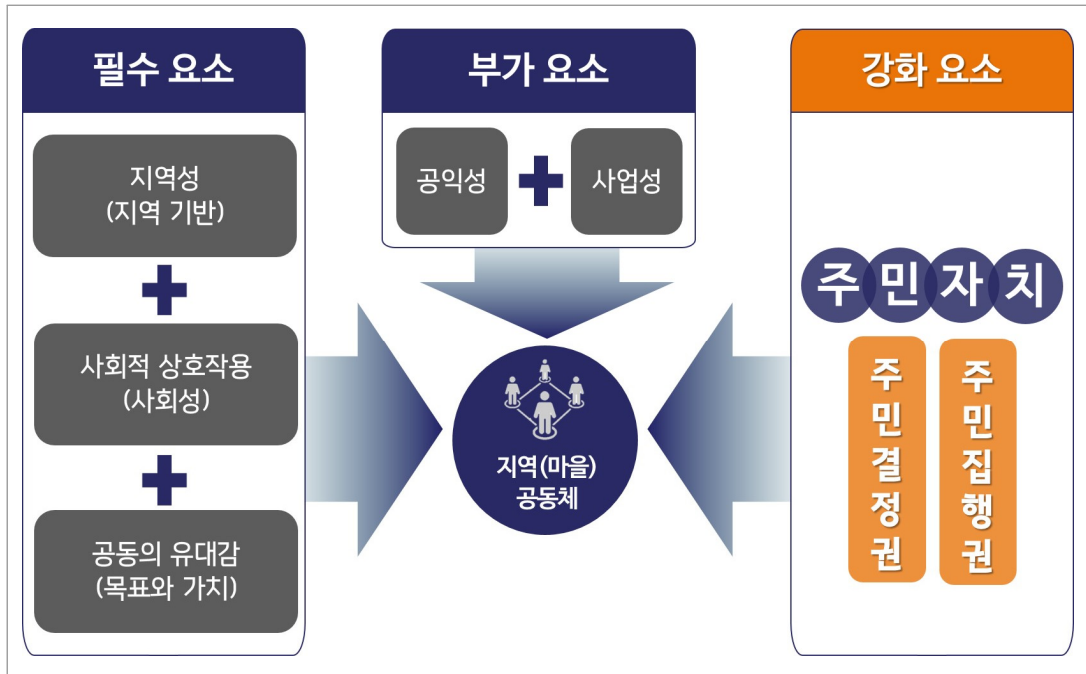
구분	조례명	제정 연도	주요 내용
충남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간적·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주민모임
전북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
경북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경남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하여 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전체의 생태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리 및 마을 등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창원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환경, 교육, 문화, 복지,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마을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활동
용인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
고양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접속일 2019.9.15

- 종합하면, 고양시의 자치공동체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조례상의 개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구성요소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으나, 조례 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 고양시 자치공동체의 구성요소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지역공동체 또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술적 성격의 연구와 실제 적용을 위한 정책적 성격의 연구임
 - 먼저, 학술적 성격의 연구는 연구방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공동체 사례분석과 설문 조사·분석으로 대분되며, 연구내용으로는 지역(마을)공동체 성공요인 및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의 역할, 지역공동체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 등이 진행되었음
 - 정책적 연구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가 대부분이며, 기존의 접근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보완연구도 일부 진행되어 왔음
- 지역(마을)공동체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지속적·의도적 노력을 통해 유지·확대되는 사회적 자본은 지역(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핵심적인 기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었음(강용배, 2003; 이재열, 2006; 박병춘, 2012)
 -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협의하고 토의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치라고 할 때,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결사가 활성화되고 또는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결속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차하면서 증진될 때에만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집합적 능력, 즉 지역공동체의 역량 증진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임(Fukuyama, 1995)
 -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간에는 필연적·보완관계가 성립되며,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훌륭한 리더의 존재와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 지역거버넌스 구축,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능력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논리임(강용배, 2003; 이재열, 2006)

- 다음으로 자발적 결사체인 폴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단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가 제기되었음(박병춘·최현석, 2012)
 -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을 비롯한 전문능력 제고, 환경·인프라 구축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및 기능이 핵심적인 요인이 됨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 셋째, 지역(마을)공동체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요건을 추출한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지역거버넌스 구축, 서비스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지역자원에 바탕한 전략, 리더에 의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동기 부여 및 고취 등을 제시하였음(박병춘, 2012)
- 넷째, 지역(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음(김호식·유원근, 2007; 차진영, 2019)
 -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역(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산의 체계적 활용과 내부주체의 참여와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참여와 지원, 내부 평가체계 등이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산업별 조직화와 연계성 강화를 통해 산업공동체 활성화가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기존의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은 남성중심적 의사결정 체계와 여성의 과소대표성 등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성평등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제시되었음(이선우 외, 2013; 조연숙, 2015)
 -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하며, 지역(마을)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각종 문서 및 대내외 네트워크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의 제공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표 2-3] 지역(마을)공동체 선행연구(학술연구)

연도	저자	제목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2003	강용배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하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 및 성공요인 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정체성은 집단에 대한 공통의 식이며, 이러한 정체성의 동원이 사회자본화 훌륭한 리더, 거버넌스 구축, 공동체운동과 지역사회여건의 부합성 등을 성공요인으로 제시
2006	이재열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양태를 사회적 자본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동태적 발전을 위한 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혁신, 조직적 혁신, 기술적 혁신 제시 사회적 자본의 축적방안 제시
2007	김호식 외 1인	경제적 관점에서 본 지역공동체와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산업, 특히 지역내 제조업체의 산업 분류별 현황과 규모를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의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 강릉시의 산업구조의 영세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조직화 및 네트워크형 모형 제시
2012	박병춘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규명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사람(리더), 전략, 지원의 4가지 차원에서 성공요인 제시 지역자원에 바탕한 전략, 리더에 의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동기 부여 및 고취, 그리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
2012	박병춘 외 1인	지역공동체 실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풀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풀뿌리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및 동참유도 정책 필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 서비스의 협력·지원 강화 정부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
2012	박병춘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의 관련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에 대한 비중을 기준으로 기업형 지역공동체, 협업형 지역공동체,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 유형 제시 범정부 차원의 공동 비전 설정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지역단위 행정 통합지원 연계체계를 구축을 지향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도	저자	제목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2013	이선우 외 5인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추진 시 성별격차를 고려한 양성평등한 정책개선과제 도출 및 양성평등·여성친화형 마을공동체 사업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부처 15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에 대한 현황 및 정책분석 15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성별특성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제시
2015	조연숙	마을공동체의 젠더이슈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젠더 이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평등 가치에 대한 무관심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 남성중심적 행정 및 의사결정 구조 마을사업 참여의 성별 분업 마을공동체 사업에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안 도출
2019	차진영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델 구축 및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와 지역발전전략(커뮤니티발전전략, 신내생적 발전전략, 스마트전문화 전략) 연계 가능성 제시 지역자신의 활용, 내부주체의 참여, 중재적 주체의 참여, 참여 인센티브, 내부평가체계 등이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지역(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따라 수립·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임
 - 2019년 6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각각 177개(중복포함: 자치법규정보센터) 지자체이며, 해당 조례의 근거에 따라 평균 5개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음
 -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요 연구 내용은 중앙정부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과 기존의 활성화 정책분석, 지역(마을)공동체 현황 및 실태분석, SWOT분석, 지역자원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음

[표 2-4] 지역(마을)공동체 선행연구(정책연구)

연도	저자	제목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2013	김정찬 외 3인	마을공동체 관련 자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구 마을공동체 회복, 형성,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내 인적·물적 자원조사 및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현황분석 ▣ 종로구 관내 마을공동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권역별 마을공동체 필요분야 제시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2014	김주석 외 1인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과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모색 및 민선5기 이후 마을만들기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관내 마을만들기 사례분석 ▣ 수원시 마을만들기 정책 분석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제도적 개선안 제시
2015	김주석 외 2인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과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관내 마을만들기 조직을 대상으로 형성과정 및 활동내용 고찰을 통해 범용화 가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조직 관련제도 고찰 ▣ 수원시 관내 마을만들기 활동조직 현황 분석 ▣ 수원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및 조례 개정안 제시
2015	김주원 외 5인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마을현황 분석 및 자원조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개념과 관련 이론적 논의 ▣ 국내·외 마을공동체 정책 비교·분석 ▣ 마을재생유형을 비롯한 12개 마을공동체 유형 제시 ▣ 유형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시
2016	김주석 외 1인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과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제도에 대한 분석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제도 개선안 제시
2018	충청지방 행정발전 연구원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정책 동향분석 ▣ 충북 관내 기초자치단체별 현황 분석 ▣ 마을공동체 활성화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 마을공동체 평가체계 제시
2018	허헌중 외 2인	아산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마을만들기 정책 분석 ▣ 아산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제시 ▣ 전략별 추진과제 제시 ▣ 마을만들기 평가체계 제시

연도	저자	제목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2019	안현찬 외 1인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분석 및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 및 모형 분석 서울시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및 1기 성과분석 마을공동체 정책 관련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비전 및 전략 제시 마을공동체 평가지표 제시
2019	안현찬 외 2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민선 7기 마을공동체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사업, 서울시 주관 아래 초기 단계인 모임형성 지원사업 위주 진행 사업참여자-공동체공간-지원체계 확대되는 성과 있었지만, 개선 필요 소극 참여층 유입, 공동체공간 성장지원, 자치구별 정책 다양화 등 1기 정책 한계 보완

제 3 장

고양시 자치공동체 현황 분석

제1절 고양시 자치공동체 현황

제2절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 정책 현황

제3절 행정동별 특성분석 및 지역유형화

제절 고양시 자치공동체 현황

1. 고양시의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1) 일반현황

- 고양시는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통해 39개 행정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취를 주된 목적으로 구성되었음
 - 2019년 현재 고양시 관내 39개 행정동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동은 주교동을 포함한 37개 동이며, 주민자치회는 2016년 시범실시로 지정된 창릉동과 풍산동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와 주민자치기능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이며, 주민자치회의 목적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임
 - 양자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등이며,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 등으로 부여되어 있음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며,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시장이 위촉하고, 양자 모두 2년의 임기와 두 차례의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

[표 3-1] 고양시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체계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근 거	법령	「지방자치법」제8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조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설치 대상		동행정복지센터	창릉동, 풍산동
설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 주민자치기능 강화 ▣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업무: 등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수탁업무: 등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 주민자치업무: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명 이내 ▣ 3명 이내의 고문 및 5명 이내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명 이상 30명 이하
위촉권자		▣ 동장	▣ 시장
임기		▣ 2년, 두 차례 연임 가능	▣ 2년, 두 차례 연임 가능

자료 :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 2018년 12월 현재 39개 동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총 899명이며, 이중 남성이 448명(49.8%), 여성 451명(50.2%)임
 -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기타직을 제외하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이 171명(38.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직능·민간단체에 종사하는 위원이 59명(1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자영업자가 212명(23.6%)으로 가장 많이 위촉된 바,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운용이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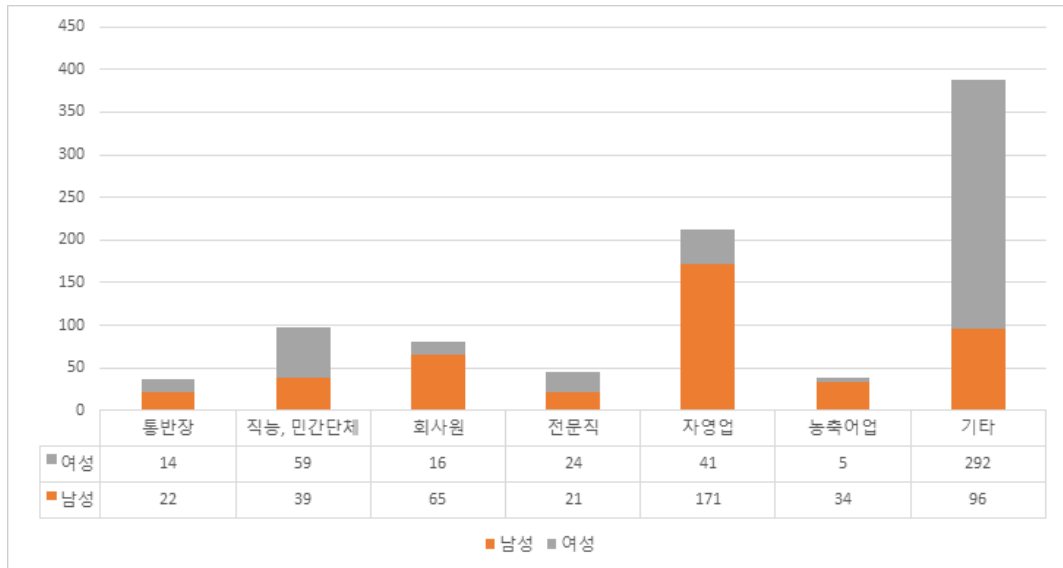
[표 3-2] 고양시 주민자치위원 현황(2018년 12월: 주민자치회 포함)

(단위: 명, %)

구분	통반장	직능, 민간단체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	농축어업	기타	합계
남성	22 (4.9)	39 (8.7)	65 (14.5)	21 (4.7)	171 (38.2)	34 (7.6)	96 (21.4)	448 (100.0)
여성	14 (3.1)	59 (13.1)	16 (3.5)	24 (5.3)	41 (9.1)	5 (1.1)	292 (64.7)	451 (100.0)
합계	36 (4.0)	98 (10.9)	81 (9.0)	45 (5.0)	212 (23.6)	39 (4.3)	388 (43.2)	899 (1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3-1] 고양시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소속현황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더불어,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창릉동과 풍산동의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원에서 창릉동은 26명, 풍산동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라 남성이 23명(46.0%), 여성 27명(54.0%)이며, 직업별로는 주부가 21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5명(50.%)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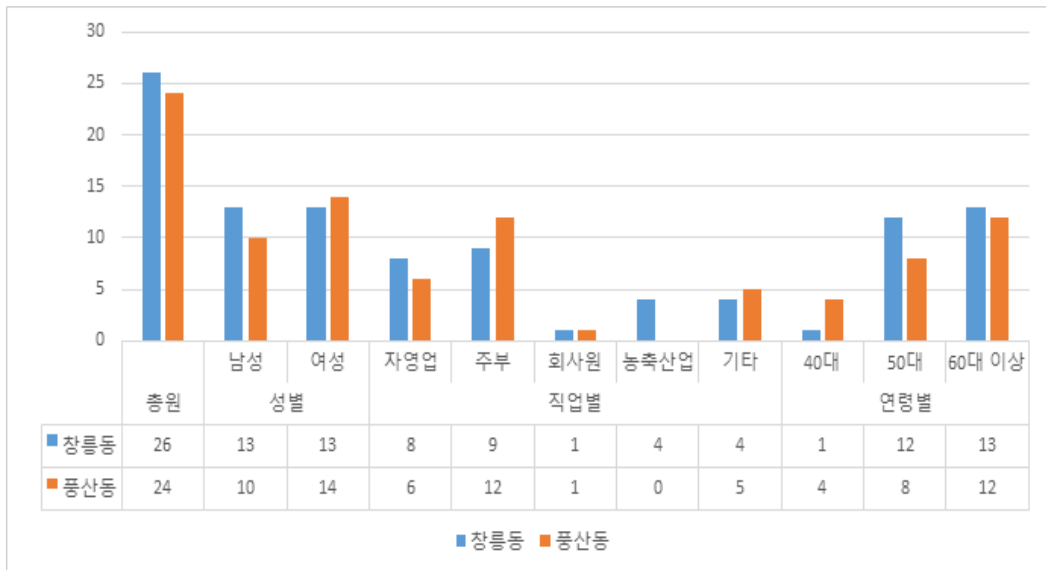
[표 3-3] 고양시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2019년 4월 현재)

(단위: 명, %)

구분	총원	성별		직업별					연령별		
		남성	여성	자영업	주부	회사원	농축산업	기타	40대	50대	60대 이상
창릉동	26	13	13	8	9	1	4	4	1	12	13
풍산동	24	10	14	6	12	1	0	5	4	8	12
합계	50 (100.0)	23 (46.0)	27 (54.0)	14 (28.0)	21 (42.0)	2 (4.0)	4 (8.0)	9 (18.0)	5 (10.0)	20 (40.0)	25 (5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3-2] 고양시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한편, 2019년 현재 39개 주민자치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572,356천원이며, 이는 2018년 대비 28.2% 감소한 금액임
 -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총 2,190,565천원 중 자치위원 수당이 806,490천원 (3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9년 또한 자치위원 수당이 전체에서 50.8%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전체 투입금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사업운영비의 경우, 가장 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치위원 수당의 경우에는 2018년 대비 금액은 감소하고, 비중은 오히려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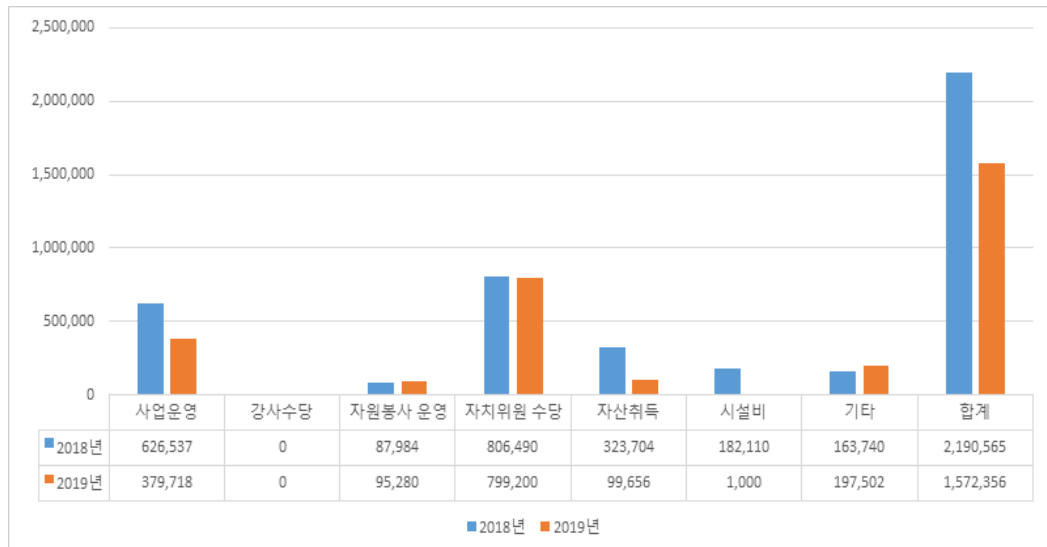
[표 3-4]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사업운영	강사수당	자원봉사 운영	자치위원 수당	자산취득	시설비	기타	합계
2018	626,537 (28.6)	0 (0.0)	87,984 (4.0)	806,490 (36.8)	323,704 (14.8)	182,110 (8.3)	163,740 (7.5)	2,190,565 (100.0)
2019	379,718 (24.1)	0 (0.0)	95,280 (6.1)	799,200 (50.8)	99,656 (6.3)	1,000 (0.1)	197,502 (12.6)	1,572,356 (100.0)
합계	1,006,255 (26.7)	0 (0.0)	183,264 (4.9)	1,605,690 (42.7)	423,360 (11.3)	183,110 (4.9)	361,242 (9.6)	3,762,921 (1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3-3]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그리고 고양시 관내 39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조례상의 주요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12월 현재 총 1,29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기능별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729개(56.1%)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이 11개(0.8%)로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편중 현상은 상대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용이하며, 수강료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비교적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핵심목표인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진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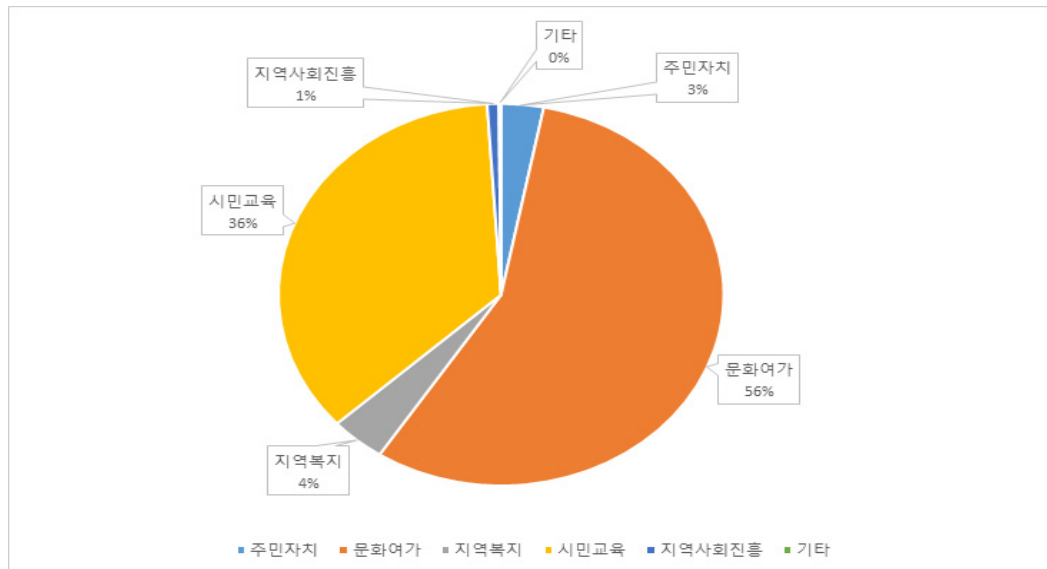
[표 3-5]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18년 12월)

(단위: 개, %)

합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타
1,299 (100.0)	40 (3.1%)	729 (56.1)	52 (4.0)	465 (35.8)	11 (0.8)	2 (0.2)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3-4]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는 2018년 12월 현재 총 887명이며, 이 중 남성이 347명(39.1%), 여성 540명(60.9%)임
 - 봉사활동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보조 인력이 314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관리 봉사자가 12명(1.4%)으로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6]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현황(2018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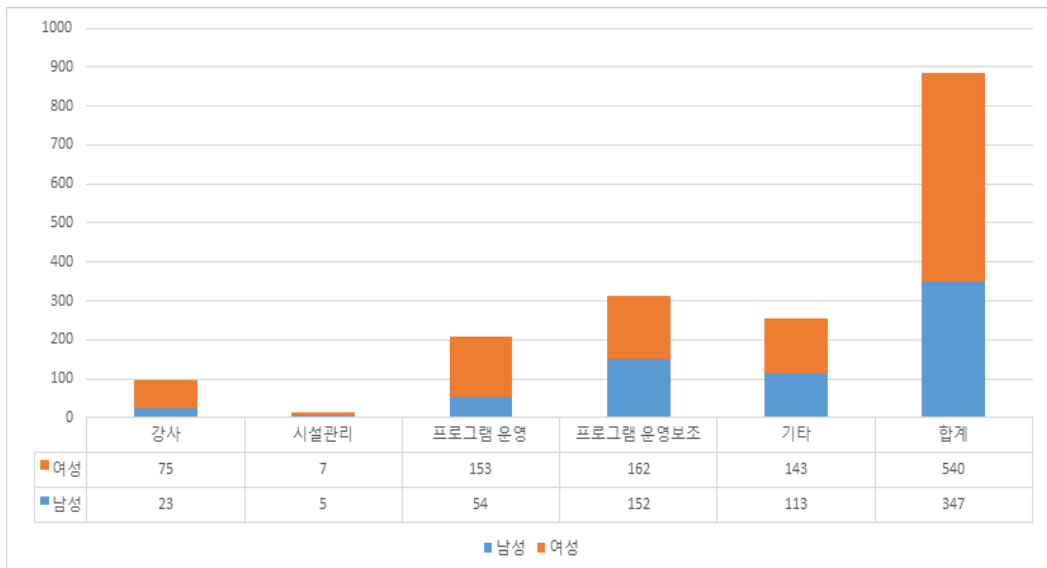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보조	기타	합계
남성	23 (6.6)	5 (1.4)	54 (15.6)	152 (43.8)	113 (32.6)	347 (100.0)
여성	75 (13.9)	7 (1.3)	153 (28.3)	162 (30.0)	143 (26.5)	540 (100.0)
합계	98 (11.0)	12 (1.4)	207 (23.3)	314 (35.4)	256 (28.9)	887 (100.0)

*주.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 제외

출처: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3-5]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현황



출처: 고양시 내부자료

2) 활동유형 현황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39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유형은 마을복지와 마을환경 분야이며, 마을교육과 마을문화예술 분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일반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마을환경 분야가 16건(2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마을복지, 마을문화예술 분야가 뒤를 이었음
 -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전체 비중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일산서구에서는 마을복지 및 마을환경과 더불어 마을교육의 비중이 타 행정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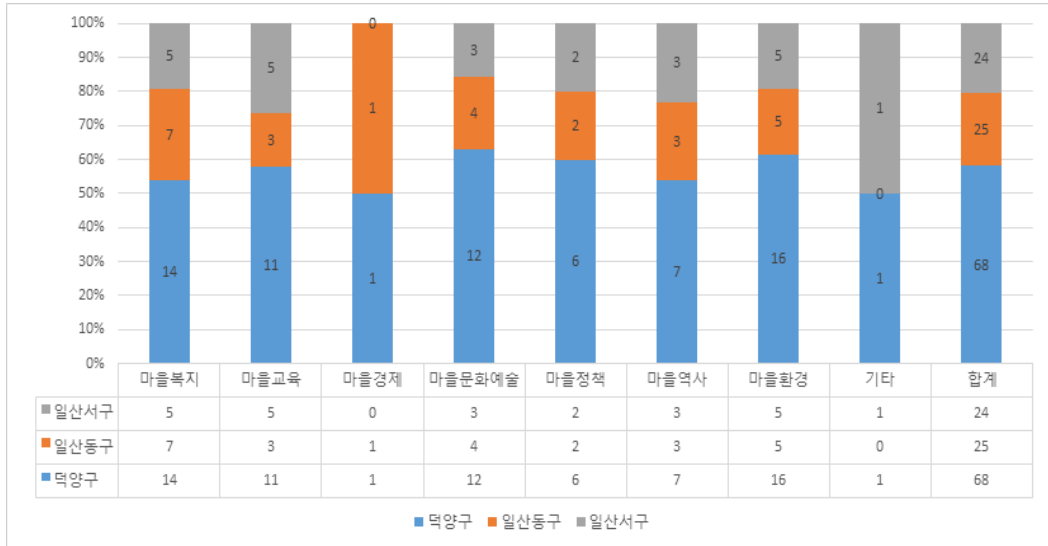
[표 3-기]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활동 유형(2018년)

(단위: 건, %)

구분	마을 복지	마을 교육	마을 경제	마을 문화예술	마을 정책	마을 역사	마을 환경	기타	합계
덕양구	14 (20.6)	11 (16.2)	1 (1.5)	12 (17.6)	6 (8.8)	7 (10.3)	16 (23.5)	1 (1.5)	68 (100.0)
일산동구	7 (28.0)	3 (12.0)	1 (4.0)	4 (16.0)	2 (8.0)	3 (12.0)	5 (20.0)	0 (0.0)	25 (100.0)
일산서구	5 (20.8)	5 (20.8)	0 (0.0)	3 (12.5)	2 (8.3)	3 (12.5)	5 (20.8)	1 (4.2)	24 (100.0)
합계	26 (22.2)	19 (16.2)	2 (1.7)	19 (16.2)	10 (8.5)	13 (11.1)	26 (22.2)	2 (1.7)	117 (100.0)

자료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 결과 보고서』, 2018.

[그림 3-6]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활동 유형



자료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 결과 보고서』, 2018.

- 다음으로 39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의 향후 관심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마을복지 분야가 26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마을환경, 마을교육 분야가 뒤를 잇고 있음
 - 일반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마을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산동구는 마을역사에 일산서구는 마을복지에 각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활동 유형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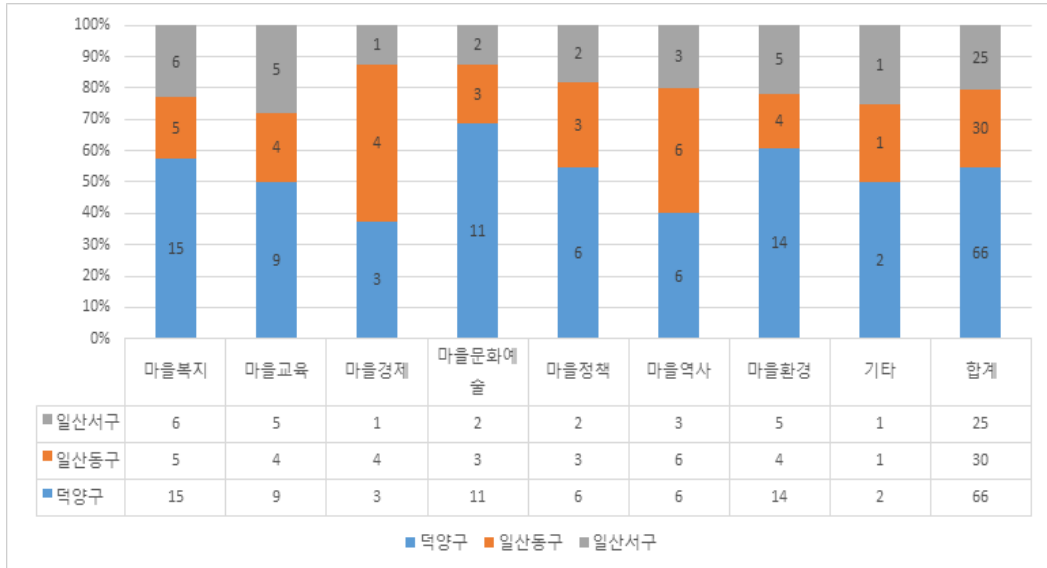
[표 3-8]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의 관심 유형(2018년)

(단위: 건, %)

구분	마을 복지	마을 교육	마을 경제	마을 문화예술	마을 정책	마을 역사	마을 환경	기타	합계
덕양구	15 (22.7)	9 (13.6)	3 (4.5)	11 (16.7)	6 (9.1)	6 (9.1)	14 (21.2)	2 (3.0)	66 (100.0)
일산동구	5 (16.7)	4 (13.3)	4 (13.3)	3 (10.0)	3 (10.0)	6 (20.0)	4 (13.3)	1 (3.3)	30 (100.0)
일산서구	6 (24.0)	5 (20.0)	1 (4.0)	2 (8.0)	2 (8.0)	3 (12.0)	5 (20.0)	1 (4.0)	25 (100.0)
합계	26 (21.5)	18 (14.9)	8 (6.6)	16 (13.2)	11 (9.1)	15 (12.4)	23 (19.0)	4 (3.3)	121 (100.0)

자료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 결과 보고서』, 2018.

[그림 3-7]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관심 유형



자료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 결과 보고서』, 2018.

3) 협력 직능단체 및 지역공동체 현황

- 2곳의 주민자치회를 제외하고 37곳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는 직능단체와 지역공동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총 138개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중 직능단체가 97개(70.3%), 지역공동체 41개(29.7%)임
 - 일반구별로는 덕양구가 가장 많은 70개의 협력단체가 있고, 다음으로 일산서구 38개, 일산동구 30개이며, 상대적으로 지역공동체보다 직능단체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음

[표 3-9] 고양시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 단체 현황(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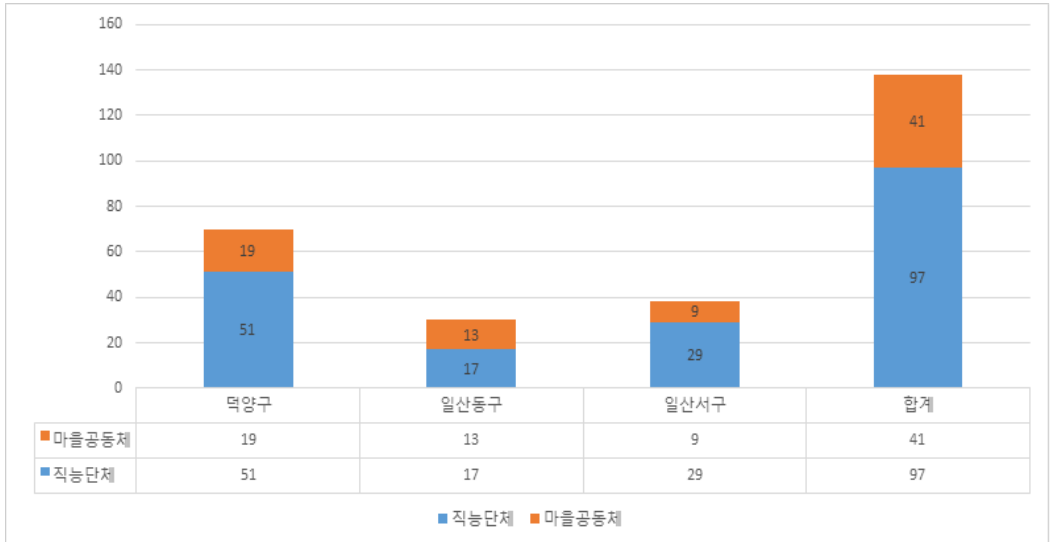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합계
직능 단체	통장협의회	12	1	5	18
	청소년지도위원회	3	1	2	6
	바르게살기회	1	1	1	3

구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합계
시민안전지킴이	8	1	4	13
복지일촌협의회	6	2	2	10
체육회	2	1	3	6
새마을부녀회	6	1	3	10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	0	0	3
적십자봉사회	1	0	1	2
지역사회보장협의회	3	3	1	7
자율방범대	2	2	2	6
세술적십자회	1	0	0	1
고양약사회	1	0	0	1
범대책위원회	1	0	0	1
6·25참전봉사회	1	0	0	1
애니골번영회	0	1	0	1
위시티오케스트라	0	1	0	1
장항동기업인협회	0	1	0	1
방위협의회	0	1	2	3
노인회	0	0	2	2
청소년체육회	0	0	1	1
소계	51 (72.9)	17 (56.7)	29 (76.3)	97 (70.3)
지역공동체	19 (27.1)	13 (43.3)	9 (23.7)	41 (29.7)
전체합계	70 (100.0)	30 (100.0)	38 (100.0)	138 (100.0)

자료 :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 결과 보고서』, 2018.

[그림 3-8] 고양시의 주민자치위원회 협력 단체 현황



자료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 결과 보고서』, 2018.

2. 고양시의 마을공동체 현황

- 일반적으로 특정지역 내에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지역성과 공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왜냐하면 고양시 관내에서 자생적·자의적으로 형성·운영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제도권 내에서 존재 자체와 활동내용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재 고양시의 경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현황 파악은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함
- 2019년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양시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총 110개 이며, 이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 하면 총 106개 단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에 가장 많은 50개(47.2%) 단체가 활동 중이며, 다음으로 일산동구 32개(30.2%), 일산서구 24개(22.6%) 순으로 확인됨

[표 3-10] 고양시 관내 마을공동체의 일반구별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 %)

구 분	마을공동체 수	비중(%)
덕양구	50	47.2
일산동구	32	30.2
일산서구	24	22.6
합계	106	1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2019년 현재 고양시 관내 마을공동체의 활동유형은 총 16개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가장 많은 활동분야는 ‘문화’분야로 총 19개(17.9%)의 마을공동체가 운영 중이며, 다음으로는 ‘교육/보육’분야 17개(16.0%), ‘환경’분야 14개(13.2%), 그리고 ‘청소년’분야 11개(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1] 고양시 관내 마을공동체의 활동분야별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 %)

구 분	마을공동체 수	비중(%)
건강	3	2.8
공동체	6	5.7
교육/보육	17	16.0
노년	6	5.7
농촌활동	6	5.7
마을경제	2	1.9
문화	19	17.9
미디어	3	2.8
봉사	1	0.9
사회적 약자	6	5.7
세대교류	2	1.9
여성	5	4.7
자원조사	2	1.9
청년/청소년	11	10.4
체험	3	2.8
환경	14	13.2
합계	106	1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를 일반구별·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덕양구의 경우 총 50개의 마을공동체가 존재하며, 이중 '청년/청소년'분야의 공동체가 가장 많은 9개(18.0%)이며, 다음으로는 '문화'분야 7개(14.0%), '교육/보육'분야 6개(12.0%) 등으로 나타났음
 -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총 32개 마을공동체 중 '환경'분야 8개(2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보육' 및 '문화'분야가 각각 6개(18.8%) 등의 순으로 확인됨
 - 마지막으로 일산서구는 총 24개의 마을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문화'분야가 6개(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육/보육'분야 5개(20.8%)로 나타났음
 - 종합하면, 덕양구를 포함한 3개의 일반구별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분야가 각기 상이하하며 여타 분야와 달리 '문화'분야의 비중이 높았고, 덕양구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12] 고양시 관내 마을공동체의 일반구별·활동분야별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 %)

구 분		마을공동체 수	비중(%)
덕양구	건강	1	2.0
	공동체	5	10.0
	교육/보육	6	12.0
	노년	3	6.0
	농촌활동	3	6.0
	마을경제	2	4.0
	문화	7	14.0
	미디어	2	4.0
	봉사	1	2.0
	사회적 약자	1	2.0
	세대교류	2	4.0
	여성	1	2.0
	자원조사	1	2.0
	청년/청소년	9	18.0
	체험	3	6.0
	환경	3	6.0
	합계	50	100.0
일산동구	건강	1	3.1

구 분		마을공동체 수	비중(%)
	공동체	0	0.0
	교육/보육	6	18.8
	노년	3	9.4
	농촌활동	1	3.1
	마을경제	0	0.0
	문화	6	18.8
	미디어	0	0.0
	봉사	0	0.0
	사회적 약자	2	6.3
	세대교류	0	0.0
	여성	3	9.4
	자원조사	0	0.0
	청년/청소년	2	6.3
	체험	0	0.0
	환경	8	25.0
	합계	32	100.0
	일산서구	건강	1
공동체		1	4.2
교육/보육		5	20.8
노년		0	0.0
농촌활동		2	8.3
마을경제		0	0.0
문화		6	25.0
미디어		1	4.2
봉사		0	0.0
사회적 약자		3	12.5
세대교류		0	0.0
여성		1	4.2
자원조사		1	4.2
청년/청소년		0	0.0
체험		0	0.0
환경		3	12.5
합계		24	1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제2절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 정책 현황

1. 추진체계

-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조직으로 확장할 경우, 자치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추진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 조례에 규정된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주요기능, 행·재정 및 교육지원,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자치공동체 사업 및 지원,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및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임
-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각 개별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과 자치공동체사업이며, 해당 사업은 자발적 주민조직이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함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의 주요 추진주체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하나는 고양시 본청에 편재되어 있는 주민자치관련 전담부서이고, 다른 하나는 일선 행정동에 설치된 행정복지센터 내 담당 공무원임
 - 더불어,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정책의 주요 추진주체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동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양시청 내 전담부서와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행정지원협의회이며, 다음으로는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설

치되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위원회’이고, 마지막으로는 조례 제24조에 의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임

[표 3-13]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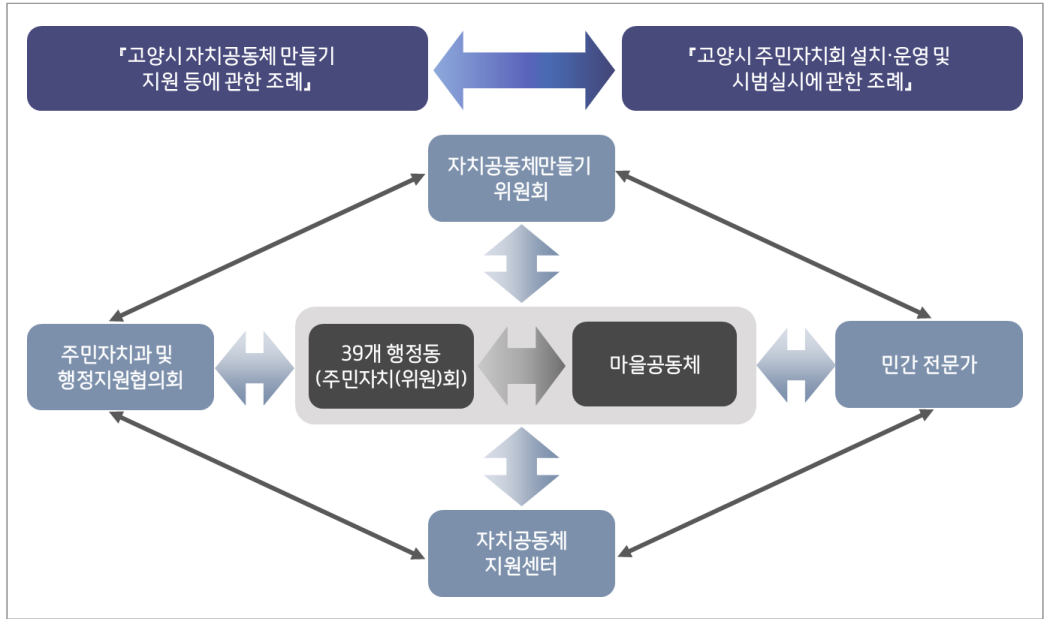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자치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책대상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치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 자치공동체사업 및 사업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자치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
추진계획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자치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전담조직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참여자치팀 ▣ 39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담당 공무원
	자치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자치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제1부시장 - 당연직: 자치공동체, 교육문화, 도시주택, 환경생태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 위촉직: 고양시의원, 주민,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자료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그림 3-9] 자치공동체 만들기 추진체계



자료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고양시의 연도별 사업규모

1)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사업 현황

(1) 2019년 지원 규모

- 2019년 덕양구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858,861천원이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인 창릉동이 81,868천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로는 행주동이 77,060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 받고 있는 상황임
- 지원종류별로 살펴보면, 회의수당이 380,160천원(4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독자사업 203,907천원(23.7%), 운영비 75,942천원(8.8%)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4]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규모 현황(덕양구)

(단위: 천원, %)

구분	독자 사업	운영비	회의 수당	자원 봉사원	간사 실비	워크숍	행사 운영	마을 신문	합계
덕양구	주교동	30,000	3,032	20,160	480	3,600	1,500		58,772
	원신동	4,100	3,200	20,160	960	3,600	1,500	3,000	36,520
	흥도동	18,000	4,616	20,160	2,496	3,600	1,500	3,000	53,372
	성서동		4,100	20,160	1,440	3,600	1,500	4,000	34,800
	성사2동		2,924	20,160	2,688	3,600	1,500	3,000	33,872
	효자동	4,800	2,000	18,000	960	3,600	1,500	3,000	33,860
	삼송동	3,000	2,816	20,160	1,536	3,600	1,500	4,000	36,612
	창릉동	46,000	4,472	21,600	2,496	3,600	1,500	2,200	81,868
	고양동	10,000	4,340	20,160	1,152	3,600	1,500	15,000	59,752
	관산동	25,000	4,550	20,160	1,440	3,600	1,500	3,000	59,250
	능곡동		4,112	20,160	1,152	3,600	1,500	3,000	33,524
	화정1동	9,027	6,000	20,160	1,920	3,600	1,500	1,500	43,707
	화정2동	2,200	6,000	20,160	1,920	3,600	1,500	3,500	38,880
	행주동	44,280	4,100	20,160	1,920	3,600	1,500	1,500	77,060
	행신1동		3,920	20,160	2,880	3,600	1,500	4,000	36,060
	행신2동	6,000	5,132	20,160	3,840	3,600	1,500	4,000	44,232
	행신3동	1,500	5,552	20,160	2,880	3,600	1,500	4,000	39,192
	화전동		2,976	18,000	672	3,600	1,500		26,748
대덕동		2,100	20,160	1,920	3,600	1,500	1,500	30,780	
합계	203,907 (23.7)	75,942 (8.8)	380,160 (44.3)	34,752 (4.0)	68,400 (8.0)	28,500 (3.3)	15,000 (1.7)	52,200 (6.1)	858,861 (1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2019년 일산동구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420,934천원이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인 풍산동이 59,862천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로는 식사동이 40,372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 받고 있는 상황임 - 지원종류별로 살펴보면, 회의수당이 221,040천원(5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운영비 51,098천원(12.1%), 간사실비 39,600천원(9.4%)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5]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규모 현황(일산동구)

(단위: 천원, %)

구분	독자 사업	운영비	회의 수당	자원 봉사원	간사 실비	워크숍	행사 운영	마을 신문	합계	
일산 동구	식사동	1,560	6,000	20,160	3,552	3,600	1,500		4,000	40,372
	중산동		5,796	20,160	1,920	3,600	1,500		4,000	36,976
	정발산동	7,000	4,388	20,160	2,880	3,600	1,500		3,960	43,488
	풍산동	15,072	5,250	21,600	3,840	3,600	1,500	5,000	4,000	59,862
	백석1동		4,880	20,160	2,880	3,600	1,500		2,200	35,220
	백석2동		5,000	20,160	4,032	3,600	1,500		1,200	35,492
	마두1동		4,748	20,160	1,920	3,600	1,500		4,000	35,928
	마두2동		4,112	18,000	2,400	3,600	1,500		4,000	33,612
	장항1동		2,580	20,160	672	3,600	1,500			28,512
	장항2동		5,000	20,160	2,688	3,600	1,500		4,000	36,948
	고봉동		3,344	20,160	1,920	3,600	1,500		4,000	34,524
합계	23,632 (5.6)	51,098 (12.1)	221,040 (52.5)	28,704 (6.8)	39,600 (9.4)	16,500 (3.9)	5,000 (1.2)	35,360 (8.4)	420,934 (1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2019년 일산서구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347,164천원이며, 주업1동이 49,636천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지원종류별로 살펴보면, 회의수당이 180,000천원(5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운영비 47,320천원(13.6%), 자원봉사원 급식비 32,544천원(9.4%)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6]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규모 현황(일산서구)

(단위: 천원)

구분	독자사업	운영비	회의수당	자원봉사원	간사실비	워크숍	행사운영	마을신문	합계
일산서구	일산1동		4,820	20,160	1,440	3,600	1,500	2,000	33,520
	일산2동		5,000	20,160	4,320	3,600	1,500	2,500	37,080
	일산3동		5,456	20,160	2,880	3,600	1,500	2,500	36,096
	탄현동		6,000	20,160	4,800	3,600	1,500	4,000	40,060
	주엽1동	10,000	5,576	20,160	4,800	3,600	1,500	4,000	49,636
	주엽2동		4,628	20,160	2,688	3,600	1,500	3,900	36,476
	대화동		4,808	20,160	3,360	3,600	1,500	4,000	37,428
	송포동	4,500	5,624	20,160	5,760	3,600	1,500		41,144
송산동		5,408	18,720	2,496	3,600	1,500	4,000	35,724	
합계	14,500 (4.2)	47,320 (13.6)	180,000 (51.8)	32,544 (9.4)	32,400 (9.3)	13,500 (3.9)	0 (0.0)	26,900 (7.7)	347,164 (1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2) 독자사업 지원 규모

○ 2018년과 2019년의 행정동별 독자사업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 먼저, 2018년의 경우 총 332,560천원이 지원되었고, 이 중 덕양구 흥도동의 ‘마을 꽃길 가꾸기, 굴다리 터널 벽화사업’에 가장 많은 55,000천원이 지원되었고, 다음으로는 행주동 42,500천원, 원신동 41,000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19년에는 총 259,539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덕양구 창릉동의 ‘드론과 함께’ 사업에 46,000천원이 지원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행주동 44,280천원, 주교동 30,000천원 등의 순으로 지원되고 있음

[표 3-17] 연도별 행정동 독자사업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사업내용	지원액	
2018	덕양구	주교동	마상공원 벽화조성사업, 바다리기념식	17,000
		원신동	역사문화탐방, 표고버섯재배교육, 화분식재	41,000
		흥도동	마을 꽃길 가꾸기, 굴다리 터널 벽화사업	55,000
		성서동	수역이마을 표시석 안내판 설치	15,000

연도	구분	사업내용	지원액		
2019		성사2동	국사봉둘레길 걷기 운영비	500	
		효자동	(구)마차길안내판설치	2,600	
		삼송동	창릉천에서 놀자	3,000	
		고양동	아름다운 높빛거리 조성	20,000	
		관산동	더불어농장, 자전거 도로, 벽화거리, 마을장류체험	32,500	
		능곡동	북카페 설치	20,000	
		행주동	보금자리 고쳐주기, 벽화거리, 꽃길가꾸기	42,500	
		행신2동	내고장 바로알기	3,000	
		대덕동	유휴지 공간 썬지공원 조성	5,000	
	일산 동구	식사동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1,560	
		중산동	보도 바닥 트리아트 조성	12,000	
		정발산동	꽃길 조성	10,000	
		풍산동	청소년 문화거리, 청소년 위원회, 건강길, 지역화폐사무국	16,100	
	일산 서구	탄현동	가로수 화단 초화식재	9,000	
		주엽동	청소년 환경교육, 언제나 청춘교실	8,000	
		송포동	대화천 주변 산책로 꽃길 조성, 트랙터용 제초기	18,800	
	소계			332,560	
		덕양구	주교동	바다리 공원 정비	30,000
			원신동	역사문화탐방, 표고버섯재배교육, 화분식재	4,100
			흥도동	문화유산 바로알기 사업	18,000
			효자동	창릉천 주변 자전거 문화탐방 사업	4,800
			삼송동	창릉천에서 놀자	3,000
			창릉동	드론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드론 교육)	46,000
고양동			높빛거리 조성	10,000	
관산동			관산더불어농장 및 공릉천 자전거도로환경조성, 마을전통장 담그기 체험	25,000	
화정1동			꽃우물 북카페 운영비, 하하호호 캠프	13,027	
화정2동			신나는 어린이장터, 벽화거리 물청소	7,200	
행주동			보금자리 고쳐주기 사업, 꽃길가꾸기 등	44,280	
행신2동		내고장 바로알기	6,000		
일산 동구		식사동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 청소년 자치위원회 문화행사	6,560	
		정발산동	춤추는 빗자루	7,000	
		풍산동	주민자치회 청소년위원회, 지역화폐사무국, 주민활동 영상제작	20,072	
일산 서구		주엽동	청소년환경교육, 언제나 청춘교실	10,000	
		송포동	대화천 주변 산책로 꽃길 조성	4,500	
소계			259,539		
전체합계			592,099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3)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원 사업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인 창릉동과 풍산동에 대한 연도별 보조금 지원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7년의 경우에는 총 43,500천원이 지원되었고, 창릉동에서는 ‘마을 지명 유래 머릿돌 설치’사업에 10,000천원, 풍산동에서는 ‘주민 총회 운영 등’사업에 33,500천원이 소요되었음
 - 2018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71.9%가 증가한 74,770천원이 보조되었으며, 창릉동은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 등’에 17,270천원, 풍산동은 2017년과 동일하게 ‘주민 총회 운영 등’사업에 57,500천원이 투입되었음

[표 3-18]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기간
			신청액	지원액	자부담	반납액	
2017	창릉동	마을 지명 유래 머릿돌 설치	10,000	10,000	0	29	03. ~ 12.
	풍산동	주민 총회 운영 등	33,500	33,500	0	0	03. ~ 12.
	소계		43,500	43,500	0	29	-
2018	창릉동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 등	17,270	17,270	243	1,927	03. ~ 12.
	풍산동	주민 총회 운영 등	57,500	57,500	0	0	03. ~ 12.
	소계		74,770	74,770	243	1,927	-
합계			118,270	118,270	243	1,956	-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2)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현황

(1) 연도별 지원 규모

- 고양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마을단위의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12년 19개 사업에 3억원의 예산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현재 110개 사업에 3.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425개의 사업에 2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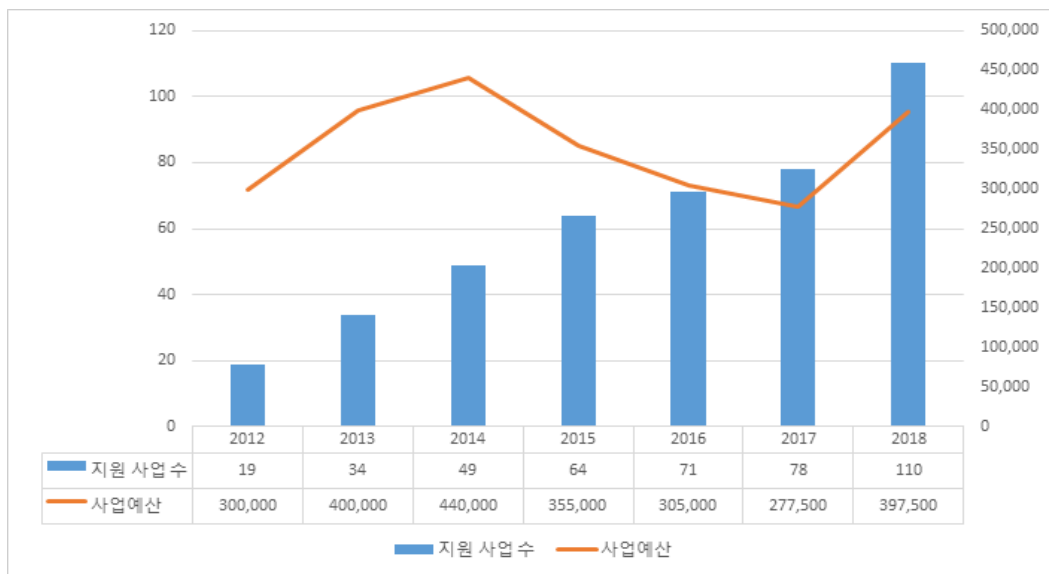
[표 3-19] 연도별 공동체 지원 사업 규모

(단위 개, 천원)

구분	지원 사업 수	사업예산
2012	19	300,000
2013	34	400,000
2014	49	440,000
2015	64	355,000
2016	71	305,000
2017	78	277,500
2018	110	397,500
합계	425	2,475,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3-10] 연도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이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2) 2019년 지원 규모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19년 고양시 관내 마을공동체에 대한 고양시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은 5개 유형의 총 126개 사업에 232,375천원의 예산을 지원 중에 있음
 - 구체적으로 사업지원 유형은 성장단계에 따라 씨앗기, 성장기, 자립기 등으로 구분하여 마을공동체의 성장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마을공동체 간의 네트워크역량 강화차원에서 컨소시엄 형태, 공동주택 내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공동체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음
 - 지원사업 유형별 규모를 살펴보면, 성장단계는 총 113개 사업에 214,375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는 6개 사업, 공동주택 형태는 7개 사업에 18,000천원이 지원되고 있음

[표 3-20]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규모

(단위: 개, 천원)

지원유형		지원 공동체 수	지원 규모		
			사업수	예산	
성장 단계	씨앗기	상반기	40	40	39,796
		하반기	25	25	24,530
	성장기	38	38	108,289	
	자립기	10	10	41,760	
	소계	113	113	214,375	
컨소시엄	마을공동체	6	6	-	
공동주택	아파트공동체	7	7	18,000	
합계		126	126	232,375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1) 신청금액

-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지원 유형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 먼저, 씨앗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상반기는 총 40개의 사업에 39,796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요 활동지역별로 구분하면, 덕양구 17개 사업, 일산동구 12개 사업, 일산서구 11개 사업 등이며, 행정동 중에서는 화정동이 6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사업분야별로는 ‘교육/보육’이 8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환경’ 7개, ‘문화’ 및 ‘사회적 약자’ 각각 5개 사업 등으로 확인되었음
- 사업분야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덕양구의 경우에는 ‘교육/보육’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았고, 일산동구는 ‘환경’분야, 일산서구는 ‘문화’분야의 사업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3-21]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씨앗가: 상반기)

(단위: 천원)

활동지역	공동체명	사업명	사업분야	지원액	
덕양구	대자동	알록달록 천문대	뒤뜰 별 맞이	체험	936
	도내동	모여라, (보드)캠동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부터의 탈출!!!	교육/보육	1,000
		다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전래놀이 한마당	문화	942
	선유동	불이 몸바라기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로 가는 건강한 몸과 마음 만들기	건강	1,000
	성서동	성서동 이미용 행복나눔 봉사팀	별 모래 머리 방	복지	946
	원당동	든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청년	1,000
	주교동	배다리 소리꾼	얼씨구 시니어	노년	1,000
		걷기여찬	걸으며 나누는 확실한 행복	환경	1,000
	토당동	행주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행주동어린이주민자치위원회'운영	청소년	1,000
	행신동	보고십대(十多)	1040~세대공감^^ 모두가 해보고~~~~	세대교류	1,000
	화전동	행복가득 목공소	네모 안에 마을이 있다 (화전마을 텃밭상자)	교육/보육	1,000
	화정동	We-story	우리 마을 최고의 이야기꾼을 찾아라!	교육/보육	1,000
		은빛마을/글길	생활 속의 문학, 글과 함께하는 여로	노년	1,000
		휴: 도시락	텃밭에서의 하루 (재료의 산책)	농촌활동	1,000
		텃밭가는 줌마	힐링 텃밭	농촌활동	1,000
		손말누리	손으로 말을 걸다	사회적약자	1,000
		청년생태환경활동가연구모임	아야 아야 지구가 아파요!	환경	1,000
일산동	마두동	무중력 청년 및 청소년 모임	무중력 청년 및 청소년 모임 만들기	청소년	1,000
		꿈자락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는 가족공동체	환경	1,000
	백석동	만들레 혈맹	나의 몸, 내 몸의 지혜	건강	972

활동지역	공동체명	사업명	사업분야	지원액	
구	정발산동	백석장애인문화복지회	중증장애인들과 비장애인과의 화합을 통한 각종 문화체험행사	사회적 약자	1,000
		수어랑	손으로 말해요	사회적 약자	1,000
	알토란	핑크양상블	찾아가는 우쿠렐레 앙상블 공연	문화	1,000
		비에코	정발산 생태육아 나들이	환경	1,000
	중산동	하나들나	벌 보존 활동을 통한 고양시 도시숲 기능 살리기	환경	1,000
		책 읽는 마을 사람들	나를 채우는 감성 놀이터 '까직까직'	교육/보육	1,000
	풍동	그림책사랑연구소	그림책으로 말이 통하는 아빠들의 모임	교육/보육	1,000
		꿈지락 놀이터	함께 걷는 동행	교육/보육	1,000
일산서구	대화동	꿈꾸는 텃밭Nongbu	녹색은 꿈빛!	농촌활동	1,000
	덕이동	비행기	다문화엄마들의 동화로 소통하기	사회적 약자	1,000
	일산동	꽃손	아가 냄새 간직하기	교육/보육	1,000
		선한나라 마을공동체	시가 있는 마을	문화	1,000
		여름이와 가을이의 푸른마을 나들이	푸른마을 나들이(마을 생태공원 체험단)	환경	1,000
		퍼플민	노래를 만들고, 대중앞에 노래를 부른다	문화	1,000
	주엽동	지구 지킴이 도시농부	텃밭은 행복 공동체	농촌활동	1,000
		꿈꾸는 목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	1,000
		청소년 동아리 두루두루	두루두루	사회적 약자	1,000
	탄현동	마리골드	꽃보다 아름다운 내 마음	교육/보육	1,000
		탄현동 알리미	탄현동 명소 구석구석 한바퀴	세대교류	1,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다음으로 씨앗기의 하반기 지원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24,530천원의 예산이 신청되어 진행되고 있음
 -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요 활동지역별로 구분하면, 덕양구 12개 사업, 일산동구 2개 사업, 일산서구 11개 사업 등이며, 행정동 중에서는 화정동, 고양동, 탄현동이 각각 4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사업분야별로는 '문화'가 12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육/보육' 8개, '사회적 약자' 및 '환경' 각각 2개 사업 등으로 확인되었음
 - 사업분야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덕양구의 경우에는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았고, 일산서구는 '교육/보육'분야의 사업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3-22] 2019년 마을공동체 자원 사업(싸앗가 하반기)

(단위: 천원)

활동지역	공동체명	사업명	사업분야	지원액	
덕양구	고양동	푸른 양 친구들	함께 크는 푸른 마을	문화	940
		높빛문화사랑	전통 혼례를 배워요	문화	1,000
		고양동 엄마들	엄마들의 행복한 짬	문화	970
		마을사랑방	열린 문화	문화	1,000
	삼송동	바신 40플러스	한땀한땀 구슬땀	네트워크	1,000
	성사동	두뇌톡톡 놀이 봉사단	아름다운 실버 말랑말랑 두뇌개발	사회적 약자	1,000
	신원동	더테라스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보드야 놀자	교육/보육	1,000
	행신동	하하호호	마음두드림	문화	970
	화정동	봄햇살	봄햇살(20~40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의)교류및 교육	교육/보육	1,000
		극단 <샐러리맨>	샐러리맨	문화	1,000
지역공동체 행복한 마을 별빛밤		행복한 마을 아나바다 축제	문화	1,000	
동네 엄마들		건강한 엄마들	문화	1,000	
일산동구	성석동	야호마을공동체	마을 산책 지도 만들기	환경	1,000
	중산동	너도나도 미용마을	너도나도 미용마을을 함께해요.	교육/보육	1,000
일산서구	대화동	하하호호마을공동체	엄마손 요리	사회적 약자	1,000
	대화동	손뜨개 꽃뜨개	손뜨개 꽃뜨개 가로수길	교육/보육	1,000
	일산동	우행시	자고 있는 재봉틀 깨우기	환경	928
	일산동	꿈지락 지락	꿈지락 꿈지락 손으로 함께 놀아요	문화	1,000
	주엽동	장풍이 친구들	자기개발과 힐링하며 마을활동가로 일 하고픈 사람들~	교육/보육	1,000
	주엽동	꽃과 나무	식물을 통하여 소통과 나눔을 하며 자기개발과 마을활동가로 성장하고자 함	교육/보육	1,000
	주엽동	우크우크 눈누난나	살며, 노래하며	문화	1,000
	탄현동	뿌요뿌요하하	엄마와 아이가 함께 문화를 공유하여 만들어가는 전시회 탐방	문화	735
	탄현동	유아기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	소중한 유아의 부, 모와 함께 성장하는 자아형성 프로젝트	교육/보육	1,000
	탄현동	가치가치	같이 가치 가져!	교육/보육	1,000
	탄현동	푸지SONG사람들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 푸른밤의 멜로디	문화	987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성장단계유형 중 성장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은 총 38개 사업에 108,289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요 활동지역별로 구분하면, 덕양구 20개 사업, 일산동구 11개 사업, 일산서구 7개 사업 등이며, 행정동 중에서는 고양동이 5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사업분야별로는 ‘교육/보육’이 12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문화’ 10개, ‘환경’ 4개, ‘미디어’ 3개 사업 등으로 확인되었음
- 사업분야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덕양구와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교육/보육’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았고, 일산서구는 ‘환경’분야의 사업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3-23]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성장기)

(단위: 천원)

활동지역	공동체명	사업명	사업분야	지원액	
덕양구	강매동	희망의 행신탄	행신탄 어울림	문화	3,000
	고양동	높빛마을학교	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을학교	교육/보육	3,000
		고양동여성합창단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문화	3,000
		수호천사 청소년 봉사단	고양동 어디까지 가봤니?	자원조사	2,300
		고양동청소년지킴이	쑹!! 쑹!!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교육/보육	2,760
		꿈누리 어린이 합창단	꿈을 노래하는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3,000
	관산동	대자동합창단	노래로 하나되는 마을 공동체 모임	문화	3,000
	대자동	높빛-청소년공감아지트	공감, 그 후	문화	3,000
	덕은동	행복한 덕은동 가꾸기 협의회	덕은동 가꾸기	체험	3,000
	삼송동	삼송이야기제작단	Hi, 삼송TV	미디어	2,850
	성사동	소통부업	회복적대화/소통부업	교육/보육	2,300
	신평동	꿈자락	친구야! 꿈잡(job)으러 가즈아~~~~	교육/보육	3,000
	토당동	미세스덕양	건강한 먹거리	건강	2,290
	행신동	행신동 주민자치위원회	낭랑 100세, 니가 있어 봄이야!	교육/보육	2,820
		플렌B	마을공동체-공유장터를 만나다	마을경제	3,000
		예그리나	선율의 향기로 마음을 맑히다'	문화	3,000
	행주내동	행주치맘	행주산성 푹푹박사	교육/보육	2,900
	행주동	행주산성지역발전위원회	깨어나라 행주드레!	교육/보육	2,876
	화정동	창작공간-시작	희곡 따라 떠나는 예술여행!	문화	3,000
더불어꿈		별이 빛나는 고양 FM	미디어	3,000	
일산동구	마두동	생태텃밭정원연구회	자원 재활용은 우리 손으로부터	환경	3,000
	마두동	빛자	폐품의 화려한 변신	교육/보육	3,000
	백석동	히즈가든 문화 발전소	마을의 쉼터 및 문화공간 발돋움	교육/보육	1,800
	성석동	자유풍	얼썬! 자유풍 마을나눔 품물공연	문화	3,000
	장항동	배움과나눔	배움과 나눔	문화	3,000
	정발산동	마을공동체-공유마을	인생이모자를 시작하는 사람들!	노년	3,000

활동지역	공동체명	사업명	사업분야	지원액
정발산동	따로 또 같이	나의 텃밭, 모두의 반찬	농촌활동	2,300
	북두리울림	나도 마을난타예술가!!!	문화	3,000
	꿈꾸는 씨앗	파란 하늘을 돌려줘	환경	2,993
	위드(with)	고양시 학교대표주자들!!학교에서 마을로!	교육/보육	3,000
	연리지-일산실버대학	찾아가는 실버대학	교육/보육	2,100
일산서구	꿈의환경가족봉사단	꿈봉이네와 함께하는 구석구석 고양시	환경	3,000
	더봄여성합창단	골방 하모니, 빛나다!	문화	3,000
	와야누리	거리를 재단하고 옷장을 털어 동네를 바꾸자!	환경	3,000
	심심풀이맘	배워서 남주기	교육/보육	3,000
	일산 FM	마을미디어공동체 '일산르' 미디어 교육 및 공개방송	미디어	3,000
	소동	삐뚤빼뚤 신사임당	사회적 약자	3,000
	갯문담	갯년기탈출을 위한 여성들의 문화모임	체험	3,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성장단계유형 중 자립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41,760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요 활동지역별로 구분하면, 덕양구 4개 사업, 일산동구 2개 사업, 일산서구 4개 사업 등이며, 행정동 중에서는 행신동이 2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사업 분야별로는 ‘교육/보육’이 4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문화’가 3개 사업 등으로 확인되었음
 - 사업 분야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 모두 다양한 사업 분야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3-24] 2019년 마을공동체 자원 사업(자립기)

(단위: 천원)

활동지역	공동체명	사업명	사업분야	지원액	
덕양구	고양동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	다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문화	2,847
	신원동	신원마을2단지 주민자치봉사회	행복한 마을 만들기	세대교류	4,686
	행신동	고양평화청년회	워라밸 청년 락 페스티벌	청년	5,000
	행신동	보물상자	신나는 엄마학교 시즌3	교육/보육	3,000
일산동구	성석동	고양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 늘 푸른마을 만들기	교육/보육	3,227
	중산동	중산 실버리 합창단	중산동의 하모니! 어르신 합창교실	문화	5,000
일산서구	구산동	파랑새	시간여행자들의 '신 고양8경' 영상탐사	자원조사	3,000
	대화동	행복한 교육 재미공작소	꽁작꽁작 즐겁고 재미있는 마을살이	교육/보육	5,000
	일산동	불어라 풍물바람	전통 놀이문화 계승 발굴 사업	문화	5,000
	주엽동	고양시 지명설화 연구회	고양지명설화해설사 과정 및 고양 누리길 답사여행	교육/보육	15,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사업지원 유형 중 컨소시엄 형태를 살펴보면, 총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개별 사업은 3개 이상의 마을공동체가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음
 -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요 활동지역별로 구분하면, 덕양구 4개 사업, 일산동구 2개 사업 등이며, 행정동 중에서는 화정동이 2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사업분야별로는 '청소년'이 3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세대교류' 2개 사업 등으로 확인되었음

[표 3-25] 2019년 마을공동체 자원 사업(컨소시엄)

(단위: 천원)

활동지역	공동체명			사업명	사업분야	
	공동체1	공동체2	공동체3			
덕양구	고양동	수호천사 청소년 봉사단	사람공동체 위클리	건학연	미래꿈 공작소	청소년
	화전동	화전마을학교	화전주민자치위 원회	자~수대!!	마을꿈 프로젝트 - 화전마을학교	세대교류
	화정동	플리잉덕	사랑 나눔 공동체	부모가 함께 하는 육아공동체	청소년 올바로 세우기	청소년
	덕은동	소통부엌	덕양중학교 청개구리방	행복가득	마을로 잇는 소통부엌	세대교류
일산동구	마두2동	D.N.A	마두봉사회	치보사	BIM(Because I'm Mother 엄마라는 이유로)	청소년
	중산동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모임	근육파(근육키워 육아하는 파파들)	공동육아 모임	미세먼지 없는 실내놀이터 만들기	교육/보육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사업지원 유형 중 공동주택 형태를 살펴보면, 총 7개 사업에 18,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요 활동지역별로 구분하면, 덕양구 5개 사업,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각각 1개 사업 등임
 - 사업 분야별로는 '축제'가 3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나눔'이 2개 사업 등으로 확인되었음

[표 3-26] 2019년 마을공동체 자원 사업(아파트공동체)

(단위: 천원)

활동지역	공동체명	사업명	사업분야	지원액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10단지 콩나물공동체	콩나물 나눔 아파트	체험	2,800
	흥도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삼송마을15단지 축제	축제	1,300
	주교동	주교백산 사랑회	백산사랑으로 하나로	나눔	2,800
	성사동	원당대림e편한씨상 공동체	녹색장터 및 e편한 음악회 등	축제	2,800
	삼송동	동산마을 22단지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대표회의	전통음식 아카데미 먹거리 (술, 막걸리, 고추장, 된장, 간장, 식초) 만들기	나눔	2,800
일산동구	중산동	행복한 우리 마을	늘 푸른 하늘마을 만들기	축제	2,700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 동의 사랑	동의 사랑 행복을 우리 함께 나누어요	세대교류	2,8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제3절 행정동별 특성분석 및 지역유형화

- 현행 우리의 법률체계에 따라 지역의 유형분류는 인구기준을 단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역을 분류하여왔음
 -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을 구분하고, 지방자치체제의 계층적 요인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왔음
 - 물론, 지역의 행정수요를 측정하고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인구기준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1995년 민선 이후 날로 증가하고 복잡·다양화되어 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의 개발·적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구기준 만으로는 한계가 노정됨
 - 특히, 도시기능과 농촌기능을 모두 내포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이 대부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성격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됨
- 이에 본 절에서는 고양시 관내 39개 행정동이 가지고 있는 내적특성에 기반하여 유형을 분류하고자 함
 - 유형분류방법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군집수에 대한 연구자의 가치판단을 제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전에 활용하였고, 군집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추가하였음

1. 분석요인 설정

- 고양시 관내 39개 행정동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동별 차별화가 가능한 분석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바, 현재 획득 가능한 모든 통계지표를 활용하였음

- 이에 따라 2018년 고양통계연보와 사업체조사보고서, 내부보고서 등을 통해 필요한 변수를 추출하였음
- 행정동의 특성별 유형화를 위해 활용된 변수는 인구특성, 사회특성, 산업특성, 행정특성 등으로 구분하였고, 총 세부변수는 인구비중변수를 포함한 22개임
- 일관된 분석을 위해 개별 세부요인의 단위를 39개 행정동별 비중(%)으로 통일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변수의 단위가 다름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점수(z-score)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표 3-27] 행정동별 유형화를 위한 분석요인 체계

분석요인	단위	출처	기준연도	대상	
인구특성 요인(8)	▣ 인구비중	%	고양통계연보	2017	행정동
	▣ 세대비중	%	고양통계연보	2017	
	▣ 남성비중	%	고양통계연보	2017	
	▣ 여성비중	%	고양통계연보	2017	
	▣ 65세이상 고령자비중	%	고양통계연보	2017	
	▣ 영유아인구비중	%	내부보고서	2016	
	▣ 인구밀도	km ² /인구	고양통계연보	2017	
	▣ 평균연령	세	고양통계연보	2017	
사회특성 요인(5)	▣ 기초생활수급자비중	%	내부보고서	2015	
	▣ 장애인비중	%	내부보고서	2015	
	▣ 외국인비중	%	고양통계연보	2017	
	▣ 다문화가족비중	%	내부보고서	2015	
	▣ 의료기관비중	%	내부보고서	2015	
산업특성 요인(5)	▣ 사업체수비중	%	사업체조사보고서	2017	
	▣ 노동자수비중	%	사업체조사보고서	2017	
	▣ 노동조합수	개	고양통계연보	2017	
	▣ 노동조합원수	명	고양통계연보	2017	
	▣ 농업인구비중	%	내부보고서	2015	
행정특성 요인(4)	▣ 동공무원수	명	고양통계연보	2017	
	▣ 공공체육시설비중	%	고양통계연보	2017	
	▣ 문화재비중	%	고양통계연보	2017	
	▣ 문화예술공간비중	%	고양통계연보	2017	

2. 요인분석

- 39개 행정동의 특성별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에 앞서 군집수를 결정하기 위해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음
 -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들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변수들을 제거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베리맥스 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활용하였음
- 요인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분석체계와 마찬가지로 4개의 요인으로 압축되었으나, 남성·여성비중 등 모형의 공통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세부변수는 제외하였음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Kaiser-Meyer-Olkin(KMO) 값이 .687로 평범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검정치(sphericity)는 441.066, 유의확률 값은 .000으로 적합한 모형으로서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표 3-28]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기준요인	세부요인	추출 요인				공통성
			1요인(인구)	2요인(사회)	3요인(산업)	4요인(행정)	
인구		▣ 인구비중	.962	.065	.070	.071	.939
		▣ 세대비중	.959	.141	-.010	.115	.953
		▣ 65세이상 고령자비중	.925	.247	-.099	.065	.930
		▣ 영유아인구비중	.913	-.048	.190	-.036	.874
사회		▣ 장애인비중	.904	.325	-.110	-.033	.936
		▣ 기초생활수급자비중	.584	.287	-.338	-.208	.581
		▣ 의료기관비중	.504	-.178	-.344	.301	.495
사회		▣ 다문화가족비중	.205	.823	-.184	.071	.758
		▣ 외국인비중	.127	.819	.089	.010	.695
산업		▣ 농업인비중	.287	-.058	.839	-.014	.790
행정		▣ 문화재비중	-.214	-.017	.659	-.135	.498
		▣ 문화예술공간비중	.049	-.154	-.274	.834	.796
		▣ 공공체육시설비중	-.001	.421	.111	.742	.741
고유치			5.472	1.801	1.525	1.188	
고유치/분산율			42.09	13.85	11.73	9.14	
Kaiser-Meyer-Olkin			.687				
Bartlett의 구형검정치			441.066				
유의확률			.000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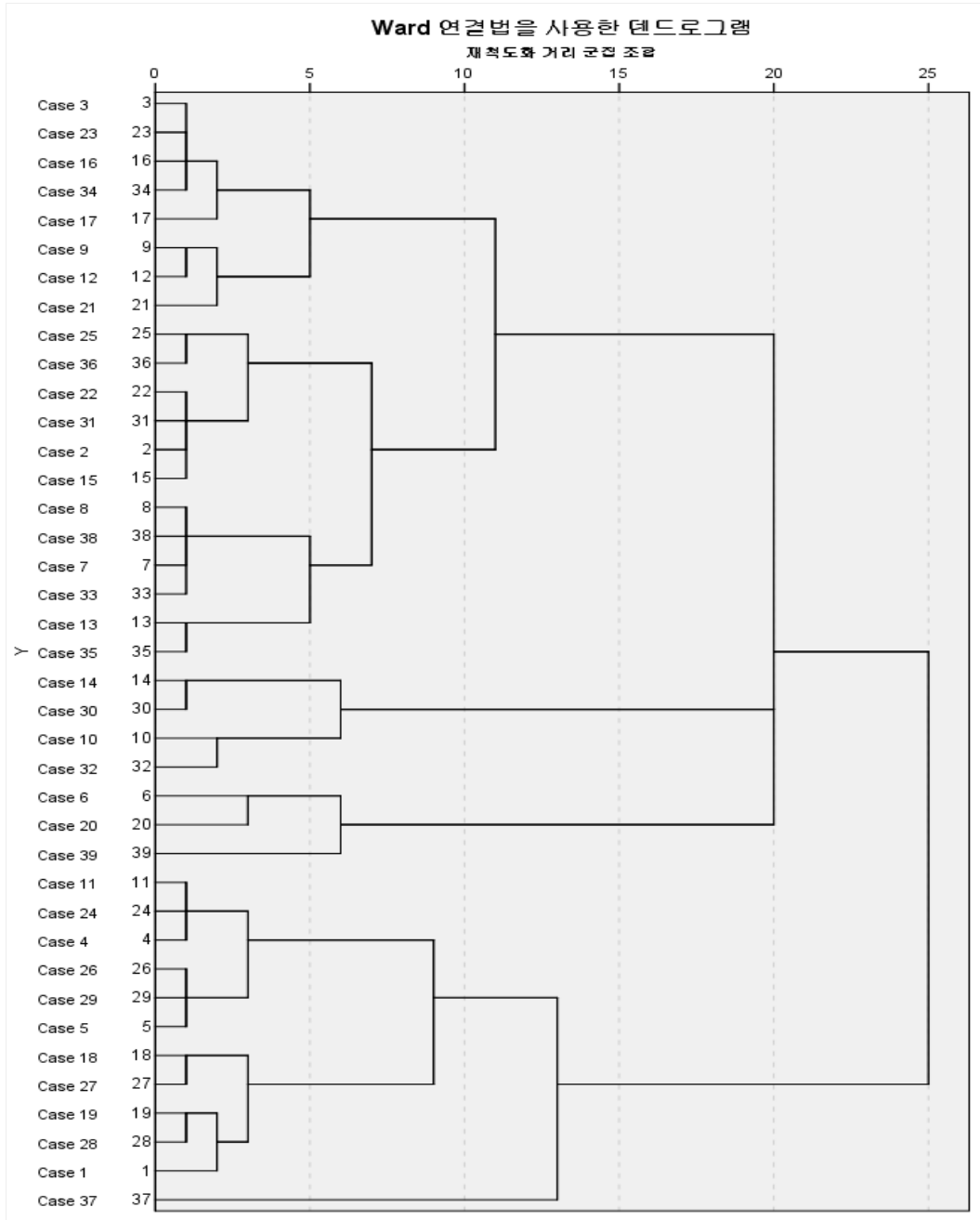
3. 군집분석

- 앞서 확인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실시하였음
 - 군집분석방법은 기술적인 방법에 따라, 측정값과 중심점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측정값 간의 평균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측정값 간의 평균거리의 제곱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값 간의 평균거리의 제곱(Squared Euclidean Distance: SED)을 이용하는 워드법(ward's method)을 활용하였음

[표 3-29] 워드법을 활용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구분	1군집(12)	2군집(20)	3군집(3)	4군집(4)
행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동 ▣ 성사1동 ▣ 성사2동 ▣ 능곡동 ▣ 화전동 ▣ 대덕동 ▣ 백석1동 ▣ 마두1동 ▣ 마두2동 ▣ 장항1동 ▣ 장항2동 ▣ 대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신동 ▣ 흥도동 ▣ 삼송동 ▣ 창릉동 ▣ 고양동 ▣ 화정1동 ▣ 화정2동 ▣ 행신1동 ▣ 행신2동 ▣ 행신3동 ▣ 중산동 ▣ 정발산동 ▣ 풍산동 ▣ 백석2동 ▣ 일산1동 ▣ 일산3동 ▣ 탄현동 ▣ 주엽1동 ▣ 주엽2동 ▣ 송포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자동 ▣ 식사동 ▣ 송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산동 ▣ 행주동 ▣ 고봉동 ▣ 일산2동

[그림 3-11] 워드연결법을 사용한 덴드로그램



-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추출된 4개의 군집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1군집에 포함된 주교동 외 11개 행정동은 여타 다른 행정동에 비해, 인구, 세대, 고령자, 영유아인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농업인, 문화재 등은 낮은 수준을 보이나, 의료기관, 문화예술공간, 공공체육시설 등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음으로 2군집에 포함된 원신동 외 19개 행정동은 여타 다른 행정동에 비해, 다문화가족, 외국인, 문화재, 문화예술공간, 공공체육시설은 낮은 수준이나, 인구, 세대,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기관, 농업인 등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3군집에 포함된 효자동 외 2개 행정동은 여타 다른 행정동에 비해, 세대,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기관, 다문화가족, 문화예술공간, 공공체육시설 등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인구, 영유아, 외국인, 농업인, 문화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마지막으로 4군집에 포함된 관산동 외 3개 행정동은 여타 행정동에 비해, 인구, 영유아, 의료기관, 농업인, 문화예술공간 등은 낮은 수준이나, 세대,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문화재, 공공체육시설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30] 군집별 특성분석

구분	특성	대상 행정동
1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비중, 세대비중, 고령자비중, 영유아비중, 장애인비중, 기초생활수급자비중이 낮으나, 의료기관비중은 다소 높음 ▣ 다문화가족비중, 외국인비중 낮음 ▣ 농업인구비중, 문화재비중 낮음 ▣ 문화예술공간비중, 공공체육시설비중 매우 높음 	주교동 외 11개 행정동
2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비중, 세대비중, 고령자비중, 영유아비중, 장애인비중, 기초생활수급자비중, 의료기관비중 매우 높음 ▣ 다문화가족비중, 외국인비중 낮음 ▣ 농업인구비중은 높으나, 문화재비중은 낮음 ▣ 문화예술공간비중, 공공체육시설비중 매우 낮음 	원신동 외 19개 행정동

구분	특성	대상 행정동
3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비중, 영유아비중은 높으나, 세대비중, 고령자비중, 장애인비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의료기관비중은 낮음 ▣ 다문화가족비중은 낮으나, 외국인비중은 높음 ▣ 농업인구비중, 문화재비중 매우 높음 ▣ 문화예술공간비중, 공공체육시설비중 매우 낮음 	효자동 외 2개 행정동
4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비중, 영유아비중, 의료기관비중은 낮으나, 세대비중, 고령자비중, 장애인비중, 기초생활수급자비중은 높음 ▣ 다문화가족비중, 외국인비중 매우 높음 ▣ 농업인구비중은 낮으나, 문화재비중은 높음 ▣ 문화예술공간비중은 낮으나, 공공체육시설비중은 높음 	관산동 외 3개 행정동

4. 분산분석

- 앞서 분석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군집유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 차원에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를 활용하였음
 - 최종적인 분석결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군집유형별로 상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1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동은 행정특성변수에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2군집은 인구특성변수에, 3군집은 산업특성변수, 마지막으로 4군집은 사회특성변수에 각각 특징적 모습을 띠고 있어, 개별 군집들 간의 명확한 차별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음

[표 3-31] 요인분석 결과

변수	군집유형				Scheffe 다중비교 검정						F값	유의 확률
	1(n=12)	2(n=20)	3(n=3)	4(n=4)	1~2	1~3	1~4	2~3	2~4	3~4		
인구	-.747	.488	-.043	-.168	.005	n.s	n.s	n.s	n.s	n.s	5.131	.005**
사회	-.060	-.323	-.297	2.025	n.s	n.s	.000	n.s	.000	.003	11.445	.000**
산업	-.462	-.114	2.614	-.000	n.s	.000	n.s	.000	n.s	.000	18.573	.000**
행정	.856	-.396	-.133	-.488	.003	n.s	n.s	n.s	n.s	n.s	6.026	.002**

p<0.05, *p<0.01

제4절 자치공동체 SWOT분석

1. SWOT분석의 의의

- Humphrey(2005)에 의해 고안된 SWOT분석기법은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직 또는 개인이 처한 내·외부환경 요인들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그리고 위협(Threat)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방향을 수립하는 기법을 칭함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직 또는 개인이 처한 내부환경에서 비롯된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며, 외부환경에 의한 기회를 채택하고 위협은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등의 전략수립이 가능함

[그림 3-12] SWOT 매트릭스(Martix) 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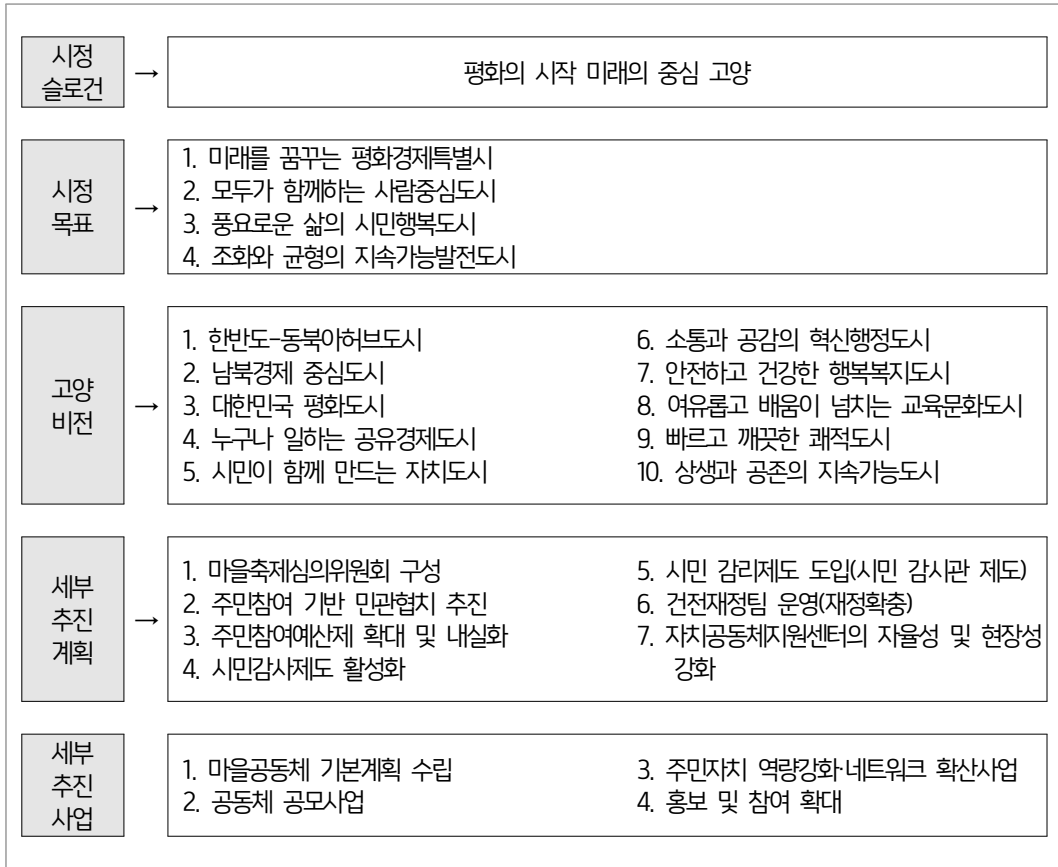
		내부환경	
		강점요인 (Strength)	약점요인 (Weakness)
외부환경	기회요인 (Opportunity)	① ② ③	① ② ③
	위협요인 (Threat)	① ② ③	① ② ③
		[S/O 전략]	[W/O 전략]
		① □ 강점 활용, 기회 포착 ② □ 기회 포착을 위한 강점 발굴 ③ □ 기회를 살릴 수 없는 약점은 무시	□ 강점 활용, 위협 회피 □ 위협 회피를 위한 강점 발굴
		[S/T 전략]	[W/T 전략]
		① □ 약점 보완, 기회 포착 ② □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 ③ □ 기회를 살릴 수 없는 약점은 무시	□ 약점 보완, 위협 회피 □ 약점 보완 불가, 위협 회피 불가 → 정면대결 또는 철수

자료 : Humphrey, "SWOT analysis for management consulting", *SRI alumni Newsletter*, 1(2005) : 7-8.

2. 고양시 지역공동체 생태계 SWOT분석

-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생태계 복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WOT분석을 위해서는 현행 고양시의 비전체계를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현행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의 자생역량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정책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양시의 중·장기적 비전 및 시정목표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임
- 현재 고양시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하여 4개의 시정목표와 10개의 비전, 그리고 각 개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체계화 되어 있음
 - 고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기획은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및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를 시정목표와 비전으로 설정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자율성 및 현장성 강화’를 설정하였음
 -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추진사업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 공모사업’,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확산사업’, 그리고 ‘홍보 및 참여 확대’ 등의 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있음
 - 종합하면, 현행 고양시의 비전체계 등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실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개별 마을공동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그림 3-13] 고양시 자치공동체 관련 비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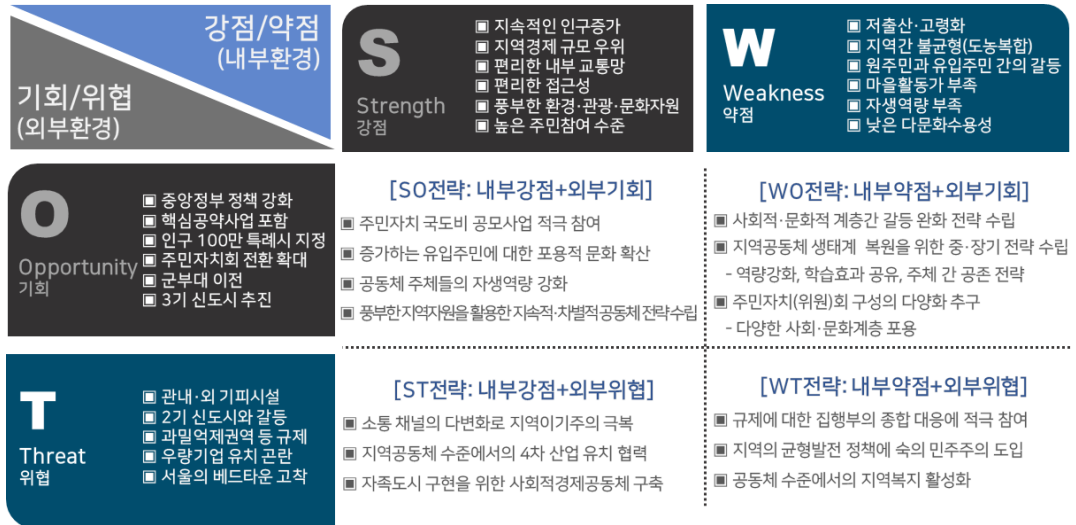


자료 : 고양시. 『민선 7기 공약사업실천계획』, 2019.

- 현행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실태를 토대로 하여 SWOT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내·외부 환경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먼저, 내부 환경요인으로 강점(Strenght)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규모의 상대적 우위, 편리한 내부 교통망 및 외부접근성, 풍부한 환경·환경·문화자원 보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약점(Weakness)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수준과 지역간 불균형, 원주민과 유입주민 간의 갈등, 마을활동가 부족, 지역공동체 주체의 자생역량 부족(높은 의존성), 그리고 낮은 다문화수용성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외부 환경요인으로 기회(Opportunity)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채택과 고양시의 핵심공약사업 추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추진, 자치분권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독려, 군부대의 이전,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위협(Threat)요인으로서는 고양시 관내·외 기피시설과 2기 신도시와의 갈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 우량기업 유치의 곤란함, 그리고 서울시의 베드타운 고착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내부 및 외부환경요인을 적용한 전략은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O전략, WO전략, ST전략, 그리고 WT전략 등으로 채택할 수 있음

[그림 3-14] 고양시 지역공동체 SWOT분석 결과



제5절 소결

- 본 장에서는 고양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주체, 즉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자치공동체 지원 정책 현황, 군집분석을 통한 39개 행정동의 특성분석 및 유형화, 그리고 고양시 지역공동체 생태계에 대한 SWOT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체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체들이 경쟁상대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인식의 확산이 요구됨
 - 현행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추진체계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로 구조적인 이원화가 되어 있어, 실질적인 공동체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토록 유지·발전시키는데 한계로 작용될 수 있음
 - 또한 해당 주체들을 지원하는 집행부의 추진구조 또한 이원화되어 있고, 전담부서에서 시행하는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도 상호 연계성이 느슨하여 시너지효과가 저해되고 있음
-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주체들의 자생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요구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는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을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지역공동체 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한편, 군집분석을 통해 39개의 행정동에 대한 내적 특성과 유형화를 진행한 결과 토대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물론, 데이터 구득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역적 특성의 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향후 지역

자원조사와 더불어 지역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 고양시의 지역공동체가 처한 내·외부 환경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강점은 표출화하여 부각시키고, 약점은 개선·보완하며, 기회는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위협은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수립·적용이 요구됨

제 4 장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분석

제1절 중앙정부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제2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제3절 경기도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제4절 소결

제절 중앙정부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1. 정책개요

1) 추진체계의 개요

-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은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한 지역공동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치공동체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체계는 없음
 - 자치공동체 지원정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된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은 없음
 -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 또는 외국인 처우개선 계획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동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체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역공동체에 관한 전국적 계획체계는 없음
 -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에서 중앙정부 부처간 유사사업, 즉 다른 부처의 유사한 지원사업이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부처별 차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역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2) 중앙부처별 자치공동체(지역공동체) 지원사업

- 지역의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임

- 이상의 중앙부처 이외에도, 환경부는 ‘자연생태우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산촌생태마을’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함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지원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자치공동체사업을 추진함
 -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주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기업’, ‘희망마을’, ‘정보화마을’, ‘평화생태마을’ 등임
 - 마을기업사업의 주요 사업유형은 지역특산물·자연자원의 활용 유형,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유형, 공공부문위탁유형,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유형, 자연생태 관광·자전거 활용 등 녹색에너지사업, 그리고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사업 등임
 - 희망마을 사업은 생활공간개선형 사업, 사회복지 확충형 사업, 수익사업 추구형 사업 등의 유형으로 추진됨
 - 정보화 마을 사업과 평화생태마을 사업은 특정한 사업유형으로 유형화되지 못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소득창출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는 주요 사업은 ‘농촌공동체 회사 육성사업’,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시·군 역량개발 사업’ 등임
 - 농촌공동체 회사 육성 사업은 ‘농식품 산업형’, ‘도농교류형’, ‘사회복지서비스 형’, ‘지역개발형’, ‘복합형’ 등의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시·군 역량개발 사업’ 등은 기초생활기반 확충형, 지역소득증대형, 지역경과 개선형, 지역역량강화형 등의 유형으로 추진됨
 - 이외에 ‘체험휴양마을만들기 사업’은 특정한 사업유형으로 유형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서 주민협의체를 조직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

- 럼 통로를 마련한 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
- 국토교통부의 주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으로,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고, 근린재생형은 중심시가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함

2. 추진근거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함
 - 특별법 제27조는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규정한 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고 규정함
- 특별법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주민화합 발전을 위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특별법 제28조 제2항 1호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에 대해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함
- 특별법은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해, 주민자치위원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법 제29조 제2항은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지역의 봉사자로 규정함
 - 또, 특별법 제29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을 규정함
- 이에 따라, 특별법에서의 주민자치회는 궁극적으로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화합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규정됨
 - 주민자치위원을 지역의 봉사자로 규정함
 -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시행에서 가정(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할 것을 규정함(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제2항)
 - 특히, 국민의 책임으로서 자립·자활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에 협력할 것을 규정함(법률 제7조 제2항)
- 「사회보장기본법」은 민간의 참여와 민간의 참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함(법률 제 27조 제2항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 드는 행·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함(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
 - 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규정함(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토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국가균

형발전 특별법 제4조 제3항)

- 발전계획은 부문별 발전계획의 수립(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과 시·도 발전계획의 수립(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를 포함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9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제1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보존(제15조)에 필요한 시책과,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제15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제16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제26조)

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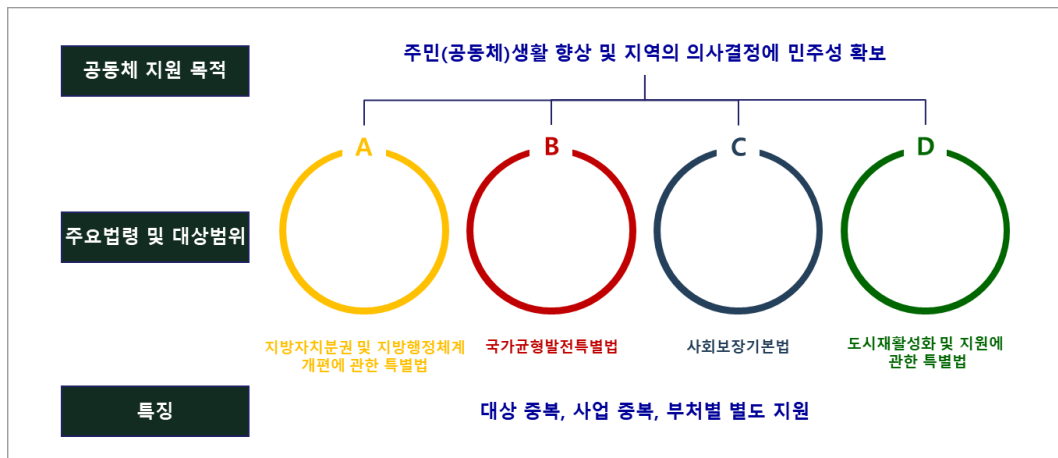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 구체적으로,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

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함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10년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국가가 중심으로 수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도시쇠퇴기기준 및 진단기준,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등 기준의 제시에 초점을 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그리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을 마련하고,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함
 -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심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의를 위하여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함(제26조의 3)
 -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함
 -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은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등을 수행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궁극적으로 재정지원, 협약체결, 정보 체계 구축 등임
 -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주택기금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 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주민,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함

[그림 4-1] 현행 자치공동체 지원체계의 특징



자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주요 사업 내용

1) 주민자치회사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
 - 주민자치회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소관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함
 -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지역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함
-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한계극복과 지역주민 중심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이 제시됨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강화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민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함
 - 지역주민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함
 - 행정과 주민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제시함
 - 지역주민을 포함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공급으로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도입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함
 - 첫째,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주민자치회 분회를 설치하도록 함
 - 둘째, 지역공동체 형성, 행정지원 기능, 기타 수익사업 등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포

괄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 셋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서 법률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표 4-1] 주민자치회 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사업자 ▣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사업체의 직원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중(2013 ~ 2019년)
전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소지역 단위의 혁신임
 - 읍·면·동 중심이란, 읍·면·동이 기점이 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의 최소단위의 공간적 영역으로서의 의미임
 - 공공서비스란, 중앙부처의 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민간위탁사무 등은 물론이고, 민·관 공동생산 서비스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서비스임

- 주민참여의 기본원칙 하에서, 민·관 협력, 공공서비스의 민·관 공동생산의 원리를 강조함
 - 공공서비스의 진행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의 주요 사업내용의 연계, 구체적으로, 주민총회 등이 계획하고, 민·관이 공동생산하며,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의 연계를 강조함
 - 소지역단위의 혁신으로써, 마을·읍·면·동 등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단위로, 주민과 마을의 혁신, 행정혁신, 사회혁신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내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하는 연계체계의 구축을 제시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보건·복지 서비스, 주민자치, 마을사업 등의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함

[표 4-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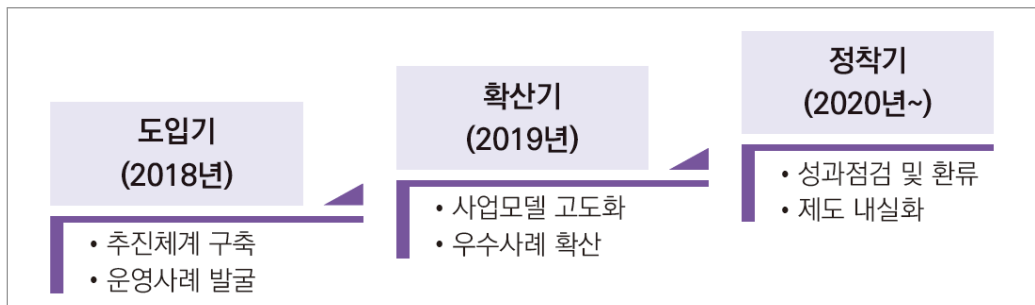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비전	내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
정책 목표	1.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2.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3.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 사업
	4. 주민자치, 전국마을에서 마을로
중점 과제	1-1.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
	1-2. 보건·복지 서비스 전담인력 확충·관리
	1-3.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창출
	2-1.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2-2.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3-1. 마을단위 지역사업 연계 지원
3-2. 시책사업을 통한 특화마을 모델 창출	
4-1. 우수사례 발굴 확산	
4-2.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자료 : 행정안전부. 『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2008, p. 4.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성과창출과 확산에 주력함

- 지방자치단체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우수사례,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현장의 변화요구를 반영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시범실시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및 확산에 주력함
- 궁극적으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즉 주민편의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개선·보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함

[그림 4-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로드맵



출처 : 행정안전부, 『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2008, p. 2.

- 주민자치 및 공동체 돌봄 활성화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추진함
 - 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의 연계·협력의 강화를 추진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 현 정부의 주민자치 추진원칙은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핵심주체로서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원칙으로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민자치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주민참여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임

3) 도시재생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은 도시재생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
 -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구분함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국가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사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을 목적으로 함

[표 4-3]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비교

구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전통적 산업집적지가 쇠퇴하여 새로운 산업구조 및 도시기능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 ▣ 도시기반산업이 무너지면서 특히 도시전반에 쇠퇴가 확산되고 심화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와 공공서비스 부족, 소득저하 등 삶의 질이 저하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전반적 경제수준의 정체 또는 쇠퇴지역, 특히 근린지역의 국부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 도심 또는 산업집적지 등에 새로운 기능의 부여와 고용기반창출을 통한 도시경제적 활력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하는 근린주거지의 주거환경과 상업, 생활여건을 복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내부 경제순환, 주민간 교류증진, 일자리 창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한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도시기능이 핵심사업 내에 도입되어야 함 ▣ 새로운 기능의 파급효과는 도시전체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사업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비 용자지원과 활성화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불가능함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나 설치비용을 보조하되, 총사업비 규모가 경제기반형보다 낮아 기반시설 지원규모도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 내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다양한 도시활동의 연계 ▣ 도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사업과 사업효과의 주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단위의 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의 프로그램

자료 : 김공양, 『도시재생사업 사례의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6, p. 19.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제기반형은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철도 역세권,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 핵심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함
 -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도시기능이 핵심사업 내에 도입되어 그 효과가 도시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함
 - 공공부문은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비용, 핵심사업에 대한 사업비 대출,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공공건축물의 보수·정비비용, 폐가·공가 매입 및 활용비용에 대해 지원함

- 활성화지역 내 개발사업구역을 제외한 곳에 대한 기반시설보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출자·보조, 마을기업관련 사전기획 및 운영비, 주민에 대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은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전문가 파견, 교육프로그램 등 도시재생 기반역량 강화지원에 초점을 둠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생활권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지역산업경제 재활성화 등을 목표로 함
 - 근린재생형은 주거복지와 공공서비스 부족, 소득저하 등 삶의 질이 저하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주거복지·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창출’,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함
 -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함
 -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상생을 유도하는 등 사회통합을 목표로 함
 -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추진과제로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경제 생태계 조성’, ‘폴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주거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공적임대공급을 추진함
 -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콤팩트 네트워크 도시구축,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지역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등을 추진함

-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재생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민간참여 모델링,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관리 등을 추진함
-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참여기반 조성,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
- ‘상가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협약 체계 활성화 지원, 임대료 안정공간(공동임대상가) 공급,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함

[표 4-4]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비전 및 목표

구분	주요 내용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정책 목표	1.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2. 도시활력 회복
	3. 일자리 창출
	4.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
중점 과제	1-1.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1-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1-3.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공적임대공급
	2-1. 콤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2-2.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2-3.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2-4.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3-1.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3-2. 민간참여 모델 마련 3-3.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리
	4-1. 지역의 도시재생역량강화 4-2. 지역주민의 참여기반조성 4-3.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4-4.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4-5. 상생협약 체계 활성화 지원 4-6. 임대료 안정공간(공동임대상가) 공급 4-7.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동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 접속일 2019.10.15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국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함
 -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기초조사단계, 계획수립단계, 의견청취·협의 단계, 심의 단계, 확정·공고 단계 등임

[표 4-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절차

구분	주요활동
기초조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통계자료, 현장조사 ▣ 주민·지역전문가 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도시재생자원 발굴
계획수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진단·여건분석·기본구상 전략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우선순위설정·자원조달계획 등
의견청취·협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 시장·군수의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심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확정·공고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확정에 따른 공고 및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014.

-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
 -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중 도시재생의 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함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임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임

[표 4-6]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구분	주요활동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현황, 인문·사회현황, 산업·경제 현황 측면의 쇠퇴진단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현황조사 항목에 따른 현황조사 및 인적자산 등 지역자산 조사 ▣ 해당지역 내 타부처, 타부서의 관련사업 계획 조사 ▣ 해당 지역의 향후 발전가능성, 거버넌스 구축정도 등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 평가 및 모니터링 과 연계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성과지표 제시
핵심콘텐츠 및 단위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경쟁력있는 핵심콘텐츠 제시 ▣ 핵심콘텐츠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 계획 제시
자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별 자원조달 주체와 자원의 단계적 확보방안 ▣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평가 및 점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점검·평가를 위한 모니터링·평가계획 마련

자료 :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017.

4) 마을기업육성사업

-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은 마을기업육성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임
 - 지역자원이란,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임
 - 지역문제란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의함
 - 지역공동의 이익은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되는 편익의 총합으로 정의함
 - 마을이란,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임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자립형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청년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등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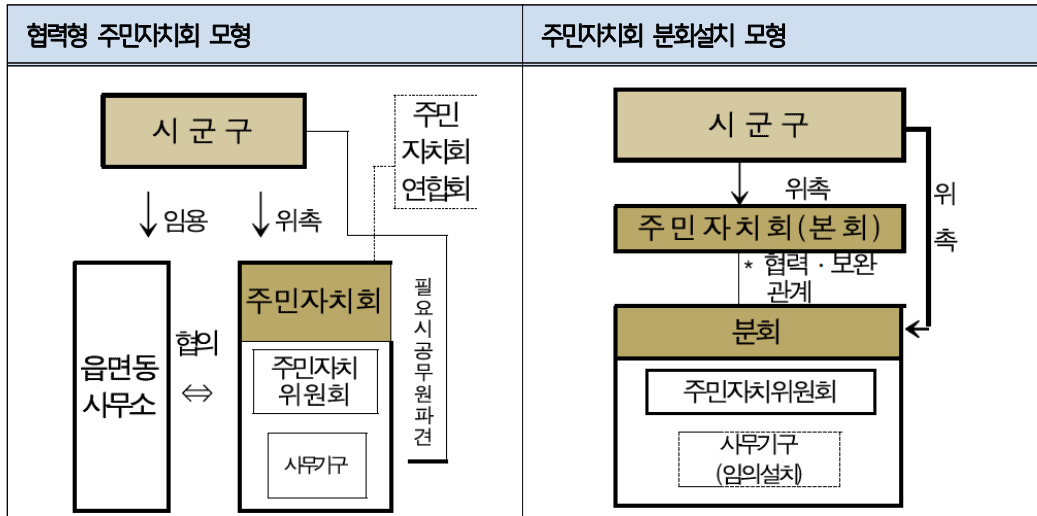
- 자립형마을기업은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임
-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마을기업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마을기업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임
- 우수마을기업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마을기업임
-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등을 확보하여야 함
 - 공동체성은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설립·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임
 - 공공성은 마을기업의 설립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것임
 - 기업성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임
 - 지역성은 마을기업에 지역(읍·면·동)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임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과의 중복지원은 예외로 함
 -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사업추진주체

1) 주민자치회사업

- 주민자치회의 실시는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자치회의 실시 모델은 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 등으로 제시되었으나,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력형을 중심으로 추진함

[그림 4-3] 주민자치회 모형



출처 :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201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4, pp. 353-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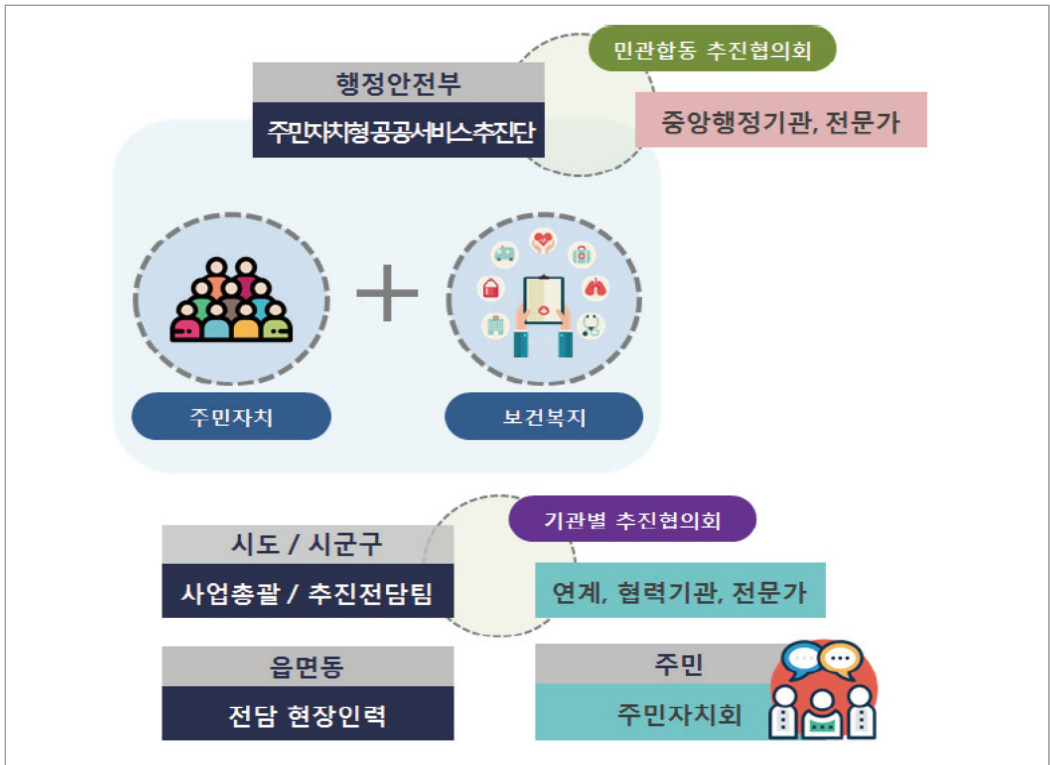
- 협력형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사무소(현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를 병렬적으로 설치함
 -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읍·면·동을 존치하고, 주민자치회가 병렬적으로 설치되는 형태임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위임·위탁사무의 처리기능,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가 협의 및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은 행정행위의 집행 시 참고하도록 함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설치하여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담당하도록 함
 - 읍·면·동 기능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실장 소속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함(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추진단은 읍·면·동 기능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읍·면·동 기능개선 관련 각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연계·조정, 읍·면·동 기능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지침의 마련, 민·관 협력의 지원, 성과평가 등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술한 추진단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각1명으로 구성함
 - 또, 협의회는 읍·면·동 기능개선 추진과 관련된 자치행정, 보건복지, 공동체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함
- 행정안전부는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단체은 사업분야별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역할을 분담함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통해 사업 기획·총괄 및 자치단체 사업추진을 지원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자체사업 추진 및 관할 시·군·구의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사업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분야별 사업을 추진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전담팀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배치함

- 하부행정단위인 읍·면·동은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함

[그림 4-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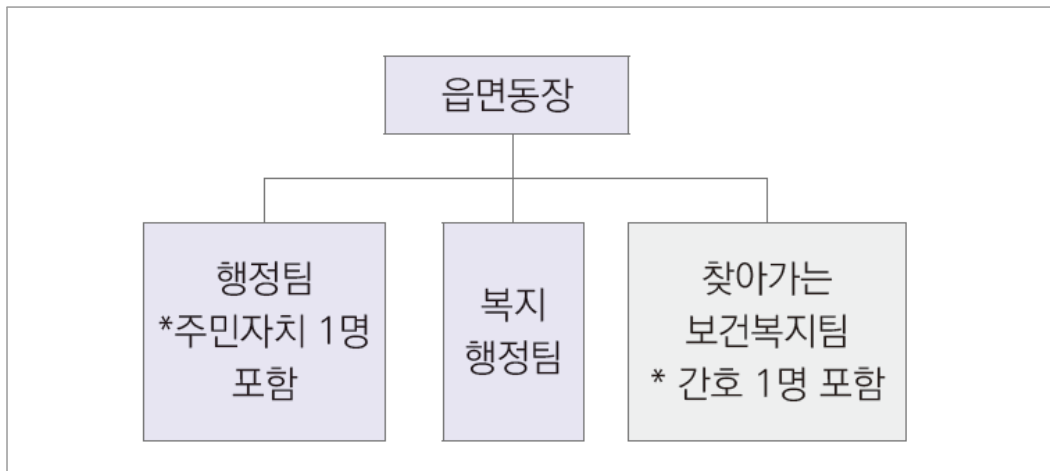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분야 매뉴얼』, 2019, p. 14.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읍·동과 면을 구분하여 조직모델을 구축함
- 읍·동은 기본형과 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조직모델을 구축하고, 기본형을 우선 추진 하되, 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함
 - 기본형은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복지+건강 서비스, 주민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 등을 운영함
 - 공공서비스 연계형은 찾아가는 보건복지대상·범위 확대, 종합상담, 실질적인 민관

- 연계, 주민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 등을 추진함
- 기존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복지허브화)의 기본형과의 주요 차이점으로 읍·동 행정팀에 주민자치 전담인력 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인력 1명을 추가로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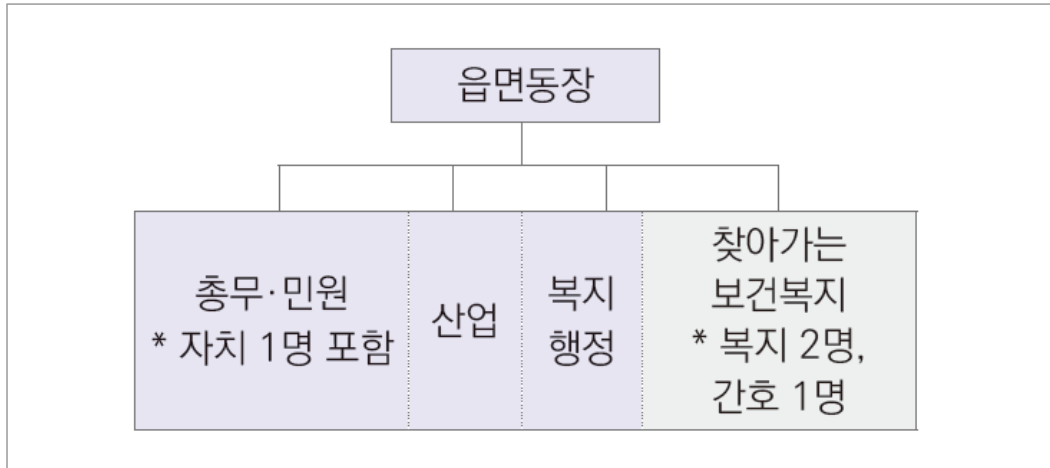
[그림 4-5]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읍·동 모형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분야 매뉴얼』, 2019, p. 14.

- 면은 기본형과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조직모형을 구축하고, 기본형을 우선추진하되, 농어촌특성화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함
 - 면 단위에서의 기본형은 읍·동의 기본형 모형과 동일하게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복지+건강 서비스, 주민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 등을 운영함
 - 면 단위에서의 농어촌 특성화형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지 않고, 전담인력만 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함

[그림 4-6]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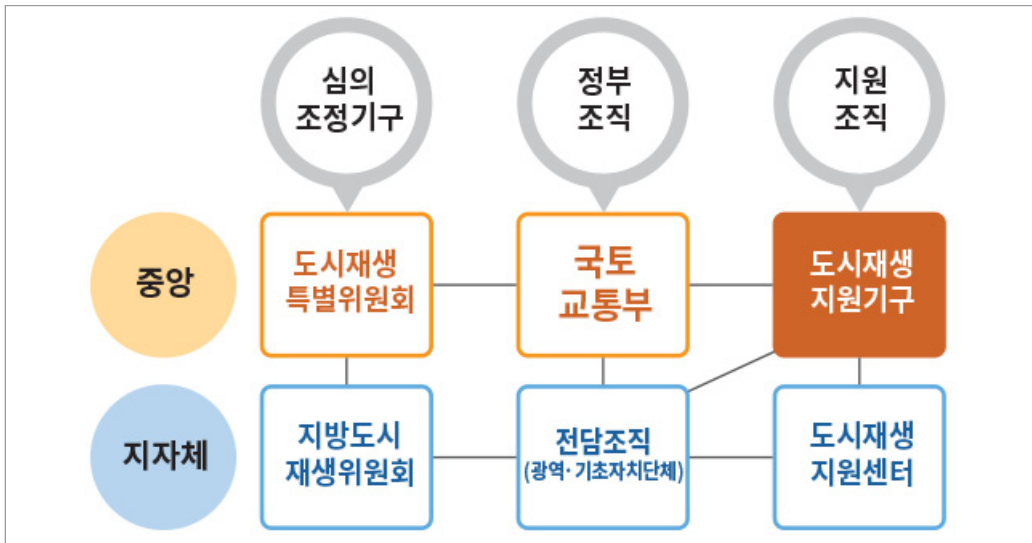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분야 매뉴얼』, 2019, p. 14.

- 시·군·구는 사업총괄 및 읍·면·동 지원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함
 - 시·군·구에 사업총괄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체계 구축, 자체사업기획·총괄, 관련부서 및 소관 읍·면·동 지원등의 기능을 배분함
- 읍·면·동에 복지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방문상담, 보건·복지·건강 등의 전문 종합상담,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주민역량강화 등의 기능을 배분함
 - 복지전담인력의 배치는 사회복지직렬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더라도 사회복지직렬이 최소 70%이상으로 충원되도록 함
- 읍·면·동에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위험도별 지속적인 건강관리, 맞춤형 지역사회연계, 건강현황분석에 따른 해결전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배분함
 - 간호인력의 정원은 보건소에 배정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배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읍·면·동에 주민자치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대표기구(주민자치회) 구성지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주도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민관협업지원 등의 기능을 배분함

3)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사업에의 추진주체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도시재생지원기구, 민간투자자 및 기업 등임
 - 중앙부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함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업을 추진함
 -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방자치단체·주민이 도시재생상버을 추진하는 과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그림 4-기] 도시재생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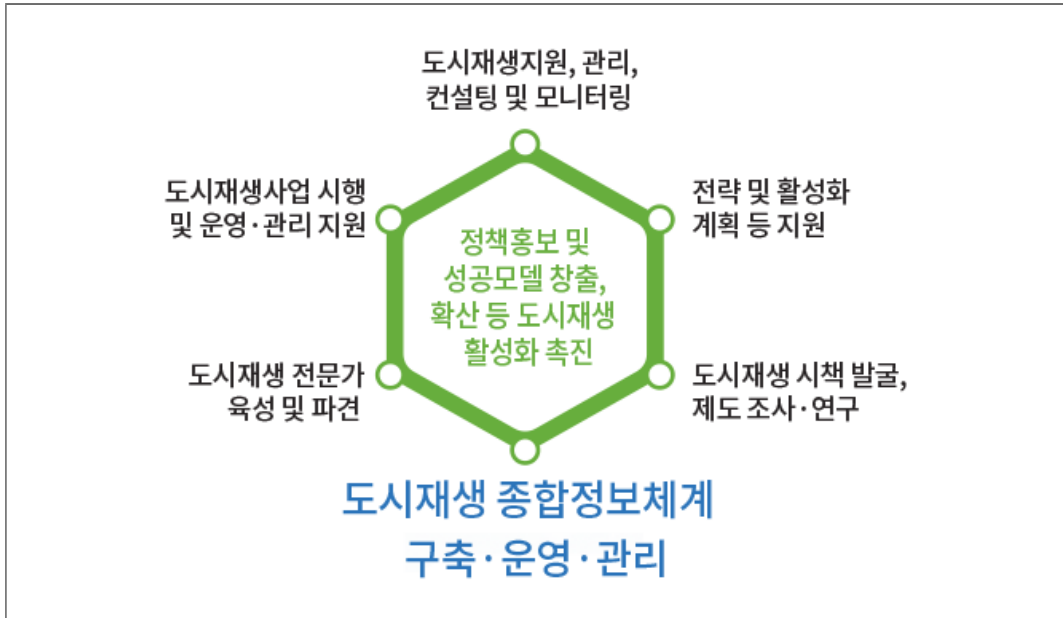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접속일 2019.10.15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도시재생기술·기법을 개발 및 보급하며, 재정지원을 담당함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및 특례·금융지원 등 정책과 제도를 정비함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사업모델을 제시함
 - 도시재생기술·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함
-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지원, 규제완화-특례부여, 전문인력 지원 등을 담당함
 -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
 -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함
 - 도시재생사업 참여의 각 참여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함
 -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정지원을 수행함
 - 건축규제의 완화 및 특례를 부여함
 - 주민교육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함
- 주민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 시행 이후의 유지관리 단계에 참여함
 - 도시재생 수립과정에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독창적이며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함
 - 사업시행과 사업시행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민간투자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아이디어를 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함
 -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공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및 부설 건축공간도시연구소를 도시재생 지원기구로 지정함

[그림 4-8] 도시재생지원기구의 목적 및 기능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접속일 2019.10.15

-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주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증진함
- 도시재생전문가를 양성하고 사업지역에 전문가의 파견을 지원함
- 주민의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을 지원함
-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함
- 민간투자자 및 기업은 다양한 투자·개발 기법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제안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
 - 다양한 투자·개발 기법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제안함
 - 저평가된 도시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
 - 쇠퇴한 도시에 상업·업무·첨단산업 등 고용기반을 창출함
 - 지역의 경제·복지·문화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과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수행함

4) 마을기업육성사업

-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추진주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최대 3년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
 - 예비마을기업의 선정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선정하여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함
 -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공모하되,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접수하고, 접수 후, 광역자치단체의 심사,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됨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제도기반을 마련, 재정지원, 마을기업 심사·지정·지정취소, 역량강화 교육, 판로지원, 통계관리, 홍보지원, 우수마을기업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관련 법령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행정안전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계획 마련,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함
 -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제도운영 관련 재정적 지원을 수행함
 - 행정안전부는 신규 마을기업의 발굴, 마을기업 참여 유도 및 확산지원,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육성 등을 수행함
 - 행정안전부는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고동화(3차년도)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최종심사를 수행함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능을 수행함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마을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
 - 행정안전부는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마케팅·유통역량 교육지원, 우수상품 발굴, 박람회·직거래 장터 개최 등 판로지원을 수행함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현황, 운영실태 및 성과 등에 관한 통계를 생성하고 관리함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참여 유도 홍보물 배포 및 홍보영상 제작·전파, 웹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을 수행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 현황 점검 및 성과평가를 수행함
- 행정안전부는 우수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
- 구체적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추진 시,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에게 지정결과를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과 약정을 체결하도록하는 것임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후,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발표심사(질의응답)를 수행함
 -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50%이상으로 함
 - 광역자치단체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마을기업 4대요건에 대한 적격성여부를 판단 하되, 1개의 요건이라도 부적격인 경우, 탈락으로 결정함
 - 행정안전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지정결과를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함
- 광역자치단체는 마을기업 관련 제도기반 마련, 재정지원, 마을기업 심사·지정·지정취 소, 역량강화 교육, 판로지원, 통계관리, 홍보지원,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마을기업 비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시·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계획 마련, 중·장 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결산 및 자체예산 지원 등의 재정지 원 기능을 수행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신규 마을기업의 발굴, 마을기업 참여 유도 및 확산지원, 새 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육성 등을 수행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고동 화(3차년도)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수행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마을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정을 운영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마케팅·유통역량 교육지원, 우수상품 발굴, 박람회·직거래 장터 개최 등을 수행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마을기업 현황, 운영실태 및 성과 등 통계관리 기능을 수행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마을기업 참여 유도,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제작·전파, 웹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 마을기업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함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마을기업 지원기관 공모·심사 및 계약체결, 지원기관의 활동사항 모니터링 및 행정안전부 제출 등의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관리 기능을 수행함
- 구체적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추진 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마을기업의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에 대한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서 수립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것임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
 - 심사위원회는 시·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추천위원 중 7인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50%이상으로 하여 구성함
 - 청년마을기업은 신규마을기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함
 - 탈락한 마을기업은 채점결과 및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통보함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관련 제도기반 마련, 재정지원, 공모자료 접수, 마을기업 약정 및 약정해지, 판로지원, 통계관리,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마을기업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시·군·구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각종 지원계획 마련,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마을기업 보조금 교부, 결산

및 자체예산 지원 등을 수행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신규 마을기업 발굴, 마을기업 참여유도 및 확산지원,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신규(1차년도)마을기업, 재지정(2차년도)마을기업, 고도화(3차년도)마을기업 공모시 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등을 수행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마을기업 지정 및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체계 및 약정해지를 수행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마을기업 약정 해지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요물품의 처리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마케팅·유통역량 교육지원, 우수상품 발굴, 박람회·직거래 장터 개최 등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마을기업의 현황, 운영실태 및 성과 등 통계관리를 수행함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마을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기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함
- 구체적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 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서류적격여부의 결정이며, 중앙정부(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결과를 통보받아 마을기업과 약정을 체결하는 것임
- 신청한 마을기업이 필수 선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 즉 적격검토를 수행함
 - 적격검토를 위해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적격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마을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적격검토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시·군·구 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종사자 등 5인 이상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구의 과장급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보함
 -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함
-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마을기업 교육, 자립지

원, 발굴·확산,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통계관리, 홍보지원,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지역간 마을기업 네트워크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함

-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신규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전문교육 및 경영·회계·판로·유통·마케팅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수행함
 -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마을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및 확산 등 마을기업의 자립을 지원함
 -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신규 마을기업의 발굴·확산 및 마을기업 심사를 지원함
 - 마을기업지원기관은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사·회계·재무·고객관리 등 경영관리 및 판로·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함
 -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마케팅·유통역량 교육지원, 우수상품 발굴, 박람회·직거래 장터 개최 등을 지원함
 - 마을기업지원기관은 마을기업의 현황·운영실태·성과관리 등에 관한 통계를 생성하고 관리함
 - 마을기업지원기관은 마을기업 참여 유도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제작·전파, 웹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을 수행함
 - 마을기업지원기관은 마을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기업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함
 - 마을기업지원기관은 권역별 마을기업 간 상호학습, 상호거래, 협업과제 발굴 등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함
-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선정 및 운영은 지원기관 공고, 선정, 위탁비용 결정, 계약체결, 지원업무 수행 및 수행실적 평가 등의 과정으로 진행함
- 광역자치단체가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공고하고 선정함
 -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 법인, 연구원 등은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관계자(협회, 연합회, 협의회, 마을기업 대표 등 마을기업인이 참여하여 만든 단체·법인 등)는 지원기관에서 배제함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지원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함

-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운영성과, 즉 마을기업 발굴·육성, 선도적인 우수시책 실적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수행함

[그림 4-9] 마을기업 사업 추진절차



출처 : 행정안전부, 『2019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2019, p. 25.

5. 사업추진현황

1) 주민자치회사업

- 행정안전부는 2011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함
 - 주민자치회 모델은 협력형, 통합형, 주민자치형 등 3개의 모델을 제시함
- 행정안전부는 2012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시범실시를 결정함
 - 주민자치회 모델 중 통합형과 주민자치형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통합형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시범실시를 결정함
 - 행정안전부는 행·재정 지원과 홍보·교육을 담당하기로 함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모니터링, 평가,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전국 3,400여개 읍·면·동 중 31개의 시범실시 지역을 선전하여 시범실시를 수행함
-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가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임을 인식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분석(2014)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및 변화인지도가 3.55/5.0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마을발전 찬성도 인식수준 3.39/5.00, 주민의 관심제고와 참여정도 변화 인식 3.32/5.00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지역사회에 관한 주민의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시범실시 이후 개선된 사항으로 주민들간의 대화와 소통, 주민프로그램,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분석(2014)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개선된 점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들간의 대화와 소통의 개선(15.5%), 주민프로그램(14.7%), 복지사업(12.5%), 마을의 안전(11.4%), 환경개선(11.2%) 등으로 개선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즉, 주민화합발전 등에 관한 주민의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 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조례 입법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은 주민자치의 기본방향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 주민자치회 기본모델로 지역복지형 모델과 안전마을형 모델로 유형화
 - 지역복지형은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 배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임
 - 안전마을형은 자발적인 생활안전 강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네트워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주민자치회 선택모델로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다문화어울림형 등의 모델로 유형화 함
 - 마을기업형은 주민자치회 중심의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역문제 해결능력 및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는 모델임
 - 도심창조형은 소규모 동네 재생사업을 통한 상기좋은 동네 만들기를 추진하는 모델임
 - 평생교육형은 지역주민의 수요 및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임
 - 다문화어울림형은 다문화인(人)의 지역사회 정착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임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8년 4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훈령을 개정함
 - 전국 시·도, 시·군·구에 주민자치, 보건복지, 사업총괄 등의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 2,070명을 배치함
 - 2019년 사업예산으로 38억 원을 반영함
- 2017년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함
 - 시범사업 추진모형은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구분함
- 도시형 시범사업은 기존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 주민자치과정의 관점에서 도시형 모델은 주민참여 숙의과정, 자치계획 수립과정, 마을총회 의결과정 등의 자치계획 수립과정을 도입함
- 또,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의 차원에서 도시형 모델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자원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둠
- 농·어촌형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계기로 하여 주민참여기구를 구성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농·어촌형은 참여기구 구성 후, 구성된 참여기구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함
 - 주요 자치계획의 수립은 문화소외의 해소, 생활필요시설 구축 등의 분야에 집중하도록 함
 -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의 차원에서 농·어촌형 모델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둠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분야별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둠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통해 사업 기획·총괄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을 지원함
 -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별 사업 추진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함
 -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범사업 (20개 읍·면·동 대상)운영사례로부터, 지역사회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및 확산에 초점을 둠
 -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의 발굴은 선도단체(30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도록 함
 -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자치, 보건복지 각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함
 - 지방자치단체 사업역량의 강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과 더불어,

- 현장의 우수사례 및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함
- 주민자치 및 공동체 돌봄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의 복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추진함
 -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책임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보완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추진함

3) 도시재생사업

- 2017년 제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이 추진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12.14.)
 - 2017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70개소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68개소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09.25)
 - 2017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지역은 중앙선정 15개소, 공공기관제안, 9개소,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44곳 등 총 68개소임
- 2018년 제2차 도시재생뉴딜 사업에서는 총 99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8.31.)
 - 2018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지역은 중앙정부 선정 30개소, 광역자치단체 선정 69개소 등임
 - 중앙정부가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기반형 및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 등 중심시가지형으로 분류함
 -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원형-일반근린형) 유형으로 분류함
- 2019년 현재, 총 100개소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기로 한 바(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2.18), 22개소를 선정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04.08.)
- 2019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88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임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

- 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 10개의 광역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됨
- 전국 37개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1개소씩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 13개소가 설치·운영됨
 - 현장지원센터는 전국에 14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표 4-기]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유형별 현황

구분	광역자치단체 센터	광역+현장 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센터	기초+현장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계
서울	1	1	-	11	12	25
부산	1	-	1	9	-	11
대구	1	-	6	3	3	13
인천	1	-	1	2	4	8
광주	1	-	2	4	-	7
대전	1	-	-	5	-	6
울산	-	-	1	4	1	6
세종	1	1	-	-	-	2
경기	1	-	13	6	12	32
강원	1	-	4	7	3	15
충북	-	-	3	1	7	11
충남	-	-	3	5	1	9
전북	-	-	-	11	-	11
전남	-	-	-	11	-	11
경북	-	-	3	6	1	10
경남	1	-	-	7	-	8
제주	-	1	-	-	2	3
계	10	3	37	92	46	188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 각 지원센터는 행정직영, 공기업위탁, 민간위탁, 공공과 민간의 혼합운영, 재단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
 - 전국의 지원센터 중 66%는 행정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지원센터 중 24개소가 행정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는 총29개소(15%)이며, 공기업 위탁이 22개소(12%), 재단법인 10개소(5%), 공공과 민간의 혼합운영 3개소(2%), 사단법인 1개소 등임
 - 이중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지역 내 연구원과 학회, 대학 등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례이며, 공기업 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연구원), 공기업(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가 수탁받아 운영함

[표 4-8]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주체별 현황

구분	행정직영	공기업 위탁	민간위탁	혼합운영	재단법인	사단법인	계
서울	24	-	1	-	-	-	25
부산	9	-	1	-	1	-	11
대구	3	1	9	-	-	-	13
인천	6	1	1	-	-	-	8
광주	6	-	-	-	-	1	7
대전	1	5	-	-	-	-	6
울산	4	-	2	-	-	-	6
세종	-	1	1	-	-	-	2
경기	17	5	2	-	8	-	32
강원	10	1	2	2	-	-	15
충북	6	-	4	1	-	-	11
충남	5	1	2	-	1	-	9
전북	9	-	2	-	-	-	11
전남	6	5	-	-	-	-	11
경북	9	1	-	-	-	-	10
경남	5	1	2	-	-	-	8
제주	-	-	3	-	-	-	3
계	120	22	29	3	10	1	188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4) 마을기업육성사업

-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시행 중임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임
 - 지역의 범위의 구분은 주민생활권을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읍·면을 기본으로 하며, 도시지역은 자치구 또는 행정구를 기본단위로 하되, 구가 없는 시는 동 지역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2011년부터 마을기업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1,813개소를 지정하고, 1,555개소가 운영 중임
 - 경기도의 마을기업 운영이 가장 많은 179개소이며, 전라남도 154개소, 충청남도 130개소 등임
 -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마을기업 운영이 96개소로 가장 많으며, 대구 86개소, 부산 77개소 등임

[표 4-9] 마을기업 운영현황

(2019. 3. 현재)

특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계	
계	96	77	86	59	61	51	42	27	499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179	123	84	130	108	154	125	119	34	1,056

자료 : 행정안전부,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19.

-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대상기업의 성장단계를 3단계(예비마을기업 단계 제외)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체계임
 - 1단계는 신규 마을기업 단계로서 기존 법인 또는 신규 법인이 마을기업으로서 존속

-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기반을 구성하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을 최대 5천만 원(자부담 20% 조건)까지 지원함
- 2단계는 재지정 마을기업 단계로서,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되, 1차년도 성과와 2차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3천만 원(자부담 20%조건)을 지원함
 - 3단계는 고도화 마을기업 단계로서,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상품개발 등을 목적으로 최대 2천만 원(자부담 20% 조건)의 보조금을 지원함
-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형식이므로, 운영비에 지원을 배제함
- 인건비의 지원은 고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기업의 대표 및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배제함
 - 재료비, 임차료 등은 총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지원함
 - 기타항목으로 공공요금 및 체세, 사무용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은 총사업비의 3%이하(18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함
-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유형으로 유통지원센터구축, 판로지원, 교육 및 컨설팅, 홍보지원,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 등이 수행됨
- 유통지원센터 구축은 마을기업을 주축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확보, 공동마케팅 등을 위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임
 - 판로지원은 대형마트 입점, 온라인 쇼핑몰 판매, 유통지원센터 추가조성, 신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한 유통역량을 제고를 지원함
 -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은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신규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판로·마케팅, 보조금 시스템, 경영활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홍보지원은 기획기사, 홍보영상 등 기존유형의 홍보물은 물론이고, 웹툰, 카드뉴스, SNS 기반의 홍보수단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게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
 -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지원은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조직학습, 협업·소통을 지원함

제2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1. 추진근거

1)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공동체 관련 조례

-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 4-10] 광역자치단체별 자치공동체 관련 조례 현황

(2019. 11. 현재)

구분	조례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조례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조례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조례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접속일 2019.10.15

각 광역자치단체 및 각 교육청 홈페이지

2)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설치·운영 중임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의 수립,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마을만들기 사업」의 규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운영,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체 주택의 활성화 지원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하는 주요 사업은 공동체 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협력체계의 구축,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등 제도적 기반마련과, 서울형 공동체주택의 인증 및 지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동체 주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임
- 서울특별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비전을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으로 제시함
 - 핵심가치로서 시민성, 조화, 신뢰, 변화 등을 제시함
 - 성과목표로서 자치구 마을생태계 강화, 마을공동체 정책개발 및 확산, 마을주체 등장과 성장촉진, 사회혁신의 좋은 조직 만들기 등을 제시함

[표 4-1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비전 및 목표

구분	주요 내용
비전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
정책 목표	1. 자치구 마을생태계 강화
	2. 마을공동체 정책개발 및 확산
	3. 마을주체 등장과 성장촉진
	4. 사회혁신의 좋은 조직 만들기

자료 : 서울특별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8.

- 서울특별시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함
 - 2017년 제2기(2018~20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마을과 자치, 모두를 위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등장에서 확산으로’, ‘모임에서 마을로, 공동체에서 자치까지’, ‘지원에서 역량강화로’, ‘실험에서 제도로’ 등을 정책목표를 제시함

[표 4-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마을과 자치, 모두를 위한 서울
정 책 목 표	1. 등장에서 확산으로
	2. 모임에서 마을로, 공동체에서 자치까지
	3. 지원에서 역량강화로
	4. 실험에서 제도로
추 진 과 제	1-1. 참여자 확대 지속과 다양화
	1-2. 시민정책공감대 제고
	2-1. 일상적 활동과 모임 연계 지원 강화
	2-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재구성
	2-3. 주민자치회 설립과 실질화 지원
	3-1. 역량강화 중심의 간접지원 강화
	3-2. 공동체 자원의 조달·활용·축적 촉진
	3-3. 정책지원 전문가 양성과 배치
	4-1. 자치구 주도 마을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
	4-2. 법·제도 개선
4-3. 마을공동체 활동 및 행정 DB시스템 개선	

자료 : 서울특별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8.

3) 충청북도

-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설치·운영함
 -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의 생활 환경개선’, ‘주민의 복지향상 등 삶의 질 개선’,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의 발달’ 등으로 규정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담부서의 지정 및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심의 및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함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이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충청북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함
 - 연구용역에서 ‘우리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자치공동체’를 충청북도의 마을공동체 비전으로 제시함
 -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소통으로 자치역량강화’, ‘공감으로 신뢰역량 강화’, ‘협력으로 복지역량 강화’ 등을 전략으로 제시함
 -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서 ‘공공지원체계의 구축’, ‘공동체 역량강화’, ‘네트워크 조성’ 등을 제시함
 -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감으로 신뢰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서 ‘마을맞춤형 지원’, ‘마을자생력 제고’ 등을 제시함
 -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으로 복지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서 ‘특화자원 발굴육성’, ‘공동체 고도화 지원’ 등을 제시함

[표 4-13]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구분	주요 내용
비전	“우리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자치공동체
정책 목표	1. 공공지원체계 구축
	2. 공동체 역량강화
	3. 네트워크 조성
	4. 마을맞춤형 지원
	5. 마을자생력 제고
	6. 특화자원 발굴육성
	7. 공동체 고도화 지원
추진 과제	1-1. 정보기반 구축 1-2. 계획-평가체계 구축

구 분	주요 내용
	1-3. 협의체계 구축 1-4. 공동체 성장관리
	2-1.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2-2. 주민 역량강화 2-3. 공공 역량강화 2-4. 지역 역량강화
	3-1. 공동체 협약체계 구축 3-2. 공동체간 협력강화 3-3. 마을과 마을 연결하기(상생네트워크)
	4-1. 희망마을 조성 4-2. 자연생태마을만들기 4-3. 반딧불이 가게 운영 4-4.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4-5. 마을공동체 재능 베풀기 4-6. 셉테드(CPTED) 도입
	5-1. 공동체활성화 의제발굴 5-2. 주민모임활성화 5-3. 보듬가복 5-4. 아이뜨락 키즈카페 5-5. 행복순찰대·우리마을 119 운영
	6-1. 친환경 주거 행복마을만들기 6-2.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조성 6-3. 우리마을 가꾸기 6-4. 우리마을 살리기 6-5. 마을기업 육성 6-6. 마을공유자원 활용하기
	7-1. 부자마을만들기 7-2. 우리마을 역사관 7-3. 마을 갤러리 조성 7-4. 마을공동체 축제지원 7-5.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자료 : 충청북도,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2018.

2.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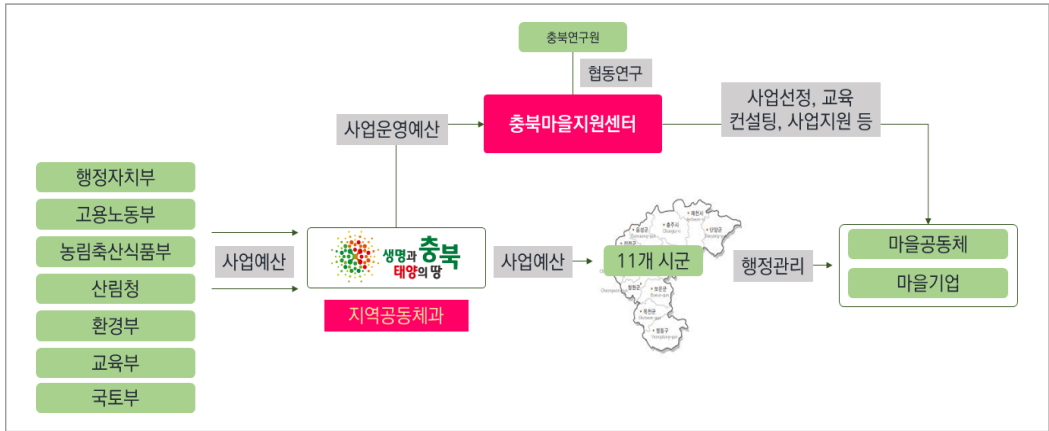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지역공동체 담당관을 본청기구로 설치하여 공동체 정책전반을 소관하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서울특별시의 지역공동체 담당관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마을공동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장함
 - 서울특별시의 지역공동체 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역참여형 참여예산 사업,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사업 등을 소관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심의·자문기구임
- 서울특별시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조례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간위탁형식으로 운영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 연구,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마을활력소 등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서울특별시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외,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조례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간위탁형식으로 운영함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센터는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현황 등 조사,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사업주체·입주자·지역거주자 간의 관계망 사업 등을 수행함

2) 충청북도

- 충청북도 본청의 민관협력공동체과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의 주무부서로 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을 추진함
 - 충청북도 본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무부서는 민관협력공동체과로 자치행정과와 별도의 부서로 설치됨
 - 민관협력공동체과는 공동체정책, 사회적경제,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회, 이·통장 협의회를 소관하고, 도민소통시책발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이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의 자치공동체 기능은 주민자치회를 소관하는 부서와 공동체를 소관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음
- 충청북도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함
 - 충청북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지원, 지역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등을 규정함
 - 현재, 유사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충청북도 일자리지원센터 등 외에도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함

[그림 4-10] 충청북도 마을자원센터 구상



출처 : 충청북도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2018, p. 183.

3.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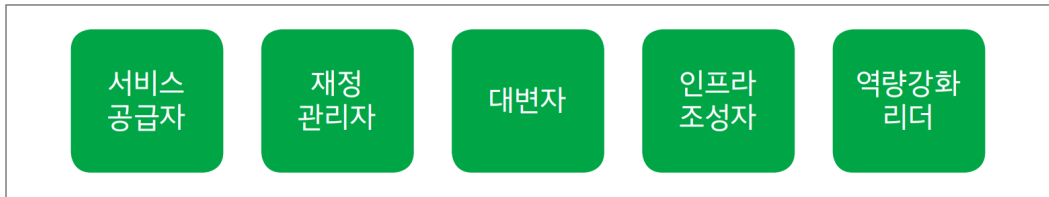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참여자의 확대 지속과 다양화를 위해, 모임형성을 지원하고, 소극적 참여 집단의 유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함
 - 모임형성의 지원을 위해 자치구는 이웃만들기 사업의 확대운영, 마을아카데미 연계 모임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고, 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민참여지원사업을 주민자치회 소모임 지원사업으로 정례화함
 - 적극적 참여자를 통한 유입전략으로서 공동육아 활동을 통한 아빠모임의 형성지원과, 청년마을살이, 50+ 마을깍이어 프로그램, 고령친화마을 등의 특화사업을 도입함
- 서울특별시는 시민정책공감대 체고를 위해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 활성화와 시민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활성화는 자치구별 연 2회 이상 운영을 정례화하고, 서울특별시 마을센터에서 교육콘텐츠, 강사풀을 제공하도록 함
 - 마을공동체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주민강사, 관

내 사례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시민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의 운영을 위해 직장인·청년 등 비지역 기반 활동층 대상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기존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일상적 활동과 모임의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함
 - 지역기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으로부터, 재정관리, 인프라 조성, 역량강화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그림 4-11] 지역기반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



출처 : 안현찬·구아영,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2017, p. 76.

- 마을만들기 사업 종료 후 다양한 지역단위 민간네트워크 형성 및 가입을 촉진하고, 민간네트워크가 일상적인 교육·교류·연합활동을 펼치도록 간접지원비를 제공함
- 지역기반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작은 주민모임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존의 풀뿌리단체, 마을넷, 공동체 공간 등을 구심점으로 주변의 작은 모임의 연합을 지원함
- 협동조합 설립, 마을활력소 운영 위탁, 민간기금 연계 등 서울시의 지원을 제공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자치구 주도의 현장밀착형 마을사업 추진, 전략적 마을공동체 사업모델 발굴·운영 등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재구성을 추진함
 - 자치구 주도의 현장밀착형 마을사업의 추진으로 모임형성을 지원하고, 활동지원단계는 자치구가 담당하도록 함
 - 공간지원, 마을계획 수립 지원단계, 사회문제 해결형 전략사업, 실국별 마을 공동체 사업 지속 및 연계 고도화 등의 사업은 서울시가 담당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 주민자치회 주도의 지역발전 지원 등 주민자치회 설립과 실질화 지원을 추진함
 - 참여폭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위원추첨, 분과활동, 주민총회를 지원하고, 자체사업·위탁사무 등 재정기반을 마련하며, 사무국 간사 양성을 지원함
 - 동별 자치계획을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에 반영하며, 주민자치회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마을공동체 종합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및 단체 협력을 통한 컨설팅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역량강화 중심의 간접지원 강화의 체계구축을 추진함
 - 마을공동체 종합교육프로그램 대상, 사업,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리더, 공간운영자,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중점운영하도록 함
 - 서울마을센터가 종합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그리고 콘텐츠 및 강사를 제공함
 - 부동산,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시재생 등 자체 보유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단체, 중간지원조직 등과 MOU체결 및 전문가 풀 운영을 추진함

[그림 4-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



출처 : 안현찬 구아영,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2017, p. 88.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현금 외 공동체자원을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마을활력소 조성·운영·안정화, 공동체 기금 조성 지원,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직접 지원을 다양화하는 등의 공동체 자원의 조달·활용·축적의 촉진을 추진함
 - 자부담 범위에 자원활동시간, 재능기부, 현물제공 등을 포함함
 - 사업계획과 함께 자부담 목표율을 평가에 반영하여 보조금을 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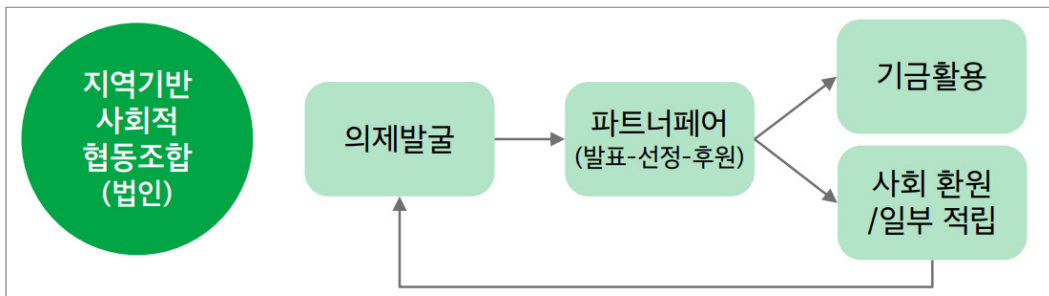
[그림 4-13] 서울특별시 공동체자원 구조



출처 : 안현찬 구아영,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2017, p. 91.

- 서울시 본청의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단순 보조금 지원에서 다양한 자원제공 기준·방식 등 마련
- 서울시 본청은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수익성 강화방안의 마련을 위한 지원, 공간 활성화를 위한 인력지원과 일자리창출 등의 부분을 담당함
- 사전지역조사, 장기종합사업계획 수립, 전문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강화함
- 민간기금을 연계하는 파트너페어를 개최하는 등 지역기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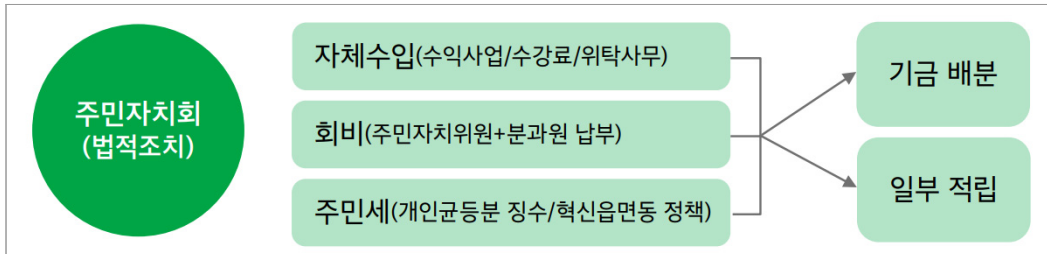
[그림 4-14] 서울특별시 지역기반 사회적협동조합 자원 체계



출처 : 안현찬 구아영,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2017, p. 91.

- 주민자치회의 자체수입, 회비, 주민세징수(예정)로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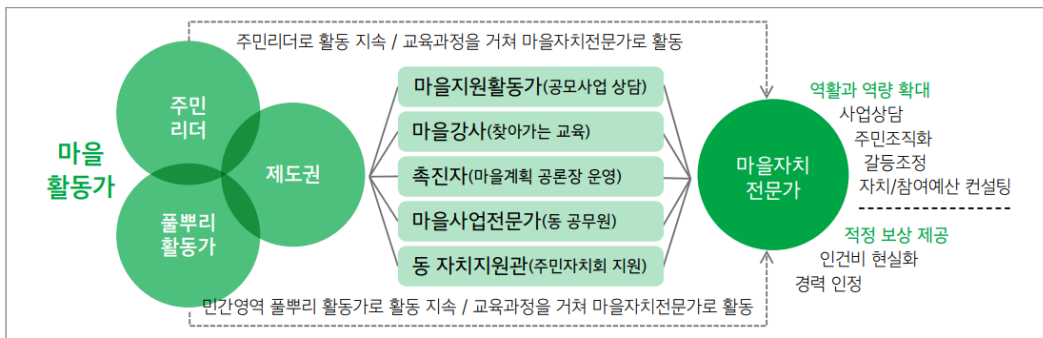
[그림 4-15]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재정지원 체계



출처 : 안현찬 구아영,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2017, p. 98.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마을자치 전문가의 양성·배치, 마을일자리 창출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정책지원 전문가 양성·배치를 추진함
 - 자치구 마을지원센터의 현장지원 협력파트너를 배치하여 정책안내, 주민조직화, 갈등조정, 자치·참여예산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마을자치전문가로 활용함
 - 마을활동 경험자, 풀뿌리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치구 단위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긴밀한 현장밀착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함
 -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지원활동 등에 관한 DB화를 통해 경력관리 및 증명 등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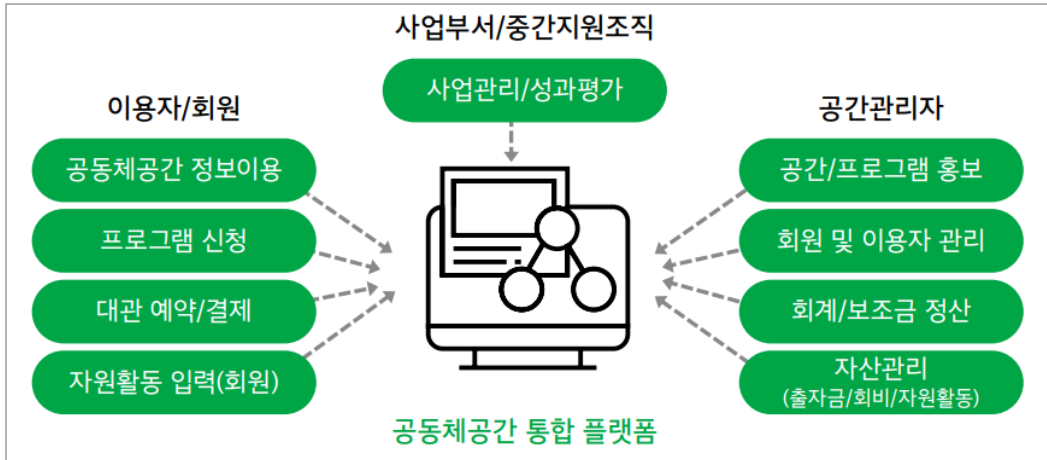
[그림 4-16] 서울특별시 정책전문가 양성 체계



출처 : 안현찬 구아영,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2017, p. 100.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시·구 중간지원조직 기능 명확화와 협력적 정책 추진 활성화 등 자치구 주도의 마을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함
 - 시는 자치구 지원강화, 종합교육 등을 수행하고, 공간·경제·도시재생 등의 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함
 - 구는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위탁형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담당과와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회, 마을넷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함
 - 안정적인 교육운영과 전문성 확보,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시단위에서의 재단 설립을 검토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시·구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참여예산 조례의 통합적 조정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함
 -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마을계획·자치계획을 위한 동 참여예산 제도화를 위한 참여예산 조례를 개정함
 - 자치구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참여예산 지원조례를 개정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참여자·모임 기준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BD시스템 개선으로 활동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함
 - 참여자와 활동가의 이력관리, 경력관리 등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교육·사업 등의 신청, 보고, 결산에 관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입력·확인·활용 등의 편의성을 제고함
 - 공동체 공간의 홍보, 이용신청 등 운영, 회계 및 자산관리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함

[그림 4-17] 서울특별시 공동체공간 통합플랫폼 체계



출처 : 안현찬 구아영.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2017, p. 111.

2) 충청북도

- 충청북도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은 ‘도민중심의 생활자치 구현’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달성’ 등의 2가지 과제로 분리되어 추진됨
 - 충청북도 본청 조직 구조에서 자치행정과 공동체에 관한 소관부서를 각각 설치한 바. 자치공동체와 지역공동체 사업이 각각 추진됨
- 충청북도의 자치공동체 지원은 제도 기반 마련, 도·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체계 정비를 추진함
 - 충청북도는 2019년 중점추진과제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등 제도적 기반마련을 추진함
 - 시장군수회의 및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도-시·군 간 협력시스템 강화를 추진함
- 충청북도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체계의 구축 및 도민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함
 - 주민대표기구의 기능강화로 주민의 마을자치 및 참여의 확대를 추진함
 -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추진함

- 이·통장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주민갈등 해소방안을 추진함
- 충청북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마련을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및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및 기반조성 사업, 사회적경제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을 추진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지원협의회를 운영함
 - 관내 12개소에 대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함
 - 컨설턴트 16명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함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발굴·추진함
 -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지원, 마을기업에 대한 기업경쟁력 강화 육성사업 지원, 마을기업 제품 홍보지원 등을 추진함
- 충청북도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마련, 사회적기업 활성화, 협동조합 육성 등이 사업을 추진함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사업체에 대한 통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해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함
 -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민관 사회적 기업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함
 -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
 -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지정,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확보, 사업개발 지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도·점검,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실태조사 등의 시책을 추진함

4. 추진성과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성과(1기 성과)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본청의 조직·인력 외, 자치

구의 조직·인력, 중간지원조직의 조직·인력 등이 투입됨

- 서울특별시 본청 지역공동체 담당관은 3팀 11명에서 4팀 21명으로 확대됨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마을부서는 2012년 현재, 총 27과 100명에서 2017년 32과 142명으로 증가함
 - 서울특별시 마을센터는 설치당시 4실 1국 25명으로 운영하였으나, 2017년 현재, 4실 1단 59명으로 증가함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2017년 현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근직원 수는 총 90명임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은 2013년 현재 총 8개소에서 2017년 현재 총 24개소로 16개소가 증가함
- 서울특별시 본청의 마을공동체 지원예산은 2012년 현재 10,855백만 원에서 2017년 14,038백만 원으로 증가함

[표 4-1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지원예산 변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직접 지원	지역과	-	2,601	4,107	3,771	2,734	13,213
	타 실국	7,848	7,421	6,555	4,999	4,269	31,092
간접지원		1,054	780	438	641	438	3,351
기반조성		1,953	2,705	4,010	3,892	6,597	19,155
합계		10,885	13,507	15,110	13,303	14,038	66,811

자료 : 각 년도 서울특별시 본청 및 25개 자치구 세출예산서

- 서울특별시의 중간지원조직(마을센터) 예산은 2012년 현재 1,685백만 원에서 2016년 현재, 5,197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비의 증가는 1,053백만 원에서 3,562백만 원으로의 증가이며, 인건비는 481백만 원에서 1,392백만 원으로 증가함

[표 4-15]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 예산 변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예산	1,685	2,285	2,860	2,630	5,197
사업비	1,053	932	1,380	1,070	3,562
운영비	150	309	286	306	305
인건비	481	1,044	1,193	1,253	1,392

자료 : 각 년도 서울특별시 분청 및 25개 자치구 세출예산서.

- 서울특별시의 사업 건 수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모임형성지원) 사업이 318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활동지원)이 1250건으로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 모임형성 지원 사업의 경우, 1기 정책의 주요 목표인 참여자의 양적 확대(마을공동체 활동 진입)을 위하여 활발히 추진된 것으로 분석됨(안현찬·구아영,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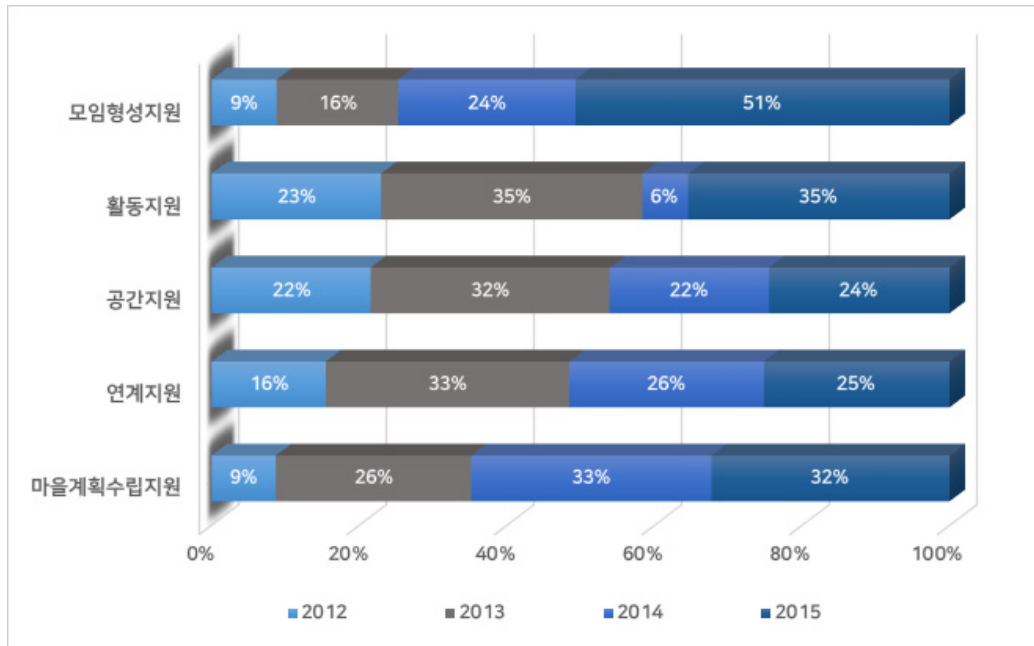
[표 4-1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 건수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단계별 합계
1단계(모임형성지원)	278	843	1036	1026	3183
2단계(활동지원)	194	412	330	314	1250
3단계(공간지원)	68	102	68	77	315
4단계(연계지원)	26	40	7	40	113
5단계(마을계획수립지원)	7	13	19	40	79
연도별 합계	573	1410	1460	1497	4940

자료 : 안현찬·구아영,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6, pp. 49-54.

- 단계별 마을사업 선정 건수의 증감 추이를 연도별 비율로 살펴보면 모임형성 지원에 비해 상위 단계 사업의 추진이 저조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사업의 경우 공간 지원 및 연계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8]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단계별 마을사업 선정 건수의 증감 추이



자료 : 안현찬 구아영,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6, p. 56.

2)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사업 성과(2018년도)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시민사회 육성, 공모사업, 컨설턴트 선발 등을 추진함
 - 시민사회 육성사업을 위한 NGO 센터를 운영하여 총 34개 사업을 수행함
 - 제안공모사업 18건, 컨설턴트 선발 16명 등
- 마을기업과 관련한 사업의 수행으로 공동체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굴,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등에서 성과를 창출함
 - 공동체 일자리 제공부문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380명, 사회적경제 262명 등의 일 자리를 창출함
 - 마을기업 발굴 4개소, 마을기업 육성 예산지원 114백만 원 및 82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수행함
 - 예비사회적 기업 8개소를 발굴하였으며, 103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완료함

제3절 경기도의 자치공동체 지원정책

1. 추진근거

1) 경기도 분청

- 경기도는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운영 중임
 -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호혜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하는 공동체 사업은 ‘따복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의 수립, ‘따복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의 수립, ‘경기도 따복공동체 위원회’의 설치·운영, 그리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경기도는 따복공동체만들기 사업의 비전을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으로 제시함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서 ‘따뜻한 사람 양성’, ‘협력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 ‘통합적 대안모델로서 따복공동체 정립 및 확산’ 등을 제시함

[표 4-17] 경기도 따복공동체만들기 사업의 비전 및 목표

구분	주요 내용
비전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정책 목표	1. 따뜻한 사람 양성
	2. 협력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
	3. 통합적 대안모델로서 따복공동체 정립 및 확산

자료 :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2)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설치·운영함
 -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임
 - 정책브랜드로 ‘마을르네상스’를 규정함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와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의 설치를 규정함
-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함
 -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주민스스로 정책의 제안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와 사업의 발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모니터링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실무분과간 역할조정·협력 등을 추진함
-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 마을만들기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마을만들기 분석·평가·보고,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 수립 및 활동지원,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교육·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지원, 전문가 지원, 활동공간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은 비전으로써 “지속가능도시 수원을 만드는 시민의 벗 도시재단”을 제시함
-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융복합 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만들기, 협치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함
 - 융·복합 서비스의 제공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현장중심의 융·복합 사업 확산, 지역주체 협력사업 확대 등임

- 지역공동체 만들기는 공유와 나눔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시민주도의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확대, 환경친화형 건강도시 조성 등임
- 협치 플랫폼 구축은 다양한 지역주체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도시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지식공유의 장 마련, 정보공유형 사업기반 구축 등임
- 주요사업방향으로, 공동체 주체 발굴과 성장지원, 공유공간 조성과 운영,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혁신가 양성, 지역협치기반 구축 및 운영 등을 제시함
 - 공동체 주체 발굴과 성장지원은 공동체의 주체를 찾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주체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방향임
 - 공유공간 조성과 운영은 공동체 주체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공유공간을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주체의 역량제고를 지향함
 - 지역공동체사업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량을 갖춘 공동체 주체들이 해당 공동체와 공간을 스스로 가꾸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향함
 - 지역혁신가 양성은 공동체 주체를 도시 활동가로 양성하여 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조력자 집단을 양성함
 - 지역협치기반 구축 및 운영은 공동체 주체를 조직화하여 네트워크 구축·확대를 통해 지역의 협치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함
- 경기도 수원시는 마을만들기 조례 이외의 공동체 관련 조례로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각각의 부문별 조례를 설치·운영함
 -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주민협의체의 구성,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 설치·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지원, 경영·재정·시설 등의 지원,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

2. 추진체계

1) 경기도 분청

- 경기도는 공동체지원과와 사회적경제지원과 따북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지원사업을 추진함
- 경기도 분청 공동체지원과가 소관하는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주민주도·주민성장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임
 -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정책개발 및 기획,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및 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홍보 등의 사업임
 -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지원,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융합모델의 발굴 등의 사업임
 - 주민주도·주민성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추진, 이동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청년공동체 발굴·육성사업 추진,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원 등임
- 경기도 분청 사회적경제지원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및 공유경제 육성,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사회적 경제기업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기획·조정, 사회적경제 기금운영 및 특례 보증 지원,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인식확산 등의 사업임
 - 협동조합 및 공유경제 육성사업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회

적 경제 창업지원 등임

-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지정 심사 및 육성지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비마을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지원 등임
- 사회적경제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공정무역 활성화 등임
-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공동체 정책 생산 및 전략사업 개발, 공동체 활동가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유형별 사업운영 및 지원체계 확립 등의 사업을 추진함
 - 공동체 정책 생산 및 전략사업 개발사업은 마을공동체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업지원체계 강화 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정책 및 사업 홍보, 마을의 긍정변화·공동체 복원 등의 정책효과 극대화 사업임
 - 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는 교육훈련 및 학습활동 기회제공,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상호성장 및 교육컨텐츠 개발, 공간운영계획수립 지원, 시·군 밀착 활동지원 등임
 -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요 중심의 교육 및 실천과정 운영, 현장지원 전문가 양성, 청년공동체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등임
 - 유형별 사업운영 및 지원체계 확립은 마을공동체 발굴 및 지원, 아파트 마을공동체 형성,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읍·면·동 협력체계 구축, 공동체 중심의 마을일자리 창출, 공동체 내부자원발굴, 마을 축제 지원 등임
- 경기도에서는 민·관 협치기구인 따복공동체 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함
 - 거버넌스 체계로서 따복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협의 등을 수행함
 -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는 따복공동체 위원회가 수립한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광역집행기관인 따복공동체 지원단과 행정협의회에서는 시·군 집행기관을 지원하고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함
-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됨

-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실행 등임
- 또, 도지사의 사업 중 따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함
- 이에 따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활동가 육성 및 교육사업,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사업,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함
-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따복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2항)
 -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함(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항)
 -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위탁사무의 처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계약의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3실 9팀, 48명 규모로 운영함
 - 경영지원실은 기획조정팀, 정책지원팀, 인사·총무팀으로 구성하여 사업기획·계획 및 기관유지 기능을 수행함
 - 공동체지원실은 역량강화팀, 지역협력팀, 전략사업팀 등 3팀으로 구성하여 역량강화 사업(교육사업)과 마을축제지원, 마을자치공동체지원, 마을종합지원사업, 청년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
 - 사회적경제지원실은 기반조성팀, 성장지원팀, 마을기업지원팀 등 3팀으로 구성하

여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 및 콘텐츠 개발 보급, 판로지원, 입점지원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마을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2)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수원시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써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에 따라 운영함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주요 기능은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위한 기획·운영 사업,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 경제사회에 관한 사업,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 도시,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사업 등 도시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임(조례 제5조 1호~ 7호)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됨
 -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의 형태로 민법상의 법인이나, 공공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수원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수원시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음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은 2팀 7센터 정원 80명임
 - 사무처장 소속으로 2팀 7센터를 설치함
 -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지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창업지원센터 산하에 3센터, 미디어 센터 산하에 2센터를 별도로 설치함
-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의 현장지원센터 5개는 조직구조상 수직적 위계가 존재하나, 센터장의 직급에서의 구분은 모호함
 -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직위는 센터장이며, 차상위 센터직원의 직급은 대리임
 - 또, 현장지원센터장의 직위는 현장지원센터장이며, 차상위 센터직원의 직급은 대리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차상위 센터직원의 직급과 동일함
- 조직 유지·운영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 총 10명임
 - 사업 수행 인력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주요활동은 융·복합사업, 마을르네상스 사업, 도시재생,

-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창업, 물환경, 미디어 등의 사업을 소관함
- 융·복합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주체 협력사업 확대, 지식공유의 장 마련,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형 사업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포함함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지속가능 도시재단 종합업무 데이터 구축, 지속가능 도시재단 정책지원 등임
 - 지역주체 협력사업 확대는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 구축 및 운영 임
 - 지식공유의 장 마련은 도시재단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포럼 개최, 도시재단 통합학습과정 운영, 임직원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임
 - 네트워크 구축은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 운영, 지속가능 도시재단 대외협력사업 추진, 지속가능 도시 수원지역 협치 체계 구축, 지속가능도시주간 운영 등임
 - 정보공유형 사업기반 구축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 아카이브 구축, 도시재단 누리집 구축 및 운영, 홍보체계구축 및 운영 등임
 - 이상의 사업은 조직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홍보 및 학습지원, 대외협력,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로 경영지원팀과 전략기획팀이 소관하여 추진함
 -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마을르네상스 주체형성 및 성장지원,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및 지원, 주민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함
 -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시민·행정·전문가와 함께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르네상스 센터에서 소관하여 추진함
 - 도시재생 사업은 중장기적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장지원센터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임
 -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여 공유공동체와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관함
 -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추진함
 - 주거복지사업은 주거실태조사 등을 활용한 정책방향 제안, 마을사랑방 등 수원형 주거복지 모델을 활용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임
 - 주거복지사업은 수원형 주거복지모델을 발굴하여 수원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

-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소관하여 추진함
-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지원 및 지원시설관리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사업임
 - 사회적경제 사업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발굴 및 성장지원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소관하여 추진함
 - 창업지원사업은 창업활성화와 스타트업 성장지원, 기술창업기업 역량강화 및 사업화 지원, 창업선도도시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보육센터 및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 등의 사업임
 - 창업지원 사업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경영, 기술, 세무, 회계 및 법률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창업지원센터에서 소관하여 추진함
 - 창업지원센터는 소관업무에 따라, 창업지원팀, 세대융합팀, 상원활성화 센터 등의 하부조직을 설치하여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함
 - 물환경사업은 시민참여형 물환경체계 구축, 하천·호수생태계 조사 및 정책개발연구, 수질오염사고 민·관 전문가 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네트워크 협력 및 지원 등의 사업임
 - 물환경사업은 시민을 위한 안전한 물, 지하수관리, 하천관리, 우수활용, 수생태계 보전 등 지역의 친환경물순환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물환경센터에서 소관하여 추진함
 - 미디어 사업은 미디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지원, 다양성 영화영상 상여 및 연계활동 지원, 미디어 장비·시설 운영 및 창작지원 등의 사업임
 - 미디어 사업은 시민 스스로가 미디어도구를 통해 표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디어 센터에서 소관하여 추진함

3. 추진경과

1) 경기도 분청

-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경과는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준비기, 위탁운영 1기, 위탁운영 2기로 구분됨
 - 2014년 4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수탁법인 선정 이전까지,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의 제·개정 및 시행의 시기를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립준비기로 구분함
 - 2014년 4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1기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선정하고, 운영을 위탁함
 - 2018년 4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1기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선정하고, 운영을 위탁함
- 2014년 민선6기 지방정부 출범 후, 경기도는 핵심추진 공약으로 따복 공동체 사업을 제안하고, 사회적 경제 및 마을만들기 분야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 따복공동체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호혜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함
 - 경기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분야로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제시하고 양부문의 활성화와 협력 증대를 도모함
 - 따복공동체 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경기도차원의 기본계획안 수립 후 지역차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수행함
 -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
- 경기도는 마을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 함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사회적기업 희망재단과 경기도가 위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 센터를 운영 중이며, 13개 시·군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함
 - 마을만들기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시군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됨

- 경기도는 추진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비 지원 등), 컨설팅 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주민주도의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보된 주민편의 공간, 특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컨설팅 지원은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진단 및 아이템 발굴,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전환절차, 공동체 조직유형이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 성장을 위한 컨설팅 등임
 - 교육지원은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공동체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분야 교육이 필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임

2) 경기도수원시

- 2015년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방안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등 공론을 모아 재단설립을 추진함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타당성을 사전 설명함
 -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원의제 21, 수원경실련 등 시민사회에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함
- 2016년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조례를 제정하고, 출자·출연에 관한 동의를 구득함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치 조례와 출자·출연 동의 구득 후 발기인 대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 설립에 착수함
- 2018년 현장지원센터 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수탁계약 해지 등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수행 기능 집적화에 착수함
 -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을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으로 집적화하기 위해 기존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기능을 이관함
 - 지역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은 융·복합 사업으로, 2017년 9월과 2018년 9월 등 매년

수원포럼 운영함

- 2017년 수원포럼은 15개국 21개 도시 53개 기관 510명(외국인 44명)이 참석하여 포용적 도시와 참여, 도시정의와 사회적 경제, 문화 향유권과 지역문화정책, 도시의 전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그리고 도시지속가능성 지표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함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은 지속가능 통합전문학습과정 워크숍 등을 운영함
 - 1일 5시간 동안 5차에 걸쳐 지속가능 통합전문학습과정 워크숍을 운영함
 - 워크숍의 운영을 통해 참여자의 프로젝트 기획능력, 사업계획서 작성능력, 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함

4. 추진성과

1) 경기도 분청: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추진성과

-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함
 - 제도적 기반으로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민·관 협치기구로서 따복공동체 위원회 설치·운영
 - 광역집행기관으로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설치·운영 및 행정협의회를 통해 관련사업의 총괄 조정 등 수행
 -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군 지원센터 설치·운영
- 마을공동체 공모제도 운영
 - 마을공동체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서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
 - 주민 모두가 마을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의 수준을 자율적·능동적 참여로 제고함
- 지역공동체만들기 지원
 - 신규 공동체 등 지역공동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마을계획 수립 등 지원

- 풀뿌리시민사회 활동가, 마을활동가, 주민리더 등에 대한 교육사업 및 인력풀 구축
- 공동체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발굴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따복마을 지원사업 추진
- 협동화 사업을 통해 공동체와 연대화 협동 지원 및 네트워크 사업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간의 상호 연대 및 교류학습의 관계망 구축
- 지역의 사회적경제 지원
 -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 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컨설팅, 판로개척, 설립과 경영 등 사회적경제의 협력과 도약을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일자리창출 모델의 지원하고 규모화하여, 43개 창업팀 배출, 청년노동자조합 5개팀, 프랜차이즈협동조합 30개사 발굴

2) 경기도수원시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발전의 중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도시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참여형 지역정책 및 생활밀착형 시민욕구를 충족시킴
 - 거점조성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세수 확대에 기여함
- 지역공동체 만들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지원조직으로서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설치·운영함
 - 재단설치 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 없이 재단을 설립하여 목적기능을 배분하고 조직화함
- 융·복합 사업으로, 운영한 수원포럼을 통해 내실 있는 토론내용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수원포럼 종료 후 아시아권 도시정상들과 인간도시를 위한 수원선언을 채택함
 - 또한 도시대표들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정책교류와 도시와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간중심 가치를 실현하기로 약속함
 - 대학 등 다른 지역의 연구기관 및 국내거주 외국인의 포럼참여로 미래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수원포럼을 통해 사람중심 도시를 핵심가치로 하는 수원시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지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시민참여 기반을 강화함
 - 다양한 포용정책 추진성과를 수원시민과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확산하는 기회가 됨
 - 아시아 지속가능 도시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수원시의 정책현황을 진단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됨
- 지속가능 통합전문학습과정 1기 수료생 배출
 - 통합기초과정 24시간, 통합성장과정 48시간, 통합전문과정 96시간 등 총 196시간의 학습과정을 이수한 지속가능도시 활동가를 배출함

제4절 소결

1. 중앙정부

1) 중앙부처 간 마을만들기 유관사업

- 중앙부처별 사업추진에 따라 부처별 유사중복 사례가 발생하며, 동일한 사업지역에 중복된 지원이 집중되기도 함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재청 등 14개 부·처·청과 지역발전위원회 등 총 15개 중앙부처에서 지역공동체를 포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부처 마을공동체사업의 사업유형 중, 마을기업과 희망마을의 수익사업 추구형이 유사함
 - 중앙부처의 마을공동체 사업 중, 평화생태마을, 체험휴양마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산촌행태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은 체험숙박 등의 분야에서 유사성을 가짐

[표 4-18] 중앙부처의 도시재생 유관사업

구분	사업명	근거법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특별법
	▣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 경관법
	▣ 지역경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 경관법
	▣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 경관법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공주택특별법

구분	사업명	근거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공공주택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 산업단지재생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사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성장특진지역개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역세권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주치환경개선지원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주택법
	▣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행복주택사업	▣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공공주택특별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창업지원주택사업	▣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공공실버 주택사업	▣ 공공주택특별법
	▣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 가로주택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친수구역개발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공중선 정비사업	▣ 전기통신사업법

구분	사업명	근거법
법무부	▣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사업	▣ 개별법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육성사업	▣ 고용정책기본법
	▣ 보행환경개선사업	▣ 개별법
	▣ 안심마을시범사업	▣ 교통안전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교통안전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자연재해위험개선키구 정비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고용정책기본법
문화체육 관광부	▣ 공공도서관건립지원	▣ 도서관법
	▣ 공립미술관건립지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공립박물관건립지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관광두레사업	▣ 관광진흥법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문예회관건립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문화영향평가	▣ 문화기본법
	▣ 문화예술거리 조성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올해의 관광도시	▣ 관광진흥법

구분	사업명	근거법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 작은도서관진흥법
	▣ 작은도서관 조성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전통문화 근대화거리 조성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전통문화진흥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지역문화예술협력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 개별법
농림축산 식품부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 일반농산어촌개발	▣ 국가균형개발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법 ▣ 농어촌정비법
	▣ 창조마을조성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농어촌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지역산업육성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하천 복원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 고용정책기본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고용보험법 ▣ 고용정책기본법
	▣ 창업인큐베이터 사업	▣ 고용정책기본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구분	사업명	근거법
여성가족부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 청소년활동 진흥법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사업	▣ 항만법
중소벤처 기업부	▣ 소상공인특화지원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성장지원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재기지원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창업지원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청년몰 조성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상권활성화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상업가반시설 현대화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장정비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문화재청	▣ 근대문화유산 자원활용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상생문화재사업	▣ 문화재보호법
	▣ 지역문화유산개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 위원회	▣ 창조지역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접속일 2019.10.15

2) 도시재생(생활환경개선)과 병행

- 도시쇠퇴·노후화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법령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임
 - 도시재생관련 3개 법은 계획체계, 심의주체, 재원확보방식, 사업범위 등의 부분에서 연관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재정비촉진 사업들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 도시재생을 담당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을 포함함

- 상기한 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 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가장 포괄적인 법령으로 여러 법률에서와 중복조항이 나타남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범도시사업
 -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국가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 주민제안 사업 등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재정비 촉진사업 분야에서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포함함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일부 중복되는 사업을 규정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주거환경 관리사업
- 가로주택 정비사업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의 개발

- 중앙정부의 공동체 지원정책은, 지역 기반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모형의 개발에 초점을 둠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중심의 공동체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함
 - 다만, 중앙정부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즉 지역별 최소한의 주민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마련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둠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의 최소한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중앙정부의 공동체 지원정책은, 지역 기반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유형별로 정책지원의 주체와 유형 등을 다르게 설계함
- 중앙정부의 공동체 지원은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의 체계를 구성함
 - 공동체 지원은 주민참여의 지원으로부터 시작함
 - 도시재생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추진함
 - 주민참여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관한 지원을 추진함

4) 재정사업 유형으로 추진

- 정부가 사업비를 충당 또는 지원하는 유형의 사업으로 공동체 지원정책을 추진함
 -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임

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접근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등은 계획수립에 관한 심의 기능에 초점을 둠
 - 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기능은 관계 기관간의 협의, 부서간 협의 등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에 관한 공공부문의 합의를 지원하는 기구임
 -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의 수행, 마을 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주민에 대한 지원기능을 소관하도록 하도록 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및 구청장 등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함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립적 중재자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즉 행정직영 또는 공기업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142건으로 전체의 약 76%에 달함
 -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중립적 중재자의 역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6)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원·관리 역할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시·군·구 운영지원
 - 시·도 단위 전문지원기관 운영
 - 사업추진 현황 및 통계, 사례관리 등
 - 주민자치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 주민자치사업 설계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사업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및 교육기획, 홍보지원 등
 - 우수사례 선정 및 발굴, 전파
 - 국민참여형 사업, 각 부처 사업과 연계 기획
- 기초자치단체는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읍·면·동 운영지원
 - 시·군·구 단위 전문지원기관 운영
 - 주민자치회 등 대표기구 행·재정 지원
 - 주민자치회 등 역량강화 지원(워크숍, 교육기획·운영 등)
 -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 개최 및 홍보 지원
- 읍·면·동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할 세부사업 지원역할을 수행함
 - 주민자치 주요사업(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총회 등) 지원
 -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 공유공간(마을활력소 등) 조성지원
 - 주민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위탁·협의 사무 지원

7)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의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원·관리 역할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시·군·구 운영지원

- 시·도 단위 전문지원기관 운영
- 사업추진 현황 및 통계, 사례관리 등
- 주민자치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 주민자치사업 설계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사업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및 교육기획, 홍보지원 등
 - 우수사례 선정 및 발굴, 전파
 - 국민참여형 사업, 각 부처 사업과 연계 기획
- 기초자치단체는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읍·면·동 운영지원
 - 시·군·구 단위 전문지원기관 운영
 - 주민자치회 등 대표기구 행·재정 지원
 - 주민자치회 등 역량강화 지원(워크숍, 교육기획·운영 등)
 -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 개최 및 홍보 지원
- 읍·면·동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할 세부사업 지원역할을 수행함
 - 주민자치 주요사업(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총회 등) 지원
 -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 공유공간(마을활력소 등) 조성지원
 - 주민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위탁·협의 사무 지원

2. 광역자치단체

1) 사업담당부서

-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행정을 비롯하여 공동체, 기획예산, 일자리 경제, 도시, 농업농촌, 복지, 문화관광 등 사업 분야에 따라 유

관 과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함

- 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획예산, 자치행정, 일 자리경제, 건축도시, 농업농촌, 복지, 문화관광 등 각 부처 및 사업 분야의 유관과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함
 - 경제주체와 관련한 사업, 즉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업의 경우, 일 자리경제과 등 경제부서에서 기능을 소관하고 있으며, 희망마을, 도시재생, 전원마을 등에 관한 사업의 경우, 도시·건축 부서에서 담당함
 - 농촌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공동체만들기, 사회적경제 등은 농업·농촌 부서에서 소관함
-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체 사업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는 부서와 자치행정과의 업무에 공동체의 업무를 포함시키는 사례가 각각 관찰되나, 공통적으로, 관련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함

2) 중간지원조직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함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위탁·운영함
 -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법인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단체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됨
- 광역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은 공동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유형과, 개별 기능영역별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유형으로 구분됨
 - 후자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공동체센터, 도시재생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 각각의 법령과 기능분야별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유형임

3. 기초자치단체

1) 중간지원조직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수행사업은 지역공동체만들기, 사회적 경제 육성, 도시 재생 등의 사업을 통합하여 총괄 추진함
 - 다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이 재단의 사업으로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함
 - 예를 들어, 물환경센터의 기능 중, 수질오염사고 민·관 전문가 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은 하천유역네트워크 협력·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기능수행이 타당하나, 재난관리의 차원에서는 시 본청이 소관해야 할 사무임
 - 또, 미디어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팀의 기능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교육프로그램의 일부이며, 공동체 프로그램의 일부인 것으로 별도의 팀을 설치하기에는 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제 5 장

자치공동체에 대한 시민인식 실태조사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제3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4절 심층면접(FGI) 분석 결과

제절 조사 설계

1. 분석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생태계에 대한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태분석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통해 현행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성과달성 정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지역 내 사회 자본 수준, 제도적 개선방안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인식 수준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현행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생태계 수준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사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2. 분석의 방법

- 고양시 지역공동체 실태분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이며, 두 번째 단계는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심층면접(FGI)임
 - 설문조사는 자기기입방식을 적용하되 고양시 주민자치과와 중간지원조직인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협력을 통해 조사결과의 다양성과 충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심층면접(FGI)은 지역공동체 활동 주체별·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정하되, 활동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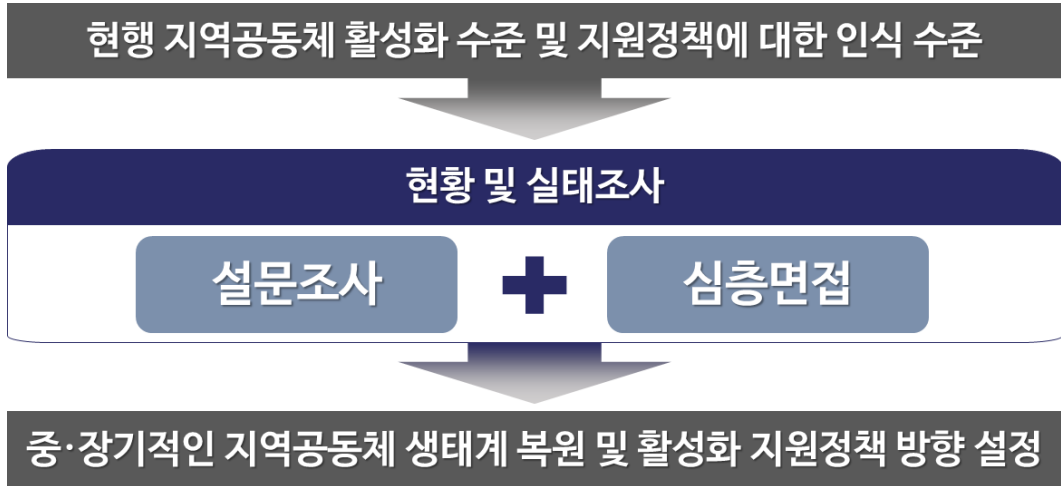
[표 5-1] 실증조사 체계

구분		주요 내용
조사목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관내 지역공동체 활동 주체 및 전담 공무원에 대한 현행 지원정책의 인식 및 만족도, 지역공동체 생태계 수준 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향후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비전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심층면접	
조사시기	설문조사	▣ 2019년 9 ~ 10월
	심층면접	▣ 2019년 9 ~ 10월
조사방법	설문조사	▣ 주민자치과 및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협조
	심층면접	▣ 주민자치과 및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협조
작성방법	설문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의 자기기입방식
	심층면접	▣ 개별면접법 또는 집중집단면접법 적용
조사대상	설문조사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심층면접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3. 분석의 체계

- 지역공동체에 대한 현황 및 실태분석은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고양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됨
 - 먼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지원정책 인식수준, 성과달성 정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 등을 분석함
 - 더불어 설문조사(질문지법)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조사결과의 충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접(FGI)을 활용하며, 주요 대상자는 주민자치(위원회)회 위원과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진행함
 - 이를 통해 현행 고양시 지역공동체 수준과 지원정책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향 또는 방향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책적 접근방법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그림 5-1] 현황 및 실태분석 체계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 지역공동체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현행 고양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을 대폭 수정·추가하는 형태로 개발하였음
 -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분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내 사회자본, 지역공동체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수준 등을 추가로 활용하였음

[표 5-2] 설문조사 조사체계

구 분	설문구조	설문대상	문항 수	척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구성요건에 대한 충족수준 ▣ 지역공동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활동가 ▣ 공무원 	12	서열 및 명목
현행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 현행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 현행 지역공동체 주체의 역할 충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활동가 ▣ 공무원(일부) 	18	서열 및 명목
중간지원조직 역할수행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역할 수행의 충족 정도 ▣ 추가 수행 역할 ▣ 강화 필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활동가 ▣ 공무원 	9	서열 및 명목
지역 내 사회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수준 ▣ 네트워크 수준 ▣ 호혜적 규범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활동가 	18	서열
제도적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요인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체 ▣ 지역공동체의 공간규모 ▣ 지원정책의 전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활동가 ▣ 공무원 	11	명목

구 분	설문구조	설문대상	문항 수	척도
향후 지역공동체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고양시 지역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활동가 ▣ 공무원 	1	개방형
인구통계학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거주지 ▣ 현 소속 ▣ 경력 ▣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활동가 ▣ 공무원 	5	명목

- 지역공동체 활동 주체들에 대한 심층면접(FGI)은 지역별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지역공동체 활동 주체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수를 추출하였음
 - 조사대상은 설문조사 대상과 설문에 참여하지 못한 마을활동가까지 선정하였으며, 주요 면접내용은 설문구조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표 5-3] 심층면접(FGI) 조사체계

조사대상			면접내용
I 그룹 (덕양구)	20명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마을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 현행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 중간지원조직 역할수행 정도 ▣ 지역 내 사회자본 ▣ 제도적 개선방안 ▣ 향후 지역공동체 비전 및 전략
II 그룹 (일산동구)	10명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마을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 현행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 중간지원조직 역할수행 정도 ▣ 지역 내 사회자본 ▣ 제도적 개선방안 ▣ 향후 지역공동체 비전 및 전략
III 그룹 (일산서구)	10명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마을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 현행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 중간지원조직 역할수행 정도 ▣ 지역 내 사회자본 ▣ 제도적 개선방안 ▣ 향후 지역공동체 비전 및 전략

제3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 즉,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마을활동가,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 회원,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표본 수는 고양시 행정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 현황, 연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000부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음
 - 설문지는 총 1,000부를 배포하여 44.3%인 443부를 회수하였고, 응답내용이 오염되었거나, 응답이 빈약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한 설문은 총 400부였으며, 이 중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340부(85.0%)였고, 마을활동가 32부(8.0%),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28부(7.0%)였음
- 설문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총 340명 중 남성이 160명(47.1%), 여성 153명(45.0%)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거주지(일반구별)로는 덕양구가 131명(38.5%), 일산동구 121명(35.6%), 일산서구 88명(25.9%)이 각각 응답하였음
 - 마을활동가의 경우에는 총 32명 중 남성이 10명(31.3%), 여성 22명(68.8%)이 설문에 응하였고, 거주지(일반구별)별로는 덕양구 18명(56.3%), 일산동구 7명(21.9%), 일산서구 7명(21.9%)이 참여하였음
-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현 소속을 구분하면,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 9명(2.4%), 주민자치회 21명(5.6%), 주민자치위원회 310명(83.3%), 지역공동체 32명(8.6%)으로 나타났음
 - 추가로 응답자들의 과거 경력(중복응답)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37.1%(276명)로 가장 많았고, 지역공동체 활동가가 7.7%(57명)로 그 뒤를 이었음
 - 마지막으로 연령별로 구분하면, 50대 ~ 60대 미만이 143명(38.4%)으로 가장 많
 이 참여하였고, 다음으로는 60대 이상이 133명(35.8%), 40대 ~ 50대 미만 54명
 (14.5%)으로 확인되었음

[표 5-4]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자치공동체 주체)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① 남 성	160	47.1	10	31.3	170	45.7
	② 여 성	153	45.0	22	68.8	175	47.0
	무응답	27	7.9	0	0.0	27	7.3
	합계	340	100.0	32	100.0	372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거주지 (일반구)	① 덕양구	131	38.5	18	56.3	149	40.1
	② 일산동구	121	35.6	7	21.9	128	34.4
	③ 일산서구	88	25.9	7	21.9	95	25.5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340	100.0	32	100.0	372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거주지 (행정동)	① 주교동	2	0.6	1	3.1	3	0.8
	② 원신동	6	1.8	0	0.0	6	1.6
	③ 흥도동	19	5.6	1	3.1	20	5.4
	④ 성서동	2	0.6	1	3.1	3	0.8
	⑤ 성서2동	0	0.0	0	0.0	0	0.0
	⑥ 효자동	17	5.0	3	9.4	20	5.4
	⑦ 삼송동	9	2.6	0	0.0	9	2.4
	⑧ 창릉동	0	0.0	0	0.0	0	0.0
	⑨ 고양동	14	4.1	3	9.4	17	4.6
	⑩ 관산동	13	3.8	1	3.1	14	3.8
	⑪ 능곡동	18	5.3	0	0.0	18	4.8
	⑫ 화정1동	0	0.0	1	3.1	1	0.3
	⑬ 화정2동	0	0.0	0	0.0	0	0.0
	⑭ 행주동	0	0.0	0	0.0	0	0.0
	⑮ 행신1동	7	2.1	3	9.4	10	2.7
	⑯ 행신2동	10	2.9	0	0.0	10	2.7
	⑰ 행신3동	5	1.5	0	0.0	5	1.3
	⑱ 화전동	8	2.4	4	12.5	12	3.2
	⑲ 대덕동	1	0.3	2	6.3	3	0.8
	⑳ 식사동	14	4.1	0	0.0	14	3.8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㉑ 중산동	12	3.5	1	3.1	13	3.5
	㉒ 정발산동	12	3.5	2	6.3	14	3.8
	㉓ 풍산동	22	6.5	0	0.0	22	5.9
	㉔ 백석1동	0	0.0	0	0.0	0	0.0
	㉕ 백석2동	19	5.6	0	0.0	19	5.1
	㉖ 마두1동	10	2.9	1	3.1	11	3.0
	㉗ 마두2동	13	3.8	0	0.0	13	3.5
	㉘ 장항1동	0	0.0	0	0.0	0	0.0
	㉙ 장항2동	0	0.0	0	0.0	0	0.0
	㉚ 고봉동	19	5.6	1	3.1	20	5.4
	㉛ 일산1동	21	6.2	0	0.0	21	5.6
	㉜ 일산2동	0	0.0	0	0.0	0	0.0
	㉝ 일산3동	11	3.2	0	0.0	11	3.0
	㉞ 탄현동	6	1.8	1	3.1	7	1.9
	㉟ 주엽1동	9	2.6	4	12.5	13	3.5
	㊱ 주엽2동	16	4.7	0	0.0	16	4.3
	㊲ 대화동	0	0.0	2	6.3	2	0.5
	㊳ 송포동	10	2.9	0	0.0	10	2.7
	㊴ 송산동	15	4.4	0	0.0	15	4.0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340	100.0	32	100.0	372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현 소속	①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9	2.6	0	0.0	9	2.4
	② 주민자치회	21	6.2	0	0.0	21	5.6
	③ 주민자치위원회	310	91.2	0	0.0	310	83.3
	④ 지역공동체	0	0.0	32	100.0	32	8.6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340	100.0	32	100.0	372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력(중복)	① 주민자치회	16	2.4	0	0.0	16	2.2
	② 주민자치위원회	271	39.9	5	7.8	276	37.1
	③ 지역공동체	34	5.0	23	35.9	57	7.7
	④ 없음	16	2.4	7	10.9	23	3.1
	무응답	343	50.4	29	45.3	372	50.0
	합계	680	100.0	64	100.0	744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① 20대 ~ 30대 미만	1	0.3	0	0.0	1	0.3
	② 30대 ~ 40대 미만	3	0.9	2	6.3	5	1.3
	③ 40대 ~ 50대 미만	38	11.2	16	50.0	54	14.5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④ 50대 ~ 60대 미만	131	38.5	12	37.5	143	38.4
	⑤ 60대 이상	131	38.5	2	6.3	133	35.8
	무응답	36	10.6	0	0.0	36	9.7
	합계	340	100.0	32	100.0	372	100.0

- 한편, 설문에 참여한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총 28명 중 남성이 9명(32.1%), 여성 19명(67.9%)으로 나타났고, 소속별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23명(82.1%)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구청 4명(14.3%), 시청 1명(3.6%)이 참여하였음
- 다음으로 전체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10 ~ 15년 미만이 35.7%(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 ~ 10년 미만 21.4%(6명), 20년 이상 14.3%(4명) 등임
 - 전체 근무경력 중 주민자치 관련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57.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 ~ 3년 미만 39.3%(11명) 순으로 확인되었고, 연령별로는 30대 ~ 40대 미만이 50.0%(14명), 40대 ~ 50대 미만 42.9%(12명) 순으로 설문에 참여하였음

[표 5-5]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① 남 성	9	32.1
	② 여 성	19	67.9
	무응답	0	0.0
	합계	28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소속	① 고양시청	1	3.6
	② 일반구청	4	14.3
	③ 동 행정복지센터	23	82.1
	무응답	0	0.0
	합계	28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근무경력	① 3년 미만	3	10.7
	② 3 ~ 5년 미만	2	7.1
	③ 5 ~ 10년 미만	6	21.4
	④ 10 ~ 15년 미만	10	35.7
	⑤ 15 ~ 20년 미만	3	10.7

	⑥ 20년 이상	4	14.3
	무응답	0	0.0
	합계	28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주민자치 관련 근무경력	① 1년 미만	16	57.1
	② 1 ~ 3년 미만	11	39.3
	③ 3 ~ 5년 미만	1	3.6
	④ 5년 이상	0	0.0
	무응답	0	0.0
	합계	28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① 20대 ~ 30대 미만	1	3.6
	② 30대 ~ 40대 미만	14	50.0
	③ 40대 ~ 50대 미만	12	42.9
	④ 50대 ~ 60대 미만	1	3.6
	⑤ 60대 이상	0	0.0
	무응답	0	0.0
	합계	28	100.0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요인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6]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주민자치회 등	공무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수준	▣ 지역공동체의 명확한 지역성 수준	○	○	서열	ANOVA	
	▣ 지역주민 간의 공동의 유대감 수준	○	○	서열	ANOVA	
	▣ 지역주민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 수준	○	○	서열	ANOVA	
	▣ 지역공동체 활동의 공익성 수준	○	○	서열	ANOVA	
	▣ 지역공동체 내 주민자치 수준	○	○	서열	ANOVA	
	▣ 전반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	○	서열	ANOVA	
	지역	▣ 주민-정부간 관계별	○	○	명목	기술(빈도)
	공동체	▣ 주도주체별	○	○	명목	기술(빈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주민자치회 등	공무원		
유형	▣ 구성형태별	○	○	명목	기술(빈도)
	▣ 사업성격별	○	○	명목	기술(빈도)
	▣ 대상지역별	○	○	명목	기술(빈도)
	▣ 사업목적별	○	○	명목(중복)	기술(빈도)

-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시 자치공동체의 필수 및 부가적 구성요건과 강화요건을 토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 공무원 집단을 제외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의 경우에는 지역성을 비롯한 공동의 유대감, 상호작용, 공익성, 주민자치 등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세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ANOVA분석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전반적인 활성화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통계적으로 인식차이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동의 유대감과 공익성, 주민자치, 전반적인 활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표 5-7]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에 대한 ANOVA(분산) 분석결과

구분	주민자치(위원)회(a)		마을활동가(b)		공무원(c)		F	P	사후 검증 (Scheffe)
	M	SD	M	SD	M	SD			
▣ 지역성 수준	3.16	.997	3.25	.879	3.03	.881	.360	.698	n.s
▣ 공동의 유대감 수준	3.02	1.023	3.34	.937	2.85	1.078	1.893	.152	n.s
▣ 상호작용 수준	3.31	1.036	3.43	.800	3.10	.875	.820	.441	n.s
▣ 공익성 수준	3.15	1.010	3.40	1.011	2.96	.838	1.504	.223	n.s
▣ 주민자치 수준	3.08	1.050	3.09	.928	2.75	1.040	1.343	.262	n.s
▣ 전반적인 활성화 수준	3.22	1.014	3.31	.737	2.60	.875	5.379	.005***	c<a, b

p<0.05, *p<0.01

- 다음으로 주민-정부 간 관계에 기초하여 현행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는 현행 지역공동체가 주민협치 모형이라는

응답이 116명(31.2%)으로 가장 많은 응답 수준을 보였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리주의 모형이라는 응답이 14명(50.0%)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어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8] 지역공동체 유형(주민-정부간 관계) 인식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민- 정부간 관계	① 관리주의 모형	104	28.0	14	50.0	118	29.5
	② 파트너십 모형	37	9.9	3	10.7	40	10.0
	③ 주민협치 모형	116	31.2	2	7.1	118	29.5
	④ ① + ②	50	13.5	9	32.1	59	14.8
	⑤ ② + ③	62	16.7	0	0.0	62	15.5
	무응답	3	0.8	0	0.0	3	0.8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개념 정리	▣ 관리주의 유형	- 정부는 공급자, 주민은 온전히 고객(수요자)이며, 서비스 제공이 주민자치센터의 주된 기능이고, 지역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를 향유하는 공간임					
	▣ 파트너십 유형	- 주민과 정부 모두 공동생산자의 역할을 하며, 주민자치센터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수단이고, 지역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공간임					
	▣ 주민협치 유형	- 주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협치자의 역할을, 정부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치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공간임					

- 지역공동체의 주도주체에 기초한 유형 구분에 대한 응답 결과,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도 지방정부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31.7%(118명), 53.6%(15명)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5-9] 지역공동체 유형(주도주체) 인식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도 주체	① 중앙정부주도형	41	11.0	1	3.6	42	10.5
	② 지방정부주도형	118	31.7	15	53.6	133	33.3
	③ 자립형	43	11.6	2	7.1	45	11.3
	④ 주민-전문가 파트너십형	58	15.6	2	7.1	60	15.0
	⑤ ① + ②	31	8.3	3	10.7	34	8.5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⑥ ② + ③	34	9.1	2	7.1	36	9.0
	⑦ ③ + ④	18	4.8	0	0.0	18	4.5
	⑧ ② + ④	26	7.0	3	10.7	29	7.3
	무응답	3	0.8	0	0.0	3	0.8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개념 정리	▣ 중앙정부주도형	-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추진 및 재정지원을 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유형					
	▣ 지방정부주도형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추진 및 재정지원을 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유형					
	▣ 자립형	- 지역주민의 의식고취, 공동체 삶의 활성화 및 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하며, 외부적 요인의 지원과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공한 유형					
	▣ 주민-전문가 파트너십형	- 주민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주체적 역할을 하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유형이며,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전문성이 낮은 분야의 집중적 교육 및 지원 역할을 함					

- 한편, 지역공동체 구성형태에 따른 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현행 고양시의 지역공동체는 협업형 지역공동체의 구성형태를 띠고 있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회 및 마을활동가의 경우에는 33.6%(125명)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64.3%(18명)가 협업형 지역공동체라고 응답하였음

[표 5-10] 지역공동체 유형(구성형태) 인식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성 형태	① 기업형 지역공동체	24	6.5	4	14.3	28	7.0
	② 협업형 지역공동체	125	33.6	18	64.3	143	35.8
	③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	106	28.5	2	7.1	108	27.0
	④ ① + ②	18	4.8	2	7.1	20	5.0
	⑤ ① + ③	9	2.4	1	3.6	10	2.5
	⑥ ② + ③	50	13.4	0	0.0	50	12.5
	⑦ 모두해당	29	7.8	0	0.0	29	7.3
	무응답	11	3.0	1	3.6	12	3.0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개념 정리	▣ 기업형 지역공동체	-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 협업형 지역공동체	-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 혹은 협동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민자치회 등)					
	▣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	-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 변화를 꾀하려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교육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각종 공익형 풀뿌리운동단체 등)					

- 다음으로 지역공동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성격을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는 풀뿌리 운동형이라는 응답이 37.4%(139명)으로 가장 많았음
 -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정 사업이라는 응답이 50.0%(14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1] 지역공동체 유형(사업성격) 인식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업 성격	① 재정 사업형	82	22.0	14	50.0	96	24.0
	② 풀뿌리 운동형	139	37.4	8	28.6	147	36.8
	③ 기업형	29	7.8	1	3.6	30	7.5
	④ ① + ②	52	14.0	3	10.7	55	13.8
	⑤ ① + ③	18	4.8	0	0.0	18	4.5
	⑥ ② + ③	15	4.0	1	3.6	16	4.0
	⑦ 모두해당	30	8.1	1	3.6	31	7.8
	무응답	7	1.9	0	0.0	7	1.8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개념 정리	▣ 재정 사업형	- 정부가 사업비를 충당하는 정부주도사업(녹색체험마을사업 등)					
	▣ 풀뿌리 운동형	- 정부가 일 부 사업비를 보조하지만 자생적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형태(자활공동체사업 등)					
	▣ 기업형	- 정부가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지만 비즈니스 방식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형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 현행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주요 대상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형을 구분하면, 도시형과 농촌형의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응답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공무원의 응답결과 모두 해당한다는 응답이 각각 47.3%(176명), 50.0%(14명)으로 나타난 바, 현재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임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응답결과로 판단됨

[표 5-12] 지역공동체 유형(대상지역) 인식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상 지역	① 도시형	133	35.8	8	28.6	141	35.3
	② 농촌형	57	15.3	6	21.4	63	15.8
	③ 모두 해당	176	47.3	14	50.0	190	47.5
	무응답	6	1.6	0	0.0	6	1.5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개념 정리	▣ 도시형	- 도시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후에 재정사업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동(洞)단위로 많이 진행되고 전문지식과 인적역량이 풍부함					
	▣ 농촌형	- 자연마을단위에서 재정자원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며, 전문지식이나 인적역량은 도시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우가 많음					

- 마지막으로 현재 고양시의 여러 지역공동체가 추구하는 사업목적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면(중복응답),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의 경우 지역복지형이 가장 많은 21.1%(236명)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지역교육형 13.8%(154명), 문화역사형 10.7%(119명), 지역안전형 10.5%(117명), 생활정비형 10.4%(116명) 순으로 나타났음
-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역복지형이 27.4%(23명)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지역교육형 17.9%(15명), 생활정비형 13.1%(11명) 순으로 확인되었음

[표 5-13] 지역공동체 유형(사업목적) 인식(중복응답)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업 목적	① 지역산업형	85	7.6	5	6.0	90	7.5
	② 공유경제형	82	7.3	7	8.3	89	7.4
	③ 지역교육형	154	13.8	15	17.9	169	14.1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④ 지역복지형	236	21.1	23	27.4	259	21.6
	⑤ 문화역사형	119	10.7	8	9.5	127	10.6
	⑥ 지역안전형	117	10.5	5	6.0	122	10.2
	⑦ 생활정비형	116	10.4	11	13.1	127	10.6
	⑧ 환경생태형	90	8.1	1	1.2	91	7.6
	⑨ 다문화지원형	2	0.2	0	0.0	2	0.2
	무응답	115	10.3	9	10.7	124	10.3
	합계	1,116	100.0	84	100.0	1,200	100.0
	개념 정리	▣ 지역산업형	- 지역소재 산업지원(향토산업, 시장활성화 등)				
▣ 공유경제형		-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실천(지역화폐 등)					
▣ 지역교육형		- 지역교육 연계사업 추진(평생교육, 청소년 쉼터 등)					
▣ 지역복지형		- 지역복지 연계사업 추진(저소득층/노인 지원, 보육공동체 등)					
▣ 문화역사형		- 지역문화 및 역사 보존/활용을 통한 지역홍보(문화역사마을가꾸기)					
▣ 지역안전형		- 방범, 방재, 교통 등 지역안전 지원(어린이 통학로 등)					
▣ 생활정비형		- 노후주택, 주차장 등 생활여건 정비(마을환경개선 등)					
▣ 환경생태형		- 자원재생 및 보전을 통한 지역순환(자원재생, 생태보존 등)					
▣ 다문화지원형	-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등)						

○ 현행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마을활동가가 바라보는 현행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모습은 도시·농촌 복합형태의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 활동주체가 고양시의 행·재정 지원을 토대로 하여 공공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교육·문화역사 등의 특성을 가진 협동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형성된 생태계라 할 수 있음
- 반면,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이 인식하는 현행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모습은 도시·농촌 복합형태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존적 활동주체가 고양시의 행·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부문이 제시한 계획에 따라 복지·교육·생활환경정비 등의 특성을 가진 협업사업을 수동적으로 추진하여 형성된 생태계라 할 수 있음
- 결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간의 공통적인 인식은 고양시의 행·재정 지원과 주요 활동 대상지역의 특성 및 추진 사업의 성격에 한정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요건인 자발적 참여와 역량 등에 있어서는 상이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3. 현행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 현행 지역공동체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주체의 역할 수행 수준 요인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 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14] 현행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주민자치회 등	공무원			
현행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 수준	▣ 지역공동체 지원정책 인식 유무	○		명목	기술(빈도)	
	▣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		서열	t-test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		서열	t-test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지원	○		서열	t-test	
	▣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사업 지원	○		서열	t-test	
	▣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지원	○		서열	t-test	
	▣ 마을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지원	○		서열	t-test	
	▣ 시민·주민자치위원 교육·컨설팅 지원	○		서열	t-test	
	▣ 자원발굴 관련 교육·연구 조사 지원	○		서열	t-test	
	▣ 자치역량 강화, 경제공동체 사업 지원	○		서열	t-test	
	지역 공동체 주체의 역할 수행 수준	▣ 주민자치기능	○	○	서열	ANOVA
		▣ 문화여가기능	○	○	서열	ANOVA
		▣ 지역복지기능	○	○	서열	ANOVA
		▣ 주민편익기능	○	○	서열	ANOVA
		▣ 시민교육기능	○	○	서열	ANOVA
		▣ 지역사회진흥 기능	○	○	서열	ANOVA
		▣ 지역의 전통과 특성 계승·발전	○	○	서열	ANOVA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	서열	ANOVA

- 먼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책의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 모두 해당 지원 정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률은 각각 61.8%(210명), 81.3%(26명)로 나타났음

[표 5-15] 지역공동체 지원정책 인식 유무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원 정책 인식	① 알고 있다	210	61.8	26	81.3	236	63.4
	② 모른다	102	30.0	5	15.6	107	28.8
	무응답	28	8.2	1	3.1	29	7.8
	합계	340	100.0	32	100.0	372	100.0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공동체 사업에의 지원에 대한 만족수준을 측정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 간의 뚜렷한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한 만족수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두 집단 모두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지원’,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정서적·호혜적 경제공동체 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마을활동가의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표 5-16] 현행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수준

구분	집단	N	Mean	Std. Dev.	t	Sig. (s-tailed)
1.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	주민자치(위원회)	330	3.13	0.841	-.558	.580
	마을활동가	32	3.21	0.792		
2. 자치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	주민자치(위원회)	330	3.10	0.835	-.369	.714
	마을활동가	32	3.15	0.723		
3.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328	3.15	0.892	.533	.597
	마을활동가	32	3.06	0.914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사업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330	3.00	1.458	1.943	.058
	마을활동가	32	2.65	0.902		
5.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330	3.12	0.942	1.053	.299
	마을활동가	32	2.96	0.782		
6. 마을문화 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329	3.13	0.934	.436	.665
	마을활동가	32	3.06	0.878		

구분	집단	N	Mean	Std. Dev.	t	Sig. (s-tailed)
7.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주민자치위원 교육 교류사업·컨설팅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330	3.10	0.882	-.285	.777
	마을활동가	32	3.15	1.081		
8.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331	2.86	0.858	.515	.610
	마을활동가	32	2.78	0.870		
9.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정서적·호혜적 경제공동체 사업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329	3.07	0.900	1.297	.203
	마을활동가	32	2.84	0.987		

p<0.05, *p<0.01

-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활동 주체의 역할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주민자치기능(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부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인식방향은 동일하게 나타났음
-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간의 인식 수준은 대부분의 역할에서 유사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사회진흥 기능’과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인식수준은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17] 지역공동체 활동주체의 역할 수행 수준

구분	집단	N	Mean	Std. Dev.	t	Sig. (s-tailed)
1. 주민자치기능(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	360	3.44	0.924	2.247	.031**
	공무원	28	3.11	0.737		
2. 문화여가기능(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	363	3.37	0.908	1.261	.208
	공무원	28	3.14	0.848		
3. 지역복지기능(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	363	3.18	0.881	.612	.541
	공무원	28	3.07	0.766		
4. 주민편익기능(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	361	3.15	0.898	.873	.383
	공무원	28	3.00	0.770		
5. 시민교육기능(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	359	3.31	0.910	.334	.739
	공무원	28	3.25	0.799		
6. 지역사회진흥 기능(마을기업 육성, 공동체 모임 육성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	363	3.15	0.900	1.700	.090
	공무원	28	2.86	0.756		
7.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	주민자치(위원회) 등	362	3.09	0.919	.919	.359
	공무원	28	2.93	0.900		
8.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자치(위원회) 등	361	3.06	0.899	1.564	.119
	공무원	28	2.79	0.876		

p<0.05, *p<0.01

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수행 정도에 대한 인식

- 중간지원조직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수행 요인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18]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수행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주민자치회 등	공무원		
중간 지원 조직 역할 수행 정도	▣ 지원센터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	○	서열	t-test
	▣ 자치공동체 지원발굴 조사·관리 및 사업화	○	○	서열	t-test
	▣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	○	서열	t-test
	▣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	○	서열	t-test
	▣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	서열	t-test
	▣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	○	서열	t-test
	▣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	○	○	서열	t-test
	▣ 중간지원조직의 추가 수행 기능	○	○	명목(개방)	기술(빈도)
	▣ 강화가 필요한 기능	○	○	명목	기술(빈도)

- 먼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근거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 부분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더불어 통계적 유의미성은 다소 낮으나,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의 경우에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수준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역할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19] 중간자원조직의 역할 수행 수준

구분	집단	N	Mean	Std. Dev.	t	Sig. (s-tailed)
1.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 평가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366	3.05	0.899	1.555	.121
	공무원	27	2.78	0.801		
2. 자치공동체 자원발굴 조사·관리 및 사업화	주민자치(위원회) 등	365	3.02	0.888	1.612	.108
	공무원	27	2.74	0.813		
3.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주민자치(위원회) 등	365	3.11	0.896	1.259	.209
	공무원	27	2.89	0.801		
4.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등	363	3.12	0.930	2.037	.042**
	공무원	27	2.74	0.813		
5.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주민자치(위원회) 등	364	3.00	0.908	1.457	.146
	공무원	27	2.74	0.813		
6.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주민자치(위원회) 등	365	3.00	0.908	1.651	.099
	공무원	27	2.70	0.775		
7.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등	365	3.14	0.939	2.536	.012**
	공무원	27	2.67	0.784		

- 다음으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역할 외에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역할에 대한 응답결과(개방형)는 다음과 같음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에서는 ‘전문적인 사업계획 컨설팅 및 회계처리 등 행정처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5.1%(5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음
 -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에서도 ‘전문적인 사업계획 컨설팅 및 회계처리 등 행정처리 지원’에 대한 의견이 17.9%(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0] 중간지원조직의 추가 수행 가능

[주민자치(위원)회 등]		
구분	빈도	백분율(%)
① 기획 및 행정처리 등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2	0.5
② 마을활동가 발굴, 육성 및 지원	4	1.1
③ 법률적 전문서비스 및 지원	2	0.5
④ 전문적인 사업계획 컨설팅 및 회계처리 등 행정처리 지원	56	15.1
⑤ 자치공동체 자원발굴(인적 및 물적) 지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0.8
⑥ 자치공동체의 독립적 운영 및 전문화 지원	3	0.8
⑦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10	2.7
⑧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3	0.8
⑨ 지역공동체 간 유기적 연계플랫폼 지원	3	0.8
기타	22	5.9
무응답	264	71.0
합계	372	100.0
[기타응답]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도농복합 사업계획 수립 지원,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사업, 지역별 유사사업의 연계플랫폼 지원, 사업지원 심사 시 명확한 기준 적용, 스포츠 관련 단체 조직화, 열정 부족, 자발적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신뢰 부족, 전국 우수사례 공유 및 교육, 전문적 컨트론타워 역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 주민자치회 네트워크 사업 지원(앱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원, 지원체계 일원화(꿈드림, 컨설턴트 등), 충분한 재정지원, 포괄적 관리, 항시적 컨설팅 지원, 형식적인 지원계획 지양 등		
[공무원]		
구분	빈도	백분율(%)
① 전문적인 사업계획 컨설팅 및 회계처리 등 행정처리 지원	5	17.9
② 기획 및 행정처리 등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2	7.1
기타	4	14.3
무응답	17	60.7
합계	28	100.0
[기타응답]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인력직접 관리, 단계별 맞춤 교육 및 훈련,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 등		

- 마지막으로 현행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 중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역할에 대한 응답결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의 경우 ‘자치공동체 자원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가 17.0%(190명)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음

-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이 20.2%(17명)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5-21] 시급히 강화가 필요한 기능(중복응답)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강화 필요 기능	①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150	13.4	10	11.9	160	13.3
	② 자치공동체 자원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190	17.0	12	14.3	202	16.8
	③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165	14.8	15	17.9	180	15.0
	④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 수립 지원	113	10.1	17	20.2	130	10.8
	⑤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141	12.6	11	13.1	152	12.7
	⑥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147	13.2	8	9.5	155	12.9
	⑦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	134	12.0	11	13.1	145	12.1
	무응답	76	6.8	0	0.0	76	6.3
	합계	1,116	100.0	84	100.0	1,200	100.0

5. 지역 내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 현행 고양시의 지역공동체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자본 요인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 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2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수행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주민자치회 등	공무원		
지역내 사회 자본	▣ 신뢰	○		서열	t-test
	▣ 호혜적 규범	○		서열	t-test
	▣ 네트워크	○		서열	t-test

- 먼저, 지역 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세부요인 중 ‘신뢰’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견 차이는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구청 등 고양시 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활동가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신뢰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여타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질문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신뢰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표 5-23]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신뢰)

구분	집단	N	Mean	Std. Dev.	t	Sig. (s-tailed)
1. 나는 고양시를 신뢰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3	3.53	0.923	-.098	.922
	마을활동가	31	3.55	0.810		
2. 나는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구청 등 고양시 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4	3.69	0.815	2.533	.012**
	마을활동가	32	3.31	0.738		
3. 나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마을공동체 등)를 신뢰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29	3.50	0.877	1.579	.115
	마을활동가	32	3.25	0.803		
4.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2	3.43	0.858	.357	.721
	마을활동가	32	3.38	0.660		
5. 나는 밤늦게 외출해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주민자치(위원회)	333	3.63	0.981	.562	.574
	마을활동가	32	3.53	1.016		
6. 나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332	3.55	0.980	-1.618	.106
	마을활동가	32	3.84	0.808		

- 다음으로 호혜성을 바탕으로 개인간 또는 집단간 공유되는 표현 또는 해석 등을 의미하는 규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 모두 세부질문에 대한 응답 수준이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지역 주민의 시민의식 함양 정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이기는 하나, 다른 여타 변수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가짐

[표 5-24]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호혜적 규범)

구분	집단	N	Mean	Std. Dev.	t	Sig. (s-tailed)
1. 나는 내가 거주하는 동네 또는 지역 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0	3.57	0.937	-1.062	.289
	마을활동가	32	3.75	0.880		
2. 나는 동네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2	3.28	0.943	-.751	.453
	마을활동가	32	3.41	0.756		
3. 나는 동네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2	3.25	0.959	.896	.371
	마을활동가	32	3.09	0.734		
4. 나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준다	주민자치(위원회)	332	3.99	0.813	.356	.722
	마을활동가	32	3.94	0.801		
5.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보답을 생각하지 않는다	주민자치(위원회)	331	3.96	0.996	-.372	.710
	마을활동가	32	4.03	0.782		
6.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보답을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1	4.02	0.738	-.997	.319
	마을활동가	32	4.16	0.847		

- 마지막으로 구조화되지 않는 상호작용 또는 연계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는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연계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뢰와 호혜적 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근간이 되는 원천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동네 모임에의 적극적 참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 간의 인식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여타 네트워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질문 모두 두 집단의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 충분성’ 부분에서는 다소 낮은 인식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표 5-25]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네트워크)

구분	집단	N	Mean	Std. Dev.	t	Sig. (s-tailed)
1. 나는 이웃들과 자주 만난다	주민자치(위원회)	334	3.75	0.912	-.570	.569
	마을활동가	32	3.84	0.808		
2. 나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2	3.81	0.863	1.789	.044**
	마을활동가	32	3.53	0.718		
3. 나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과 협력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2	3.88	0.794	1.548	.122
	마을활동가	32	3.66	0.745		
4. 나는 우리 동네 모임(부녀회,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3	3.75	0.972	2.426	.016**
	마을활동가	32	3.31	1.091		
5. 나는 우리 동네 모임(부녀회,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만난다	주민자치(위원회)	331	3.57	0.889	.452	.652
	마을활동가	32	3.50	0.842		
6. 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	334	3.32	0.938	.714	.479
	마을활동가	32	3.22	0.751		

6. 제도적 개선방안 및 자치공동체 비전에 대한 인식

- 현행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비전 요인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26] 제도적 개선 요인 및 향후 비전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주민자치회 등	공무원			
제도적 개선	▣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	○	명목	기술(빈도)	
	▣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수 요건	○	○	명목	기술(빈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체	○	○	명목	기술(빈도)	
	▣ 지역공동체 공간규모	○	○	명목	기술(빈도)	
	지원 사업별 전담 조직	▣ 재정지원	○	○	명목	기술(빈도)
		▣ 사업화 및 세부계획 수립(컨설팅)	○	○	명목	기술(빈도)
		▣ 우수사례 공유	○	○	명목	기술(빈도)
		▣ 마을자원 및 정보 발굴과 공유	○	○	명목	기술(빈도)
		▣ 마을리더 및 활동가 양성	○	○	명목	기술(빈도)
		▣ 자문 등 전문가 지원	○	○	명목	기술(빈도)
	▣ 지역공동체에 대한 전문교육	○	○	명목	기술(빈도)	
비전	▣ 고양시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	○	○	명목(개방)	기술(빈도)	

- 먼저, 현재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는 1순위로 ‘회원확보 및 주민참여 부족 (35.5%, 132명)’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순위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20.7%, 77명)’, 3순위로는 ‘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능력 부족 (17.2%, 64명)’ 등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회원확보 및 주민참여 부족 (46.4%, 13명)’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공동체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역량 부족(35.7%, 10명)’ 또한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5-27]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순위응답)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순위	① 회원확보 및 주민참여 부족	132	35.5	13	46.4	145	36.3
	② 현장 활동가의 리더 부족	56	15.1	8	28.6	64	16.0
	③ 공동체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역량 부족	49	13.2	2	7.1	51	12.8
	④ 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능력 부족	29	7.8	4	14.3	33	8.3
	⑤ 재원조달의 어려움	53	14.2	0	0.0	53	13.3
	⑥ 고양시의 협조 부족	28	7.5	1	3.6	29	7.3
	⑦ 고양시 의회의 협조 부족	9	2.4	0	0.0	9	2.3
	⑧ 기타	1	0.3	0	0.0	1	0.3
	무응답	15	4.0	0	0.0	15	3.8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2순위	① 회원확보 및 주민참여 부족	28	7.5	6	21.4	34	8.5
	② 현장 활동가의 리더 부족	61	16.4	6	21.4	67	16.8
	③ 공동체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역량 부족	71	19.1	10	35.7	81	20.3
	④ 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능력 부족	58	15.6	6	21.4	64	16.0
	⑤ 재원조달의 어려움	77	20.7	0	0.0	77	19.3
	⑥ 고양시의 협조 부족	30	8.1	0	0.0	30	7.5
	⑦ 고양시 의회의 협조 부족	22	5.9	0	0.0	22	5.5
	⑧ 기타	1	0.3	0	0.0	1	0.3
	무응답	24	6.5	0	0.0	24	6.0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3순위	① 회원확보 및 주민참여 부족	58	15.6	6	21.4	64	16.0
	② 현장 활동가의 리더 부족	25	6.7	4	14.3	29	7.3
	③ 공동체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역량 부족	57	15.3	10	35.7	67	16.8
	④ 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능력 부족	64	17.2	6	21.4	70	17.5
	⑤ 자원조달의 어려움	55	14.8	1	3.6	56	14.0
	⑥ 고양시의 협조 부족	53	14.2	0	0.0	53	13.3
	⑦ 고양시 의회의 협조 부족	29	7.8	0	0.0	29	7.3
	⑧ 기타	3	0.8	1	3.6	4	1.0
	무응답	28	7.5	0	0.0	28	7.0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 다음으로는 고양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는 1순위로 ‘리더·현장 활동가 발굴(23.9%, 89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마을사업 발굴’, ‘마을활동 구체화’가 15.1%(56명)로 뒤를 이었음
-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리더·현장 활동가 발굴’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순위로는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배치(17.9%, 5명)’가 뒤를 이었음

[표 5-28]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수 요건(순위응답)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순위	① 리더·현장 활동가 발굴	89	23.9	8	28.6	97	24.3
	② 마을사업 발굴	61	16.4	4	14.3	65	16.3
	③ 주민교육	56	15.1	2	7.1	58	14.5
	④ 마을활동 구체화	21	5.6	0	0.0	21	5.3
	⑤ 사업추진 노하우	20	5.4	1	3.6	21	5.3
	⑥ 추가 프로그램 발굴	7	1.9	1	3.6	8	2.0
	⑦ 재정지원	58	15.6	1	3.6	59	14.8
	⑧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등	13	3.5	1	3.6	14	3.5
	⑨ 전문가 자원(인력 Pool 구축 지원)	12	3.2	4	14.3	16	4.0
	⑩ 리더·활동가 등에 대한 의무교육	11	3.0	1	3.6	12	3.0
	⑪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배치	4	1.1	5	17.9	9	2.3
	⑫ 기타	0	0.0	0	0.0	0	0.0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무응답	20	5.4	0	0.0	20	5.0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2순위	① 리더·현장 활동가 발굴	31	8.3	6	21.4	37	9.3
	② 마을사업 발굴	56	15.1	3	10.7	59	14.8
	③ 주민교육	36	9.7	3	10.7	39	9.8
	④ 마을활동 구چه화	56	15.1	4	14.3	60	15.0
	⑤ 사업추진 노하우	19	5.1	3	10.7	22	5.5
	⑥ 추가 프로그램 발굴	15	4.0	0	0.0	15	3.8
	⑦ 재정지원	52	14.0	0	0.0	52	13.0
	⑧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등	38	10.2	1	3.6	39	9.8
	⑨ 전문가 자원(인력 Pool 구축 지원)	25	6.7	3	10.7	28	7.0
	⑩ 리더 활동가 등에 대한 의무교육	5	1.3	2	7.1	7	1.8
	⑪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배치	16	4.3	3	10.7	19	4.8
	⑫ 기타	0	0.0	0	0.0	0	0.0
	무응답	23	6.2	0	0.0	23	5.8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3순위	① 리더·현장 활동가 발굴	30	8.1	3	10.7	33	8.3
	② 마을사업 발굴	24	6.5	4	14.3	28	7.0
	③ 주민교육	41	11.0	3	10.7	44	11.0
	④ 마을활동 구چه화	37	9.9	3	10.7	40	10.0
	⑤ 사업추진 노하우	22	5.9	3	10.7	25	6.3
	⑥ 추가 프로그램 발굴	17	4.6	1	3.6	18	4.5
	⑦ 재정지원	51	13.7	1	3.6	52	13.0
	⑧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등	22	5.9	2	7.1	24	6.0
	⑨ 전문가 자원(인력 Pool 구축 지원)	28	7.5	1	3.6	29	7.3
	⑩ 리더 활동가 등에 대한 의무교육	33	8.9	2	7.1	35	8.8
	⑪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배치	39	10.5	5	17.9	44	11.0
	⑫ 기타	1	0.3	0	0.0	1	0.3
	무응답	27	7.3	0	0.0	27	6.8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 현재 고양시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모두 1순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2순위로는 전자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21.8%, 81명)’, 후자의 경우에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25.0%, 7명)’가 랭크되었고, 3순위에서는 두 집단 모두 ‘마을단위 소규모 공

동체'가 핵심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표 5-29]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체(순위응답)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순위	① 정부(고양시청)	74	19.9	3	10.7	77	19.3
	② 고양시 의회	20	5.4	1	3.6	21	5.3
	③ 일반구(구청)	15	4.0	0	0.0	15	3.8
	④ 동 행정복지센터	41	11.0	0	0.0	41	10.3
	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43	11.6	5	17.9	48	12.0
	⑥ 주민자치(위원회)	116	31.2	15	53.6	131	32.8
	⑦ 민간단체(NGO 등)	8	2.2	0	0.0	8	2.0
	⑧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37	9.9	4	14.3	41	10.3
	⑨ 기타	1	0.3	0	0.0	1	0.3
	무응답	17	4.6	0	0.0	17	4.3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2순위	① 정부(고양시청)	14	3.8	4	14.3	18	4.5
	② 고양시 의회	45	12.1	0	0.0	45	11.3
	③ 일반구(구청)	15	4.0	2	7.1	17	4.3
	④ 동 행정복지센터	81	21.8	1	3.6	80	20.0
	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67	18.0	7	25.0	74	18.5
	⑥ 주민자치(위원회)	79	21.2	4	14.3	85	21.3
	⑦ 민간단체(NGO 등)	13	3.5	3	10.7	16	4.0
	⑧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35	9.4	6	21.4	41	10.3
	⑨ 기타	0	0	0	0.0	0	0.0
	무응답	23	6.2	0	0.0	23	5.8
	합계	372	100.0	28	100.0	400	99.8
3순위	① 정부(고양시청)	39	10.5	1	3.6	40	10.0
	② 고양시 의회	11	3.0	0	0.0	11	2.8
	③ 일반구(구청)	34	9.1	2	7.1	36	9.0
	④ 동 행정복지센터	56	15.1	1	3.6	57	14.3
	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49	13.2	4	14.3	53	13.3
	⑥ 주민자치(위원회)	55	14.8	2	7.1	57	14.3
	⑦ 민간단체(NGO 등)	26	7.0	3	10.7	29	7.3
	⑧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73	19.6	12	42.9	85	21.3
	⑨ 기타	2	0.5	1	3.6	3	0.8
	무응답	27	7.3	2	7.1	29	7.3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 한편, 고양시 지역공동체 생태계의 적절한 공간규모(지역성)에 대한 질문결과, 주민

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는 행정동(洞)을 경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48.4%(18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반면,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동네단위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39.3%(1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5-30] 지역공동체의 적절한 공간규모(순위응답)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순위	① 일반구(區) 경계	79	21.2	5	17.9	84	21.0
	② 행정동(洞) 경계	180	48.4	10	35.7	190	47.5
	③ 통 경계	9	2.4	2	7.1	11	2.8
	④ 동네단위 경계(아파트 등)	70	18.8	11	39.3	81	20.3
	⑤ 기타	4	1.1	0	0.0	4	1.0
	무응답	30	8.1	0	0.0	30	7.5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의 마지막으로 지원사업별 전담조직의 선호 정도를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재정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모두 고양시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사업화 및 세부계획 수립(컨설팅)’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 집단은 고양시청이,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은 중간지원 조직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우수사례 공유’의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 고양시청에서 전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마을자원 및 정보발굴과 공유’에 있어서 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담하고, 후자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마을리더 및 활동가 양성’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자문 등 전문가 지원’ 역할은 전자의 경우 고양시청이, 후자의 경우 전문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전문교육’에 있어

서는 전자의 경우 고양시청, 후자의 경우 고양시청과 전문기관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표 5-31] 자치공동체 지원사업별 전담조직 선호(순위응답)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재정 지원	① 중앙정부	35	9.4	2	7.1	37	9.3
	② 광역자치단체	38	10.2	5	17.9	43	10.8
	③ 고양시청	180	48.4	12	42.9	192	48.0
	④ 구청	19	5.1	4	14.3	23	5.8
	⑤ 동 행정복지센터	45	12.1	0	0.0	45	11.3
	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13	3.5	2	7.1	15	3.8
	⑦ 전문기관	11	3.0	2	7.1	13	3.3
	무응답	31	8.3	1	3.6	32	8.0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사업화 및 세부계획 수립 (컨설팅)	① 중앙정부	3	0.8	1	3.6	4	1.0
	② 광역자치단체	27	7.3	2	7.1	29	7.3
	③ 고양시청	83	22.3	6	21.4	89	22.3
	④ 구청	82	22.0	4	14.3	86	21.5
	⑤ 동 행정복지센터	78	21.0	4	14.3	82	20.5
	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34	9.1	7	25.0	41	10.3
	⑦ 전문기관	30	8.1	4	14.3	34	8.5
	무응답	35	9.4	0	0.0	35	8.8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우수사례 공유	① 중앙정부	11	3.0	3	10.7	14	3.5
	② 광역자치단체	50	13.4	4	14.3	54	13.5
	③ 고양시청	111	29.8	6	21.4	117	29.3
	④ 구청	58	15.6	5	17.9	63	15.8
	⑤ 동 행정복지센터	63	16.9	1	3.6	64	16.0
	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27	7.3	5	17.9	32	8.0
	⑦ 전문기관	21	5.6	4	14.3	25	6.3
	무응답	31	8.3	0	0.0	31	7.8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마을자원 및 정보발굴과 공유	① 중앙정부	5	1.3	1	3.6	6	1.5
	② 광역자치단체	14	3.8	0	0.0	14	3.5
	③ 고양시청	70	18.8	5	17.9	75	18.8
	④ 구청	65	17.5	6	21.4	71	17.8
	⑤ 동 행정복지센터	131	35.2	5	17.9	136	34.0
	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33	8.9	5	17.9	38	9.5
	⑦ 전문기관	21	5.6	6	21.4	27	6.8
	무응답	33	8.9	0	0.0	33	8.3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마을리더 및 활동가 양성	① 중앙정부	2	0.5	1	3.6	3	0.8
	② 광역자치단체	11	3.0	0	0.0	11	2.8
	③ 고양시청	77	20.7	7	25.0	84	21.0
	④ 구청	72	19.4	4	14.3	76	19.0
	⑤ 동 행정복지센터	105	28.2	1	3.6	106	26.5
	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37	9.9	6	21.4	43	10.8
	⑦ 전문기관	35	9.4	9	32.1	44	11.0
	무응답	33	8.9	0	0.0	33	8.3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자문 등 전문가 지원	① 중앙정부	9	2.4	2	7.1	11	2.8
	② 광역자치단체	20	5.44	1	3.6	21	5.3
	③ 고양시청	109	29.3	9	32.1	118	29.5
	④ 구청	68	18.3	2	7.1	70	17.5
	⑤ 동 행정복지센터	47	12.6	0	0.0	47	11.8
	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22	5.9	3	10.7	25	6.3
	⑦ 전문기관	64	17.2	11	39.3	75	18.8
	무응답	33	8.9	0	0.0	33	8.3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지역공동체 에 대한 전문교육	① 중앙정부	8	2.2	1	3.6	9	2.3
	② 광역자치단체	22	5.9	0	0.0	22	5.5
	③ 고양시청	106	28.5	9	32.1	115	28.8
	④ 구청	75	20.2	2	7.1	77	19.3
	⑤ 동 행정복지센터	39	10.5	1	3.6	40	10.0
	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24	6.5	6	21.4	30	7.5
	⑦ 전문기관	67	18.0	9	32.1	76	19.0
	무응답	31	8.3	0	0.0	31	7.8
	합계	372	100.0	28	100.0	400	100.0

○ 한편,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핵심적 가치가 되는 비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으며, 개방형 질문의 활용으로 주요 키워드(key word)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였음

-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들이 향후 고양시 자치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책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로 고려하고 있는 내용은 ‘공유경제’, ‘공동생활 의식’, ‘투명성’, ‘풀뿌리’, ‘참여’ 등 27개의 키워드로 구분됨
-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 ‘자치공동체’, ‘경제’, ‘복지’ 등

15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제시한 핵심 가치는 ‘참여’, ‘자치공동체’, ‘상생발전’, ‘소통’, ‘자발적’, ‘자율과 책임’, 그리고 ‘봉사’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32] 향후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가칭)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요 키워드(key word)		
① 공유경제	⑩ 사회적경제	⑲ 함께
② 공동생활 의식	⑪ 상생발전	⑳ 사람중심
③ 투명성	⑫ 교육	㉑ 균형
④ 풀뿌리	⑬ 협력	㉒ 화합
⑤ 참여	⑭ 교육문화	㉓ 사회통합
⑥ 자부심	⑮ 조화	㉔ 자발적
⑦ 자치공동체	⑯ 문화도시	㉕ 자율과 책임
⑧ 지속가능한	⑰ 마을자치분권	㉖ 봉사
⑨ 공존	⑱ 소통	㉗ 헌신
[기타 키워드(key word)] 관광자원, 공유주차, 교통망, 남북경제, 고양민회, 마을과 자치, 더불어, 활동가, 리더, 사업발굴, 마을경제, 미래, 안전, 행복, 건강, 살기 좋은, 자원데이터베이스, 협동, 자립, 전문성, 홍보, 훈련, 일자리, 민주성, 환경개선, 등		
[공무원]		
주요 키워드(key word)		
① 자발적	⑥ 소통	⑪ 마을공동체
② 참여	⑦ 배려	⑫ 스스로
③ 자치공동체	⑧ 봉사	⑬ 상생발전
④ 경제	⑨ 관용	⑭ 독립적
⑤ 복지	⑩ 자율과 책임	⑮ 주민
[기타 키워드(key word)] 함께, 복지, 지원, 역량강화 등		

제4절 심층면접(FGI) 분석 결과

1. 심층면접(FGI) 응답자 특성

1) 응답자 특성

- 고양시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정량분석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자치공동체 현황 및 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심층면접(FGI)대상에 따라 분류한 각 집단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주민공동체 그룹 및 공동체 활동 단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인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 주민공동체의 경우 덕양구 및 일산동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에 소속된 활동가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공동체 활동 단체 및 네트워크의 경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가 이루어짐.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인력인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컨설턴트 및 마을꿈드림의 경우 총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별로 각 2인씩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가 이루어짐

[표 5-33] 심층면접(FGI) 응답자 특성

대상	사례	소속	지역
I 그룹 (주민공동체)	사례1	화전마을학교	덕양구
	사례2	수호천사 청소년 봉사단	덕양구
	사례3	고양e-팻캐스트	덕양구
	사례4	사람공동체 리드미	일산동구

대상	사례	소속	지역
II그룹 (공동체 활동 단체 및 네트워크)	사례5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 전체
	사례6	사)고양마을포럼	고양시 전체
	사례7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	덕양구
	사례8	사)사람마을	고양시 전체
	사례9	사)고양마을	고양시 전체
III그룹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인력)	사례10	고양모두넷	고양시 전체
	사례11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 전체
	사례12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 전체
	사례13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 전체
	사례14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 전체
IV그룹 (주민자치위원)	사례15	행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덕양구
	사례16	대덕동 주민자치위원회	덕양구
	사례17	식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일산동구
	사례18	풍산동 주민자치회	일산동구
	사례19	일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일산서구
	사례20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일산서구

2. 심층면접(FGI) 분석 결과

1) 자치공동체 운영 실태 및 현황

(1)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간 비협력적 관계 및 집행부 관련부서 분리 구조

-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활동가 간의 협력적 관계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부서인 주민자치과와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인 마을공동체팀 간의 칸막이 행정 구조로 인하여 두 공동체간 연계가 미흡한 상황임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공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동가가 응시 자체를 안 해요. 마을공동체는 독자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례15, 주민자치위원]

“활동가랑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10년 이상 탄탄하게 만들어진 단체인데 활동가들과 섞여서 구성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부심,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례16, 주민자치위원]

“저는 공동체에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다 가져가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해버려요.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사례11,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인력]

(2)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 및 전문성 미흡

- 중간지원조직인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꿈드림 사업을 포함하여 컨설팅 등 관련 지원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역할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꿈드림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꿈드림 자체가 교육이 부족해요.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어요”

[사례17, 주민자치위원]

“행사를 해도 보조역할만 하는 정도지, 아이디어를 내서 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못 해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사례18, 주민자치위원]

“소속감이나 특성이 없잖아요.. 그냥 파견된 거니까.. 동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례19,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간 성격 및 체계의 상이함

-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는 공동체 자체의 성격과 체계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 자체가 소규모 모임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여기거나 동 전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함
 -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갖는 권한을 마을공동체와 배분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함

“주민자치(위원회)는 까다로운 운영기준이 있어요. 예산을 받잖아요 어쨌든. 근데 마을공동체는 비교적 편안하거든요. 3명에서 5명끼리 그 안에서 소소하게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례18, 주민자치위원]

“일반 공동체는 체계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업하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와 각을 세우기도 하고.”

[사례20,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는 설립의 목적이나 역할 자체가 달라요.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은 예산권밖에 없어요. 인사권도 없다고.”

[사례19, 주민자치위원]

“봉사시간이 있거나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받으면 가산점 받잖아요. 비슷하게 공동체교육이 있으면 가산점 있는 제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2, 주민공동체]

“공동체 활동할 때 관련 플래카드를 달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바로 떼어갔거든요? 그런데 딱 한 줄만 더 있으면 안 떼요. ‘후원 : 주민자치위원회’. 이거만 있으면 그대로 두더라니까요?”

[사례14, 마을공동체 활동 자원인력]

(4) 자치공동체 관련업무 담당 행정의 지속성 미흡

- 주민자치(위원)회 및 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업무담당 인력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나 공동체 활동이 분절적으로 운영된다고 느끼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인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연속성 있게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어려운 점은 담당 공무원이 매년 바뀌는 것이에요. 충분히 소통을 해서 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사례16,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에요. 마을공동체의 경우에도 공동체사업을 공모해서 사업 하나 하면 그냥 끝나서 지속성이 없죠.”

[사례18, 주민자치위원]

“중간지원조직이 있어 센터 직원들이 바뀌지 않게 된 것이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긴 해요. 연속성 있게 의미를 부여하고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가 있는 게 공동체 일하는 주체들에겐 의미가 있어요.”

[사례8, 공동체 활동 단체 및 네트워크]

2)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욕구 및 제언

(1)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 및 전문성 강화

- 중간지원조직이 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연결하여 화합하게 하고 교육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중간지원조직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상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편향되게 지원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객관적이면서 전문성을 확보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시정연구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마을활동가를 파악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크를 해서 같이 활동하자고 제안을 해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들 곁으로 가서 주민을 안고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현재 이원화된 체계도 점점 바뀌어갈 거라고 기대해요.”

[사례8, 주민자치위원]

“각 동마다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마을활동가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연결해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마을활동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동 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요.”

[사례8, 주민자치위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중간지원조직인 센터의 경우 활동가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이 침체되고 있거든요.”

[사례6, 주민자치위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편향을 줄이고, 객관적이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두 공동체간 화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역할을 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례7, 주민자치위원]

“사실 그동안 공동체랑 주민자치위원회가 투트랙이 된 이유 자체도 관에서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센터가 중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미뤄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사례9, 주민자치위원]

(2)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간의 인적교류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마을공동체 활동가간 인적 교류를 통하여 이원화 구조를 타파하고 자치공동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회로의 진입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 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내부적으로 순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 지역 내 공동체와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을공동체 활동가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였음
 -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지역 내 당연직 선출방식을 제안하기도 함
 - 또 다른 방안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마을공동체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역 내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됨

“저는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활동가로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활동가 중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견인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나 고정된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14,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인력]

“주민자치회 구성원에 변화를 주려고 마을공동체 분과를 따로 만들어서 활동가 뽑으려고 하거든요. 마을활동가들 위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면 분과를 아예 따로 구성해서 주민자치회보다는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는 거죠.”

[사례18, 주민자치위원]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공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동가가 응시 자체를 안 해요. 마을공동체는 독자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례15,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순환되어지는 조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진입장벽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순환되는 방법으로 선출 방법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여요.”

[사례6, 공동체활동 단체 및 네트워크]

“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회나 공동체가 나눠지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이 들어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사례4, 주민공동체]

“어떤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출방식으로 넣는데, 입주자대표자는 무조건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나 상가면 상가번영회장은 들어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지역 안에서 대표성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루트로 인력의 선순환적 교류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례3, 주민공동체]

(3) 자치공동체 담당인력의 지속성 확보

- 주민자치(위원)회 및 공동체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잦은 변동이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내 자치공동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담인력의 배치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에요. 마을공동체의 경우에도 공동체사업을 공모해서 사업 하나 하면 그냥 끝나서 지속성이 없죠.”

[사례18, 주민자치위원]

“담당공무원의 경우에 1년도 안됐는데 전출을 가는 게 문제예요. 주민자치(위원)회든 마을공동체 활동이든 행정이 함께 맞물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리리 각 동네 주민자치활동만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사례15, 주민자치위원]

(4)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한 교육 및 인식전환

- 이원화한 자치공동체의 화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므로 위원 및 활동가 간의 소통과 의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서는 관련 교육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두 주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두 공동체가 갖는 각각의 특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상호 보완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이 각 사업의 성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주민보다는 공동체 활동가들이 그런 역할을 더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활동가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견제하는 게 문제거든요. 중간 지원조직에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식 전환을 위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사례9, 주민자치위원]

“활동하는 주체에 대해 신경 쓸 게 아니라, 사실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영역을 빼앗긴다는 경계심이 아니라 소통과 의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례7, 공동체 활동 단체 및 네트워크]

“두 공동체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서로 역할의 다른 부분은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이 이러한 사업의 성과들을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사례1, 주민공동체]

(5)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관련 집행부 조직의 부서 간 통합

-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가 각각 참여자치팀과 마을공동체팀으로 나뉘어져, 현장에서의 분리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수렴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에서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랑 마을공동체 담당 행정 부서가 각각 참여자치팀, 마을공동체팀으로 나뉘어있잖아요. 집행부에서부터 나뉘어져있다고 보니까 행정 칸막이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분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직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협력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례18, 주민자치위원]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감독 부서가 마을공동체팀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랑 위원들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참여자치팀에 뭔가 요청을 해도 전달이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참여자치)팀에서는 권한이 없고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런 부분도 부서 통합이 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사례20, 주민자치위원]

제 6 장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절 연구 결과의 요약

- 앞서 제5장에서는 고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 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마을활동가,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과 심층면접(FGI)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요약

-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요인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들 즉, 지역성, 공동의 유대감, 상호작용, 공익성, 주민자치 등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역성과 공동의 유대감을 제외하고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 특히, 하부행정기구에서 주민자치기능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주민자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자치공동체 활성화 주체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는 예측이 가능한 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더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수요소인 공동의 유대감과 부가요소인 공익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주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이 요구됨
 - 추가로 현재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유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간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유·무형의 의존성향 감소와 자생역량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수적임

-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활동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의 ‘현행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이 지원정책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다만,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며, 특히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사업 지원’과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더불어, 조례에 따라 부여된 지역공동체 활동 주체의 역할 수행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는 본인들의 역할 수행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진흥 기능(마을기업 육성, 공동체 모임 육성 등)’,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청됨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수행’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부여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수준이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부여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만족 수준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역할 수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도입 이후 역량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주체와 공공부문 간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본래 목적과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적 기능의 발굴 등 명확하고 체계적인 역할정립이 요구됨
 -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모두 ‘전문적인

사업계획 컨설팅 및 회계처리 등 행정처리 지원'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응 노력이 요구됨

- 한편, 고양시 지역공동체 생태계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세부요인에 있어서는 다소 부진한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신장하기 위한 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협력, 참여, 정보의 공유 등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을 축진시키는 매개체임을 고려할 때, 지역공동체 주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요구되는 공동의 유대감과 상호작용, 주민자치 수준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다음으로 '제도적 개선방안 및 향후 자치공동체 비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모두 주민참여 부족과 자원조달의 어려움, 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능력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리더 및 활동가 발굴, 마을사업·활동 구체화, 공공부문의 재정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
 - 더불어 고양시의 지역공동체는 행정동(洞) 또는 동네단위를 경계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별 전담조직에 있어서는 양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바, 주민자치(위원)회는 재정지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을 시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전담하고 여타 다른 사업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종합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은 현행 지역공동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동일 또는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 활

성화 사업의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향후 고양시의 중·장기적 자치공동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근간이 되는 ‘비전’에 대한 조사결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와 공무원 모두 유사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연계선상에서 추정이 가능함
 - 구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 ‘상생발전’ 등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현 문제인 정부에서의 자치분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필수요소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발성’, ‘봉사’ 등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기존의 타의적·의존적·이기적인 특성에서 자의적·자생적·이타적인 주민자치로의 점진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2. 심층면접(FGI) 분석 결과 요약

-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간의 경쟁적·견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상호간 협력이 어렵고, 특히 해당 주체들을 지원하는 집행부의 전담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지원 사업 및 정책 간의 연계가 느슨함에 따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음
 - 지역공동체의 주요 활동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는 상호간의 특성 및 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둘째, 중간지원조직인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활동가 모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꿈드림 미 및 컨설팅 지원에 있어 해당 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

- 더불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 중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 단절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됨
 -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9개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안정적 효과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제2절 정책 제언

-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자치공동체 현황 및 정책분석과 설문조사, 심층면접 (FGI)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첫째, 집행부인 고양시청 차원에서 현행 이원화 되어 있는 자치(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공공부문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시행 주체가 직제상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자치(지역)공동체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조직의 일원화가 필수적임
 - 이에 현재 주민자치과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공동체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 참여자치팀과 마을공동체팀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지원 정책 간의 연계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과 향후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등과 같은 환경변화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조직의 기능 강화 및 확대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인력증원이 요구됨
- 둘째, 자치(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강화와 기능의 다변화, 그리고 사업추진 상에서의 자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 시행 이후,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와 공공부문 간의 연계역할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치(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결국, 중간지원조직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동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시행과 함께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비롯한 공공부문과의 협력적 연계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따라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향후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기본운영계획과 연도별 실행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운영계획은 동 조례 제26조에 따른 위탁기간을 고려하여 3년간을 목표기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치(지역)공동체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필수요소(지역성, 상호작용, 유대감)와 부가요소(공익성, 사업성), 그리고 강화요소(주민자치: 결정 및 집행)를 형성 및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지역정치성을 배제하고 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운영계획 및 연도별 실행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의 자율성이 가능토록 고양시청과 의회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물론, 자율성의 확보는 업무 수행에서 책임성과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한 바, 이를 위해서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수행 기능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이 선행될 때 가능할 수 있음
 - 성과평가체계는 개별 단위 사업별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통 및 특성지표, 투입·과정·산출·성과지표로 구분하고,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등으로 체계화하여 구축·적용되어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마을활동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경쟁상대 또는 견제상대가 아닌 협력상대로 인식해야 하고, 두 집단 모두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성향을 최소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현행 자치(지역)공동체 생태계를 복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의 지원이 없이는 요원함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재는 자생력을 갖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온전히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형성의 주체 또는 리더

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자 또는 기득권자가 아닌 봉사자라는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비롯한 역량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기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한편, 마을활동가는 상대적으로 제도적 규제가 느슨함을 고려하여 자치(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체의 활동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공익성을 극대화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와 법령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활동가의 존재 이유는 자치(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있음을 두 집단 모두 인식하여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대감을 형성해야 함
- 넷째, 자치(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체와 지역주민의 공동체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정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역할이 요청됨
 -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은 소극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현행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센터의 개별 지원 사업에 전문기관의 인력이 참여하는 하는 것임
 - 후자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대상별·수준별·단계별 커리큘럼에서 전문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이 지원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치(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자치(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정형화된 방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중·장기적 기본계획에는 고양시 관내 자치(지역)공동체 영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유형을 차별화 및 특화시키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며, 실행계획은 자치(지역)공동체 주체, 즉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고양시청, 행정복지센터, 전문기관 등의 역할 및 기능의 연계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매년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연도별 실행 계획과 평가결과가 연동될 수 있도록 환류기능(feed back)을 강화해야 함

참고문헌

- 강용배(2003).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요인 분석: 지역사회공동체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 189-215.
- 곽현근(2012). “동네짜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형성의 방향과 과제: 영국 동네거버넌스 제도 실험의 교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4.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2018). 『1동 1특성화 비전체계수립 결과 보고서』.
- 고양시청(2019). 『민선 7기 공약사업실천계획』.
- 국토교통부(201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2017).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김공양(2016). 『도시재생사업 사례의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김주석·김용국(2014).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과제: 민선5기 마을만들기 정책운동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 김주석 외(2015).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과제(2차)』, 수원시정연구원.
- 김주석 외(2016).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과제(3차):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수원시정연구원.
- 김일태(1998). “도시공공서비스 전달체제의 민간활력 도입”, 『도시문제』, 33(358) : 30-38.
- 김필두(201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201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353-369.
- 김호식·유원근(2007). “경제적 관점에서 본 지역공동체와 지역발전: 지역 산업 조직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5(1) : 59-89.
- 김현호(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병준(2012).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공동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4) : 1-26.
- 박병준(2012).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 1-26.
- 박병준·최현석(2012). “지역공동체 실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풀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3) : 1-22.
- 박종관(2012).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 183-193.
- 송창용·성양경(2009).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The HRD Review』, 12(2) : 92.
- 인현찬·구아영(2017).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연구』, 서울연구원.

- 안현찬·구아영(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안현찬·구아영(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정책리포트』, 1-21.
- 안현찬·구아영(2019).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연구원.
- 이선우 외(2013).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이재열(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5 : 23-49.
-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
- 전대욱 외(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기환(2006).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연숙(2015). “마을공동체의 젠더이슈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3) : 83-100.
- 조영재·조은정(2013). “농촌지역 귀농·귀촌인 정주현황 및 커뮤니티 실태 분석-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9(4) : 191-202.
- 차경은(2012).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의 행정참여 개선방안”, 『정책과학연구』, 21(2) : 112-134.
- 차진영(2019).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67-514.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
- 한규호(2009). “지역발전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황성군의 [미래청정법인 황성]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7(1) : 1-33.
- 한원택(1995). 『지방행정론: 이론 제도 실제』, 서울: 법문사.
- 허현중 외 2인(2018). 『아산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재)지역재단.
- 행정안전부(2017).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 행정안전부(2018). 『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2019). 『2019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 행정안전부(201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분야 매뉴얼』.
- Chaskin, R. J.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1997, 71(4) : 521-547.

- Fukuyama, Francis.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1995, 74(5) : 89-97.
 Hillery Jr., G. A.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1955, 20(2) : 111-123.
 Humphrey, A. "SWOT analysis for management consulting", *SRI alumni Newsletter*, 2005, 1 : 7-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마을공동체 기본법안(2017).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17.02.24.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www.city.go.kr>. 접속일 2019.10.1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접속일 2019.10.15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접속일 2019.09.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접속일 2019.09.10.

부록

부록1 설문지(마을공동체 활동가)

부록2 설문지(공무원)

[부록 1] 설문지(마을공동체 활동가)

【 고양시 자치공동체 실태 및 수요조사 】

2019년 8월

연구기관 :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조사기관 : 고양시 주민자치과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조사대상 :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시 주민자치과에서는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14년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 개념정리 】

- ▣ 지역공동체 :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사회적·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목표 또는 가치를 추구하는 주민집단으로 **마을공동체** 및 **자치공동체**와 같은 개념임
- ▣ 구성요소 : 지역성, 상호작용, 유대감, 공익성, 사업성
- ▣ 활동주체 : 현행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고양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동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그리고 **마을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음

I-1.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의 활동지역은 비교적 그 경계가 명확하다(지역성)					
② 마을의 주민들은 서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공동의 유대감)					
③ 고양시 주민은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한다(상호작용)					
④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는 활동 및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공익성)					
⑤ 고양시에서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한다.(주민자치)					
⑥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있다					

1-2. 귀하는 현재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유형(주민-정부간 관계)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관리주의 모델 ② 파트너십 모델 ③ 주민협치 모델
④ ‘① + ②’ 모델 ⑤ ‘② + ③’ 모델

【 개념정리 】

- 관리주의 유형 : 정부는 공급자, 주민은 온전히 고객(수요자)이며, 서비스 제공이 주민 자치센터의 주된 기능이고, 지역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를 향유하는 공간임
- 파트너십 유형 : 주민과 정부 모두 공동생산자의 역할을 하며, 주민자치센터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수단이고, 지역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공간임
- 주민협치 유형 : 주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협치자의 역할을, 정부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치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공간임

1-3. 귀하는 현재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유형(주도주체)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중앙정부주도형 ② 지방정부주도형 ③ 자립형
④ 주민-전문가 파트너십형 ⑤ ‘① + ②’ ⑥ ‘② + ③’
⑦ ‘③ + ④’ ⑧ ‘② + ④’

【 개념정리 】

- 중앙정부주도형 :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추진 및 재정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파동적으로 움직이는 유형
- 지방정부주도형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추진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파동적으로 움직이는 유형
- 자립형 : 지역주민의 의식고취, 공동체 삶의 활성화 및 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하며, 외부적 요인의 지원과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공한 유형
- 주민-전문가 파트너십형 : 주민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주체적 역할을 하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유형이며,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전문성이 낮은 분야의 집중적 교육 및 지원 역할을 함

1-4. 귀하는 현재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유형(구성형태)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업형 지역공동체 ② 협업형 지역공동체 ③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
- ④ ‘① + ②’ ⑤ ‘① + ③’ ⑥ ‘② + ③’
- ⑦ 모두 해당

【 개념정리 】

- 기업형 지역공동체 :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주거복지사업단 등)
- 협업형 지역공동체 :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 혹은 협동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민자치회 등)
-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 :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 변화를 꾀하려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교육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각종 공익형 풀뿌리운동단체 등)

1-5. 귀하는 현재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유형(사업성격)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재정 사업형 ② 풀뿌리 운동형 ③ 기업형
- ④ ‘① + ②’ ⑤ ‘① + ③’ ⑥ ‘② + ③’
- ⑦ 모두 해당

【 개념정리 】

- 재정 사업형 : 정부가 사업비를 충당하는 정부주도사업(녹색체험마을사업 등)
- 풀뿌리 운동형 : 정부가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지만 자생적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형태(자활공동체사업 등)
- 기업형 : 정부가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지만 비즈니스 방식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형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Ⅲ.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수행 정도

Ⅲ-1. 현재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지원센터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② 자치공동체 자원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③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④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⑤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⑥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⑦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					

Ⅲ-2. 귀하가 생각하실 때 위 문항에서 명시된 기능 외에 중간지원조직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회계처리, 사업계획 수립 등 전문서비스

Ⅲ-3. 귀하는 현재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활성화 수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조례상 기능 중 가장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지원센터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 ② 자치공동체 자원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 ③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 ④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 ⑤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⑥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 ⑦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

IV. 지역 내 사회자본

▣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혀 아니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거 분히 아닙니다	대 체 아 니 하 지 않 습 니다	매 우 아 니 하 지 않 습 니다
① 나는 고양시를 신뢰한다.					
② 나는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구청 등 고양시 내 공공 기관을 신뢰한다.					
③ 나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민간단체, 마을공동체)를 신뢰한다.					
④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⑤ 나는 밤늦게 외출해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⑥ 나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					
⑦ 나는 내가 거주하는 동네 또는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⑧ 나는 동네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⑨ 나는 동네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					
⑩ 나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준다.					
⑪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보답을 생각하지 않는다.					
⑫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보답을 한다.					
⑬ 나는 이웃들과 자주 만난다.					
⑭ 나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⑮ 나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과 협력한다.					
⑯ 나는 우리 동네 모임(부녀회, 반사회, 학부모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⑰ 나는 우리 동네 모임(부녀회, 반사회, 학부모 모임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⑱ 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V. 제도적 개선방안

V-1. 귀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회원확보 및 주민참여 부족 | ② 현장 활동가와 리더 부족 |
| ③ 공동체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역량 부족 | ④ 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능력 부족 |
| ⑤ 자원조달의 어려움 | ⑥ 고양시의 협조 부족 |
| ⑦ 고양시 의회의 협조 부족 | ⑧ 기타() |

V-2. 귀하가 거주 또는 활동하는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리더·현장 활동가 발굴 | ② 마을사업 발굴 |
| ③ 주민교육 | ④ 마을활동 구체화 |
| ⑤ 사업추진 노하우 | ⑥ 추가 프로그램 발굴 |
| ⑦ 재정지원 | ⑧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등 |
| ⑨ 전문가 지원(전문인력 Pool 구축·지원) | ⑩ 리더·활동가 등에 대한 의무교육 |
| ⑪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배치 | ⑫ 기타() |

V-3. 귀하는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 역할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정부(고양시청) | ② 고양시 의회 | ③ 일반구(구청) |
| ④ 동 행정복지센터 | 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 ⑥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
| ⑦ 민간단체(NGO 등) | ⑧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 ⑨ 기타() |

V-4. 귀하는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공간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일반구(區) 경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② 행정동(洞) 경계
- ③ 통 경계
- ④ 동네단위 경계(아파트, 상가지역 등)
- ⑤ 기타()

V-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어디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중앙 정부	광역 자치 단체	고양 시청	구청	동 행정 복지 센터	중간 지원 조직	전문 기관
① 재정지원							
② 사업화 및 세부계획 수립(컨설팅)							
③ 우수사례 공유							
④ 마을자원 및 정보 발굴과 공유							
⑤ 마을리더 및 활동가 양성							
⑥ 자문 등 전문가 지원							
⑦ 지역공동체에 대한 전문교육							

VI. 고양시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가치)

- ▣ 귀하는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비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하고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고양시의 비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고양시의 시정목표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특별시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발전도시	
민선7기 고양시의 미래상	1. 한반도-동북아 허브도시 2. 남북경제 중심도시 3. 대한민국 평화도시 4. 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도시 5.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	6.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도시 7. 안전하고 건강한 행정복지도시 8. 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9. 빠르고 깨끗한 쾌적도시 10. 상생과 공존의 지속가능도시
서울특별시	마을과 자치, 모두를 위한 서울	
인천광역시	사람을 품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경기도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충청북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자치공동체	
아산시	자치와 협동의 마을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아산	
수원시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회복	
광명시	다양한 광명, 즐거운 광명, 가능한 광명	

[부록 2] 설문지(공무원)

【 고양시 자치공동체 실태 및 수요조사 】

2019년 8월

연구기관 :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조사기관 : 고양시 주민자치과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조사대상 :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시 주민자치과에서는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14년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1-2. 귀하는 현재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유형(주민-정부간 관계)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관리주의 모델
- ② 파트너십 모델
- ③ 주민협치 모델
- ④ ‘① + ②’ 모델
- ⑤ ‘② + ③’ 모델

【 개념정리 】

- 관리주의 유형 : 정부는 공급자, 주민은 온전히 고객(수요자)이며, 서비스 제공이 주민 자치센터의 주된 기능이고, 지역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를 향유하는 공간임
- 파트너십 유형 : 주민과 정부 모두 공동생산자의 역할을 하며, 주민자치센터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수단이고, 지역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공간임
- 주민협치 유형 : 주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협치자의 역할을, 정부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치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공간임

1-3. 귀하는 현재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유형(주도주체)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중앙정부주도형
- ② 지방정부주도형
- ③ 자립형
- ④ 주민-전문가 파트너십형
- ⑤ ‘① + ②’
- ⑥ ‘② + ③’
- ⑦ ‘③ + ④’
- ⑧ ‘② + ④’

【 개념정리 】

- 중앙정부주도형 :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추진 및 재정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파동적으로 움직이는 유형
- 지방정부주도형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추진 및 재정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파동적으로 움직이는 유형
- 자립형 : 지역주민의 의식고취, 공동체 삶의 활성화 및 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하며, 외부적 요인의 지원과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공한 유형
- 주민-전문가 파트너십형 : 주민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주체적 역할을 하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유형이며,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전문성이 낮은 분야의 집중적 교육 및 지원 역할을 함

1-4. 귀하는 현재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유형(구성형태)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업형 지역공동체 ② 협업형 지역공동체 ③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
 ④ ‘① + ②’ ⑤ ‘① + ③’ ⑥ ‘② + ③’
 ⑦ 모두 해당

【 개념정리 】

- 기업형 지역공동체 :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주거복지사업단 등)
- 협업형 지역공동체 :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 혹은 협동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민자치회 등)
-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 :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 변화를 꾀하려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교육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각종 공익형 풀뿌리운동단체 등)

1-5. 귀하는 현재 고양시 지역공동체의 유형(사업성격)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재정 사업형 ② 풀뿌리 운동형 ③ 기업형
 ④ ‘① + ②’ ⑤ ‘① + ③’ ⑥ ‘② + ③’
 ⑦ 모두 해당

【 개념정리 】

- 재정 사업형 : 정부가 사업비를 충당하는 정부주도사업(녹색체험마을사업 등)
- 풀뿌리 운동형 : 정부가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지만 자생적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형태(자활공동체사업 등)
- 기업형 : 정부가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지만 비즈니스 방식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형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II. 현행 지역공동체의 역할수행 정도

II-1. 귀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주체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주민자치기능(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② 문화여가기능(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③ 지역복지기능(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④ 주민편익기능(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⑤ 시민교육기능(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⑥ 지역사회진흥 기능(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사업, 공동체 모임 육성 등)					
⑦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					
⑧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II-2. 현재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지원센터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② 자치공동체 자원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③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④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⑤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⑥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⑦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					

II-3. 귀하가 생각하실 때 위 문항에서 명시된 기능 외에 중간지원조직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회계처리, 사업계획 수립 등 전문서비스

II-4. 귀하는 현재 고양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조례상 기능 중 가장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지원센터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 ② 자치공동체 자원 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 ③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 ④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 ⑤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⑥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 ⑦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

Ⅲ. 제도적 개선방안

Ⅲ-1. 귀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회원확보 및 주민참여 부족 | ② 현장 활동가와 리더 부족 |
| ③ 공동체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역량 부족 | ④ 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능력 부족 |
| ⑤ 재원조달의 어려움 | ⑥ 고양시의 협조 부족 |
| ⑦ 고양시 의회의 협조 부족 | ⑧ 기타() |

Ⅲ-2.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리더·현장 활동가 발굴 | ② 마을사업 발굴 |
| ③ 주민교육 | ④ 마을활동 구체화 |
| ⑤ 사업추진 노하우 | ⑥ 추가 프로그램 발굴 |
| ⑦ 재정지원 | ⑧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등 |
| ⑨ 전문가 지원(전문인력 Pool 구축·지원) | ⑩ 리더·활동가 등에 대한 의무교육 |
| ⑪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배치 | ⑫ 기타() |

Ⅲ-3. 귀하는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 역할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정부(고양시청) | ② 고양시 의회 | ③ 일반구(구청) |
| ④ 동 행정복지센터 | 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 ⑥ 주민자치(위원회) |
| ⑦ 민간단체(NGO 등) | ⑧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 ⑨ 기타() |

III-4. 귀하는 고양시 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공간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일반구(區) 경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② 행정동(洞) 경계
- ③ 통 경계
- ④ 동네단위 경계(아파트, 상가지역 등)
- ⑤ 기타()

III-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어디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중앙 정부	광역 자치 단체	고양 시청	구청	동 행정 복지 센터	중간 지원조 직	전문기 관
① 재정지원							
② 사업화 및 세부계획 수립(컨설팅)							
③ 우수사례 공유							
④ 마을자원 및 정보 발굴과 공유							
⑤ 마을리더 및 활동가 양성							
⑥ 자문 등 전문가 지원							
⑦ 지역공동체에 대한 전문교육							

Ⅳ. 고양시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가치)

- ▣ 귀하는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비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하고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고양시의 비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고양시의 시정목표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특별시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발전도시
민선7기 고양시의 미래상	1. 한반도-동북아 허브도시 2. 남북경제 중심도시 3. 대한민국 평화도시 4. 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도시 5.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 6.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도시 7. 안전하고 건강한 행정복지도시 8. 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9. 빠르고 깨끗한 쾌적도시 10. 상생과 공존의 지속가능도시
서울특별시	마을과 자치, 모두를 위한 서울
인천광역시	사람을 품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경기도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충청북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자치공동체
아산시	자치와 협동의 마을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아산
수원시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회복
광명시	다양한 광명, 즐거운 광명, 가능한 광명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states and Activation of the Community Autonomy in Goyang City

Sunghun Jeon*, Eunji O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data to establish a mid to long term master plan through a status analysis of the local community in Goyang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First, Goyang City needs to unify its policies and organiz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ts dual policy to activate the community participation. That is, the current dual structure of participation–autonomy team and village–community team should be considered obsolete; we argue that the two teams should be integrated within the community depart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and diversify the functions of the Local Communities Support Center (LCSC) supporting the local community, and secure its autonomy in project implementation. Therefore, LCSC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a basic operation plan based on a mid to long term master plan. In addition, LCSC's project should be expanded to the essentials (locality, interaction, common bonds) and ancillary (public interest, business), strengthening (citizen autonomy) elements of the local community;

Third, the Residents' Association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of being a voluntary organization rather than representing citizens. Community activists should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recognize the Residents' Association as a partner, not as a competitor. Residents' Association and community activists pursue the common goal of revitalizing the local community; both groups should form a bond and cooperate as they share common goals and values;

Fourth, the role of a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 is to strengthen the community competencies of Residents' Association, community activists and citizens. It could be divided into passive and active roles. The passive role is to send experts to LCSC, and the active role is to take full charge of educational functions;

Finally, the mid to long term master plan should be established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role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community activists and LCSC. In addi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used to evaluate the support policy every year and reinforce the feedback mechanism so that the annual action plan and evaluation results can be linked.